발 간 등 록 번 호
11-1051000-000020-10

www.mosf.go.kr

2018

나라살림

| 예 산 개 요 |

Summary of Budget for FY2018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예산안 제안설명



기획재정부

www.mosf.go.kr

2018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18**



기획재정부

2018 나라살림 예산개요

CONTENTS



제1부 2018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제1장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 07

제2장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설명 23



제2부 2018년도 나라살림

제1장 2018년도 나라살림 종합 35

1. 재정운용 여건 37
2. 세입 규모 38
3. 지출 규모 45
4.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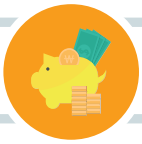
제2장 재정운용 방향 53

1. 재원배분 방향 55
2. 중점 추진과제 60
3.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99

제3장 분야별 투자계획 101

1. 보건 · 복지 · 고용 분야 103
2. 교육 분야 129
3. 문화 · 체육 · 관광 분야 136
4. R&D 분야 147
5.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분야 155
6. SOC 분야 165

7. 농림 · 수산 · 식품 분야 177
8. 환경 분야 190
9. 국방 분야 197
10. 외교 · 통일 분야 204
11.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10
12. 일반 · 지방행정 분야 222

제3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제1장 **2018년도 예산** 231
1. 2018년도 예산총칙 233
2. 일반회계 (General Account) 238
3. 특별회계규모 및 개요 (Special Accounts) 272
4. 계속비 (Multiyear Expenses) 274
5. 명시이월비 (Authorized Carryover Exprenses) 278
6. 국고채무 부담행위 (Act of Treasury to Bear Liabilities) 279

제2장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281
1. 기금요약 (Summary of Funds) 283
2. 기금운용규모 및 조성규모 (Size of Fund Management) 285
3. 기금수입 (Fund Revenues) 286
4. 기금지출 (Fund Expenditures) 290

별첨 **작성자 및 편집자 명단** 295
❖ 작성자 및 편집자 명단 297



2018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18**

1

2018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제1장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

제2장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설명

제 1 장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



SUMMARY OF BUDGET FOR **FY 2018**

2018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18**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기억을 떠올려보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을 뒤흔들었던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정확히 20년 전입니다. 그것은 어느 날 불쑥 날아든 해고통지였고, 가장의 실직이었으며, 구조조정과 실업의 공포였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가해진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그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경제적 충격만이 아니었습니다. 심리적 · 정서적 충격이 국민의 삶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건실해졌습니다. 외환보유액은 세계 9위 수준이 되었습니다. 금융과 기업의 수익성도 크게 나아졌습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들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던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힘이 컸습니다. 국민들은 대대적인 금모으기 운동으로 국가경제를 살리고, 기업을 살렸습니다. 그야말로 피눈물 나는 세월을 견디고 버텨 위기를 극복해냈고, 국가경제는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유증은 국민들의 삶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저성장과 실업이 구조화되었고,

중산층이라는 자부심이 사라졌습니다. 송두리째 흔들린 삶의 기반을 복구하는 것은 오로지 개인의 능력과 책임에 맡겨졌습니다. 작은 정부가 선(善)이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국민 개개인은 자신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했습니다.

과로는 실직의 공포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나의 실패를 내 자식이 다시 겪지 않도록 자녀교육과 입시에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선배 세대들의 좌절은 청년들로 하여금 전문직이나 공공부문 같은 안정적인 직장을 열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무한경쟁사회에서 나를 지켜주는 것은 상식과 원칙이 아니더라는 생각도 커져갔습니다. 한번 실패하면 재기할 기회조차 갖기 어려운 구조에서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는 특별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외환 위기가 바꾸어놓은 사회경제구조는 이렇듯 국민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세월호 광장과 촛불집회는 지난 세월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한꺼번에 드러낸 공론의 장이었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부정부패와 단호히 결별하고,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개인의 힘만으로는 고단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고발이었습니다.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선언이었습니다.

촛불혁명은 민주주의의 회복을 넘어 새로운 민주주의의 미래를 밝힌 이정표였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라다운 나라를 찾아나서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다 민주적인 나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는 국민이 요구한 새 정부의 책무입니다. 저는 이 책무를 다하는 것을 저의 사명으로 여깁니다. 저는 다른 욕심이 없습니다.

제가 이 책무를 절반이라도 해낼 수 있다면 저의 시대적 소명을 다한 것으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감히 바라건대 국회도,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 모두가 적어도 이 책무만큼은 공동의 책무로 여겨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은 누구나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하루 8시간 일하면 먹고사는 걱정은 없도록 정책을 혁신해야 합니다. 아프면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자신의 꿈과 재능을 펼칠 기회를 부당하게 빼앗기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을 청산해야 합니다.

저와 정부는 지난 6개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나라답게, 정의롭게 혁신하기 위한 국가혁신의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경제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삶에도, 국가에도 미래가 있습니다.

새 정부가 표방하는 '사람중심 경제'는 결코 수사가 아닙니다. 바로 이런 절박한 현실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사람중심 경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는 빠르게 우리를 빈곤으로부터 일으켜 세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놀라운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정체된 성장과 고단한 국민의 삶이 증명하듯이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사람중심 경제'는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을 위한 담대한 변화입니다. 저는 바로 지금이 변화의 적기라고 믿습니다.
20년 전 우리는 국가부도를 막고 외채를 상환하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스스로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또한 변화의 기대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려는 방향에 세계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 IMF, OECD, 다보스 포럼에서도 양극화 해소와 포용적 성장 그리고 사람중심 경제가 화두였습니다. 유엔 총회도 '사람을 중심으로(Focusing on people)'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저는 세계가 고민하는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에 대해 우리가 선구적으로 해답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국민들과 함께 '사람중심 경제'를 이뤄내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것은 물론, 세계경제에도 희망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중심 경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입니다. 일자리와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를 이끌어 성장하는 경제입니다. 혁신창업과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경제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기업이 공정한 기회와 규칙 속에서 경쟁하는 경제입니다.

저는 이것을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개의 축으로 말씀드려 왔습니다.

혁신적 도전과 성공에 대한 확신이 우리 경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고, 사람중심 경제를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와 사회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도록,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청산입니다.
국가권력기관의 개혁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선결과제입니다. 국정원은 국민의 정보

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국정원이 국내정치와 절연하고 해외와 대북 정보에만 전념하도록 개혁하겠습니다. 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요청합니다.

검찰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검찰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하늘처럼 무겁습니다.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러한 국민들의 여망을 반영한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입니다. 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권력이 국민의 기회를 빼앗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최근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우리 청년들이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공공기관이 기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구조적인 채용비리 관행을 반드시 혁파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전반적 채용비리 실태를 철저히 규명하여 부정행위자는 물론 청탁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정부는 국가기관과 공공부문, 더 나아가 사회전반의 부정과 부패, 불공정이 국민의 삶을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갈 것입니다. 더 이상 반칙과 특권이 용인되지 않는 나라로 정의롭게 혁신하겠습니다. 그 일에 국회가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한반도는 우리 국민이 살고 있고 살아갈 삶의 공간입니다. 안전해야 합니다.
평화로워야 합니다. 이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새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환경에서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당면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래로 지금까지 확고하고도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에 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첫째, 한반도 평화정착입니다.
우리가 이루려는 것은 한반도 평화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은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습니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남북이 공동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따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입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식민과 분단처럼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운명이 결정된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입니다.
제재와 압박은 북한을 바른 선택과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 정부의 원칙에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도 인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해야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제사회와도 적극 공조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상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과 헌법 앞에 선서한 대로 국민을 보호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북핵문제 앞에서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초당적인 협조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 추진하고, 민생과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8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29조원입니다.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으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예산입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정건전성 유지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11조5천억원의 지출을 줄였습니다. 5조5천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되도록 세법개정안도 제출했습니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39.6%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일자리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올해보다 2조 1천억원 증가한 19조 2천억원입니다.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예산입니다. 요즘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고용상황이 개선된다면 우리 경제는 더욱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부문이 고용창출을 선도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 집배원, 근로감독관 등 민생현장 공무원 3만 명을 늘리고,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1만 2천개 만들겠습니다.

민간부문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한명 분 임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추가채용 제도를 내년에 2만 명으로 늘리겠습니다. 고용을 늘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은 1인당 전환지원금과 세제지원이 대폭 늘어납니다. 임금을 인상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도 2배 확대됩니다.

둘째,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가계의 기초소득을 늘리고, 생계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소비나 저축에 여력이 생기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서민층의 소득증대는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기도 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현실화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청년들이 활용하도록 청년희망키움통장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고 국가 책임을 높였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치매안심센터와 요양시설 등 치매국가책임제 시설을 확충하도록 했습니다.

5세 이하 아동의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아이들 양육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노인 빈곤율은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지원 대상을 51만 4천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과 함께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일자리도 1만 6천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을 2조 9,704억원 편성했습니다.

1인 영세자영업자에게는 2년간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합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는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참전수당과 무공수당을 월 8만원씩 인상했습니다. 참전수당은 월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참전유공자 의료비 감면율도 60%에서 90%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독립유공자 후손들께는 최대 46만8천원까지 생활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과 과표 2천억원 이상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 · 중산층,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자와 대기업이 세금을 좀 더 부담하고, 그만큼 더 존경받는 세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과 벤처창업으로 새로운 성장기반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혁신성장 예산을 중점 반영했습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 융합기술 개발을 위해 총 1조 5천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간 공동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 공장 지원 등 지능정보화에 착수하겠습니다.

성장동력을 찾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혁신창업에 특히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추경을 통해 8천억원을 추가 출자한 중소기업지원펀드에 이어서 내년에는 투융자 복합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대상을 늘리겠습니다. 사내창업프로그램 지원을 새로 도입하고, 민관합동 창업지원, 사회적기업 창업지원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 · 창업으로 연결시키는 핵심기반으로 한국형 창작활동 공간을 75곳 설치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혁신도시를 대단지 혁신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넷째,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환경 · 안전 · 안보분야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나라다운 나라의 출발점입니다.

국민들의 염려가 큰 미세먼지 등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와 화물차 조기폐차를 늘리고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해 국가도 책임을 함께 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이 피해구제를 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가습기 특별구제 계정에 정부가 100억 원을 신규 출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살생물제 안전관리 예산 183억도 반영하였습니다.

먹거리 안전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되풀이되는 가축질병에 조기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했습니다.

재해와 재난에 대한 국민의 염려를 덜어드리겠습니다. 연례적 가뭄에 대비한 저수지간 수계연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버스와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방예산은 자주국방능력을 갖춘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6.9%를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방위력 개선 예산을 10.5%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병사 봉급을 병장기준 월 21만 6천원에서 40만 6천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사병 복지와 사기를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국가가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국민은 희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이유입니다.
한 사람의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방예산, 안전예산, 일자리예산, 아동수당, 창업예산 등이 씨줄 날줄로 엮여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이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이번 예산은 당면한 우리 경제 · 사회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에서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부분은 '국민참여예산제'의 시범적 도입입니다. 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500억원의 범위 안에서 여성안심 임대주택 지원사업 356억원, 재택 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20억원 등 6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재정정보 공개를 더욱 확대하고 국민참여예산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예산사업에는 지난 선거에서 야당이 함께 제안한 공통 공약사업도 많습니다. 청년대책, 비정규직 문제,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 확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입니다.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와 지난 대선의 공통공약, 안보 문제에 대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국민들에게 성실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나라답고 정의로운 국가를 돌려드리겠다고 대답해야 합니다.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그동안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짊어져야 했던 국민들께 이제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나서야 합니다.

안보와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의 운영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입니다.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개헌은 내용에 있어서도,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어야 합니다.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저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들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기를 희망합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국가의 틀이 완성되길 기대하며 정부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20일, 신고리 5 · 6호기 공론화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시민참여단은

반대 의견을 경청하고 배려하며 통합과 상생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정치의 변화를 주도해 왔습니다. 지금도 국민들은 정치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정치를 요구하며 스스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이 국민의 의지를 받들어 실천할 때입니다. 우리 정치가 뒤처지지 않고 협력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은 국가적 과제입니다.
오늘은 그리스에서 출발한 성화가 도착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은 한반도의 평화를 다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국회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식과 정의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나라,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가 미덕이 되는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위해 국회가 함께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의 희망이 반드시 국회에서 피어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1일

대통령 문 재 인

제 2 장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설명



SUMMARY OF BUDGET FOR **FY 2018**

2018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18**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설명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그간의 노력과 최근 경제 상황

새 정부가 출범한 지난 5월 이후 7개월간 우리 경제에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급격한 정치적 변화에 따른 갈등을 수습하면서도 일자리 부족과 양극화 등으로 인한 체감경기 둔화를 극복하고 여러 대외 불확실성도 해소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였고 이번 정부의 일자리 정책방향을 담은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10.18일) 했습니다.

7월에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고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된 '일자리 ·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세 축으로 하는 "사람 중심 경제"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과도한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8월 발표했고,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추석 민생안정대책」,「가계부채 종합대책」등 정책도 마련했습니다. 지난달에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는 등 혁신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의 통화스왑 연장, 신용평가등급 유지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도 완화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 등에 힘입어 3분기 우리 경제는 전기 대비 1.5%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적기 집행을 통해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할 수 있게끔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심의 · 의결해주신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이러한 성장의 모멘텀을 강화하고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질 높은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2018년도 나라살림의 전체 모습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예산은 정책을 숫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당면한 우리 경제의 현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입니다.

2018년 총지출은 당면한 경제 현안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7.1% 증가한 429조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성과를 반영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습니다.

세입측면에서는 최근 세입여건 변화에 더하여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세법개정을 추진함으로써 국세수입 증가율이 10.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출구조조정과 세입확보 노력에 따라 내년도 GDP 대비 국가채무는 39.6%로, 그리고 GDP 대비 재정수지는 마이너스 1.6%로 올해 대비 각각 0.1%p 개선되는 등 재정건전성도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의 중점 (1)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첫째, 일자리 예산을 12.4% 확대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청년실업률이 9월 기준 9.2%로 8개월 연속 9%를 넘어서는 현실을 감안하여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가장 역점을 두었습니다.

중소기업 구인난과 청년 구직난을 동시에 개선하기 위해 성장유망업종 등의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할 경우 한 명분 임금을 지원해주는 중소기업 추가 채용 지원을 금년 3천 명에서 2만 명으로 늘렸습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2년간 근무시 1,600만원 규모의 자산을 형성해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6만 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청년들에게 3개월간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도 21만 3천 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현장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공공부문이 고용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찰 · 소방 · 교사 등 국민생활 · 안전 분야 현장인력을 중심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공무원을 3만 명 충원하겠습니다.
50~60대 신중년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재취업 준비를 위한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2만 5천 명까지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을 위해 새일센터 5개소와 취업 설계사 130명을 추가하겠습니다.

투자의 중점 (2) 국민의 복지 증진

둘째, 복지분야 예산을 올해 129조 5천억 원에서 내년에 146조 2천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서민들의 생활비를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를 4.8%, 교육급여를 36.1% 인상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 10월부터 폐지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하겠습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 양육부담이 줄어들도록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내년 7월부터 도입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월 20만 원 수준으로 지급중인 기초연금을 내년 4월부터는 25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노인일자리 지원 단가를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올려 51만 4천명의 어르신께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연금과 연계하여 장애인연금도 25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의료비, 주거비 등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국고에서 건강보험에 지원 하는 예산을 4천억 원 늘리고,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재난적 의료비를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겠습니다.
17만 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13조 1천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에너지바우처는 9만 5천 원에서 10만 2천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내년도 보훈예산을 10.9% 증액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과 보상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매년 월 1~2만 원 인상하던 참전 · 무공수당을 월 8만 원씩 대폭 인상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생활지원금을 최대 46만 8천 원까지 신규 지원하겠습니다.

투자의 중점 (3) 혁신성장

셋째,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인적자본 투자를 확대하는 등 혁신성장의 동력을 확충하는데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해 혁신생태계 구축, 혁신거점 조성, 혁신자본 · 안전망 확충, 규제 재설계라는 4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혁신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 융합기술 개발과 테스트베드 구축에 1조 5천억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자하고, 스마트공장도 2,100개를 추가로 보급하겠습니다.

혁신성장거점 조성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사업화와 창업으로 연결하는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를 75개 신규 구축하고, 지역의 혁신도시를 혁신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혁신자본과 안전망도 적극 확충하겠습니다.
투융자복합금융을 1,8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사내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100억 원 신규 반영 하였습니다. 재창업자 재기지원사업도 150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 분야의 안전성, 시장성을 검증하고 규제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출산 극복, 교육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인적자본을 육성하겠습니다.

8월 출생아수가 3만 200명으로 전년보다 11% 감소하고 올해 출생아가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 이하로 예측되는 등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저성장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저출산 완화를 위해 결혼, 출산, 육아를 패키지로 지원하겠습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을 3만 호까지 확대 · 공급하고, 주택 임대 · 구입시 우대 대출상품도 신설하겠습니다.

분만산부인과와 고위험 산모 · 신생아 치료센터를 확충하고 국공립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각각 450개소, 150개소씩 대폭 늘리겠습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의 희망사다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취약 계층 영재에 대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학생 해외연수사업과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을 신설하겠습니다.

투자의 중점 (4) 국민안전과 안보

넷째, 국방과 안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지속되는 북한의 핵 도발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6.9% 확대하겠습니다.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 사업비를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10.5% 증가시켜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등 첨단전력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 사기 진작을 위해 병봉급을 병장 기준으로 월 21만 6천 원에서 40만 6천 원으로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가뭄, 미세먼지 등 환경 위해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계속 위협하고 AI, 구제역 등 가축방역문제도 매년 반복됩니다.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요인 해소를 위해 노후경유차와 화물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을 12만 대 수준으로 늘리고 전기차에 대한 지원도 2만 대로 확대하겠습니다.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저수지간 수계연결사업을 실시하고, 버스나 화물차에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는 등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고 가축질병에 조기 대응하기 위해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축사시설을 현대화하여 먹거리 안전에 대한 투자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도 강화하겠습니다. 낙후된 구도심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을 올해보다 14.4% 증가한 95조 6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 말씀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은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으로 우리 국가와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정책에 대한 청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주요 현안 과제를 해결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투자를 영점에서부터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재조정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급과 수요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성장전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단지 외형적 성장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성장이어야 합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균형 잡힌 성장의 두 축이 될 것이고, 공정경제가 그 토대를 받쳐줄 것입니다.
성장이 국민의 소득을 늘리고, 소득이 다시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고민을 담았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되어 정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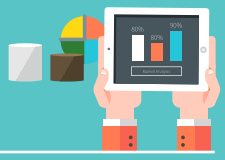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6일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 동 연

2

2018년도 나라살림



제1장 2018년도 나라살림 종합

제2장 재정운용 방향

제3장 분야별 투자계획

제 1 장

2018년도 나라살림 종합

01 재정운용 여건

02 세입 규모

03 지출 규모

04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2018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18**



재정운용 여건

01

올해 세계경제는 선진국 · 신흥국 동반 회복세 등으로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고용여건 호조 및 세제 개편 등에 힘입어 민간소비 · 투자 등 내수 중심의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유로존도 고용시장 개선, 심리 호조 등으로 소비 · 투자 등이 증가하며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세계 교역 회복, 도쿄 올림픽 대비 인프라 확충 등에 힘입어 수출비 · 투자 중심의 완만한 성장이 예상되고 중국은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득 · 심리 등 소비 여건이 개선되며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여타 신흥국은 원자재 가격 안정,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브라질 · 인도 등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 전망된다.

[표 1-1]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와 전망

(단위 : 연간 %)

구 분	세계	선진국	미국	유로	일본	신흥국	중국	브라질	러시아
2017년	3.6	2.2	2.2	2.1	1.5	4.6	6.8	0.7	1.8
2018년	3.7	2.0	2.3	1.9	0.7	4.9	6.5	1.5	1.6

자료: IMF(2017. 10.)

우리경제는 회복세가 이어지며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는 설비투자 증가폭 축소 등으로 전년보다 기여도는 감소하나, 정책효과 등에 따른 소비 개선이 보완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금액 기준으로 증가폭이 축소되나, 세계교역량 증가세가 이어지며 물량 중심의 회복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2] 2018년 경제 전망

(단위 : 연간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제성장률(%)	2.8	3.2	3.0
소비자물가(%)	1.0	1.9	1.7

자료: 2018년 경제전망(2017. 12.)

02 세입 규모

2-1 총수입 : 2017년 예산 대비 7.9% 증가한 447.2원

예산과 기금을 합한 나라전체 총수입은 2017년 예산보다 7.9% 증가한 447.2조원으로 전망된다.

예산수입은 2017년 예산 대비 9.7% 증가한 294.8조원 수준이다. 예산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2017년 본예산 대비 10.7%, 추경예산 대비 6.8% 증가한 268.1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수입이 271.7조원, 특별회계 수입이 23.1조원으로 전망된다.

기금수입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입 증가에 따라 2017년 대비 4.7% 증가한 152.4조원으로 예상된다.

[표 2-1] 2018년 총수입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	2017년		2018년 (C)	증감률	
	본예산(A)	추경(B)		C/A	C/B
총 수 입	414.3	423.1	447.2	7.9	5.7
■ 예 산	268.7	277.5	294.8	9.7	6.2
(국 세)	(242.3)	(251.1)	(268.1)	(10.7)	(6.8)
• 일반회계	245.5	254.3	271.7	10.7	6.8
• 특별회계	23.2	23.2	23.1	△0.4	△0.4
■ 기 금	145.6	145.6	152.4	4.7	4.7
(사회보장성기금)[1]	81.8	81.8	89.8	9.8	9.8

1)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참고 | 총수입이란 ?

재정수입은 회계 · 기금별로 독립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회계 · 기금을 모두 합한 총수입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중앙재정은 1개의 일반회계, 5개의 기업특별회계, 14개의 기타특별회계 및 67개 기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회계와 기금의 수입을 단순합산할 경우 회계간 전출입 금액 등을 중복계상 하여 실제의 재정수입 전체보다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총수입은 중앙 재정의 실제 수입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 · 기금간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고 산출하는 것으로 사실상 IMF가 국제적 비교를 위한 공통 기준으로 제시하는 통합재정 작성방식과 거의 같은 개념이다.

☞ 총수입 = 일반회계수입 + 특별회계수입 + 기금수입 – 내부거래 – 보전거래

여러 기업으로 구성된 그룹이 그룹전체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연결재무제표를 만드는 것과 유사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즉, 각각의 회계, 기금을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로 본다면 총수입은 그룹 전체의 연결재무제표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는 이유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수입을 단순 합계할 경우 정부 내부거래를 중복 계상하여 실제 수입보다 과대 계상된다. 예를 들면, 100원의 조세수입을 일반회계에 계상하고 이를 기금으로 전출하는 경우, 일반회계 세입은 100원, 기금 수입도 100원이지만 총수입은 내부거래(100원)을 제외한 100원만 계상하여야 실질적인 정부 수입을 정확히 나타낼 수가 있다.

또한 국채발행 수입 · 차입금 등도 총수입 계산시 제외된다. 국채발행 수입 등은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차(재정수지)를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정부수입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정부전체 수입규모를 종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총수입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고 따라서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수입은 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것이다. 제3부에서는 회계 · 기금별로 독립된 규모를 설명하기 위해 내부거래 등을 포함한 총계 개념으로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수입을 나타내고 있다.

2-2 예산 수입 : 2017년 예산 대비 9.7% 증가한 294.8조원

예산 수입은 회계별로 일반회계 세입, 특별회계 세입으로 나뉘고, 수입 원천별로는 소득세 · 법인세 등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국세수입과 벌금 · 부담금 등 세외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일반회계 세입 : 2017년 예산 대비 10.7% 증가한 271.7조원

일반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국세수입과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구성된다.
2018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2017년 본예산(235.1조원) 대비 10.9%, 추경예산(244.0조원) 대비 6.9% 증가한 260.8조원으로 전망되며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2017년 예산(10.3조원) 대비 5.4% 증가한 10.9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2018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2017년 본예산 대비 10.9%, 추경예산 대비 6.9% 증가한 260.8조원으로 전망된다. 국세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국세 수입은 2017년 본예산 대비 11.6%, 추경예산 대비 7.0% 증가한 228.0조원으로 전망된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정부보유주식 매각수입과 그 외 경상이전수입(벌금 · 가산금 등) 및 재산수입(출자배당수입 등) 등 경상세외수입으로 분류할 수 있다. 2018년 정부 보유주식 매각수입은 2017년 예산 대비 43억원 증가한 686억원으로 예상된다. 경상세외수입은 2017년 예산 대비 5.4% 증가한 10.8조원으로 예상된다.

[표 2-2] 2018년 일반회계 세입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	2017년		2018년 (C)	증감률	
	본예산(A)	추경(B)		C/A	C/B
합 계(Ⅰ + Ⅱ)	245.5	254.3	271.7	10.7	6.8
■ 국세(Ⅰ)	235.1	244.0	260.8	10.9	6.9
• 내국세[1]	204.3	213.1	228.0	11.6	7.0
• 관세	9.0	9.0	9.4	4.8	4.8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15.4	15.4	16.4	6.6	6.6
• 교육세	5.1	5.1	5.2	3.4	3.4
• 종합부동산세	1.4	1.4	1.8	25.8	25.8
■ 세외수입(Ⅱ)	10.3	10.3	10.9	5.4	5.4
• 주식매각수입	0.06	0.06	0.07	6.7	6.7
• 경상세외수입	10.3	10.3	10.8	5.4	5.4

1) 소득세 · 법인세 · 상속증여세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증권거래세 · 인지세 등

▣ 특별회계 세입 : 2017년 예산 대비 0.4% 감소한 23.1조원

2018년 특별회계 세입은 2017년 예산(23.2조원) 대비 0.4% 감소한 23.1조원으로 전망된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세 · 농어촌특별세 등 국세와 융자회수 · 부담금 등 자체세입으로 구성된다. 2018년 특별회계 세입 중 국세수입은 2017년 예산 대비 2.8% 증가한 7.3조원으로 전망되며, 자체세입은 2017년 예산 대비 1.8% 감소한 15.8조원으로 전망된다.

[표 2-3] 2018년 특별회계 세입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	2017년		2018년 (C)	증감률	
	본예산(A)	추경(B)		C/A	C/B
합 계(Ⅰ + Ⅱ)	23.2	23.2	23.1	△0.4	△0.4
• 국세(Ⅰ)[1]	7.1	7.1	7.3	2.8	2.8
• 자체세입(Ⅱ)[2]	16.1	16.1	15.8	△1.8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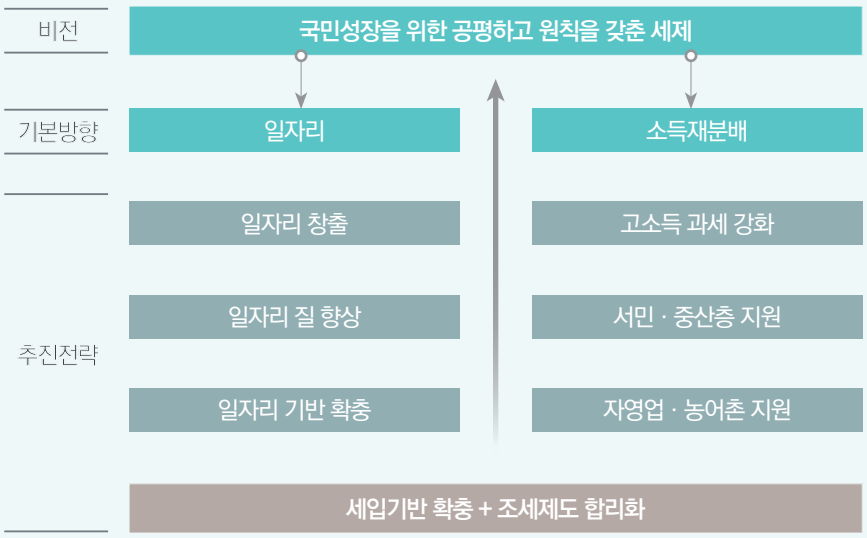
1) 주세 · 농어촌특별세, 2) 각종 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 등), 융자회수, 수수료 등

참고 | 2017년 세법개정 주요 내용

❖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

-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
-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서민 · 중산층 세부담은 축소
-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 추진

  ⇒ 일자리 확대 · 양극화 해소를 통해 「지속적인 국민성장」 달성





2-3 기금 수입 : 2017년 대비 4.7% 증가한 152.4조원

2018년 기금 수입은 2017년 대비 4.7% 증가한 152.4조원으로 전망된다. 이중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은 11.7% 증가한 69.3조원, 융자원금 회수는 △2.5% 감소한 25.6조원, 이자 수입 등 기타수입은 0.3% 증가한 57.5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금 수입은 크게 사회보장기여금, 융자원금 회수, 기타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민 · 사학연금의 연금기여금과 고용·산재보험 보험료로 구성되는 사회보장 기여금은 2017년 대비 11.7% 증가한 69.3조원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 등에 융자한 자금을 만기에 회수하는 융자원금 회수규모는 2017년 대비 2.5% 감소한 25.6조원으로 예상되며,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은 자산운용 규모 증가 등으로 인해 2017년 대비 0.3% 증가한 57.5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표 2-4] 2018년 기금수입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합 계(Ⅰ + Ⅱ + Ⅲ)	145.6	152.4	4.7
• 사회보장기여금(Ⅰ)	62.0	69.3	11.7
• 융자원금 회수(Ⅱ)	26.3	25.6	△2.5
• 이자수입 등 기타(Ⅲ)	57.3	57.5	0.3

기금 유형별로는 사업성 기금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만기도래 융자원금회수 감소,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법정부담금 감소 등으로 2017년 대비 △3.4% 감소한 41.7조원, 사회보험성 기금은 국민연금기금 등의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증가로 8.3% 증가한 105.6조원, 계정성 기금은 복권기금의 복권판매수입 증가 등으로 3.5% 증가한 5.1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표 2-5] 2018년 기금유형별 수입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합 계(58개)	145.6	152.4	4.7
• 사업성 기금(48개)	43.1	41.7	△3.4
• 사회보험성 기금(6개)[1]	97.5	105.6	8.3
• 계정성 기금(4개)[2]	4.9	5.1	3.5

1)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 예방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2) 양곡증권정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복권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참고로 국회에서 확정된 총 67개 기금운용계획상의 기금수입(기금운용규모)은 594.9조원이나 통합재정 관점의 총수입은 152.4조원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에는 회계 · 기금 등 정부 내부간 거래, 민간차입금, 이미 기금으로 전입되어 여유자금으로 운용되던 것을 회수하는 여유자금회수 등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해야 한다.

둘째, 금융성 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순수한 재정활동이라기 보다는 금융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통합재정 관점에서의 총수입에서는 제외한다.

따라서 예산과 기금을 합한 정부전체 총수입을 산정할 때에는 위와 같은 항목들을 제외하고, 58개 기금의 자체수입만을 총수입으로 본다는 것이다.

지출 규모

03

3-1 총지출 규모 : 2017년 예산 대비 7.1% 증가한 428.8조원

2018년도 총지출은 428.8조원으로 2017년 예산 대비 7.1% 증가한 규모이다.

2018년 총지출은 2017년 예산 대비 7.1% 증가한 428.8조원이다. 새정부 정책과제 이행과 서민 일자리 · 복지 확대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하였다.

예산지출은 296.2조원으로 2017년 예산 대비 7.9% 증가하였다. 이중 일반회계는 10.8% 증가한 248.8조원, 특별회계는 5.5% 감소한 47.5조원이다.

기금지출은 사회보험성기금 급여지출 등이 증가하여 2017년 계획 대비 5.3% 증가한 132.6조원 수준이다.

[표 3-1] 2018년 총지출 규모

(단위 : 조원, %)

구 분	2017년		2018년 (C)	증감률	
	본예산(A)	추경(B)		C/A	C/B
총 지 출	400.5	410.1	428.8	7.1	4.6
■ 예 산	274.7	280.3	296.2	7.9	5.7
• 일반회계	224.4	229.8	248.8	10.8	8.3
• 특별회계	50.2	50.6	47.5	△5.5	△6.1
■ 기 금	125.9	129.8	132.6	5.3	2.2

참고 | 총지출 규모란 ?

정부의 재정규모는 포괄범위 및 회계기준에 따라 ① 통합재정규모(IMF 기준), ② 총지출 규모, ③ 일반정부 재정규모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통합재정규모는 예산 · 기금 등 정부부문 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을 차감한 순수한 재정활동의 규모를 말한다.

☞ 통합재정규모 = 경상지출 + 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 – 융자수입)

총지출 규모는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규모를 뜻하며, 2005년부터 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우리 정부의 재정규모 통계로 사용하고 있다.

총지출 개념은 국제적으로 재정규모를 분석하기 위한 보조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민의 입장에서 재정을 이해하기 쉽다는 점에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정부가 국민에 대해 재정적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을 여과 없이 전달할 수 있는 개념인 것이다.

총지출 규모는 통합재정규모가 순수한 재정활동 규모를 측정하기 위하여 융자거래와 기업특별회계를 순계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과 달리 총계 개념으로 파악하므로 통합재정규모보다는 항상 규모가 크다.

일반정부 재정규모는 중앙정부 · 지방정부 및 비영리공공기관의 모든 재정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각국은 국민계정 작성기준(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따라 작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OECD에서 각국의 공식적인 통계를 취합 ·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존에 한국은행이 1993 SNA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일반정부 통계를 작성해 왔으나, 재정통계 개편안을 마련(2011.9월 국무회의)하여 정부의 국제기구 제출용 재정통계와 한국은행 통계기준을 일치시켰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 포괄범위는 일반정부가 기준이 되며, 제도단위 여부*와 시장성 기준**등에 따라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관리기금과 비영리공공기관이 포함된다.

* 제도단위: 자율적인 의사결정체계 및 독립적 자금운용계정 보유
** 원가보상률(판매액÷생산원가)이 50% 이하이면 일반정부, 초과하면 공기업으로 분류

3-2 예산지출 규모 : 2017년 예산 대비 4.9% 증가한 296.2조원

2018년 예산지출 규모는 2017년 예산 대비 7.9% 증가한 296.2조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0.8% 증가한 248.8조원, 특별회계는 5.5% 감소한 47.5조원이다.

일반회계는 일자리 창출 및 소득주도·혁신 성장 등을 뒷받침하는데 중점 투자하여 2017년 예산 대비 10.8.% 증가한 248.8조원 규모이다.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 14개와 기업특별회계 5개의 총 19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 예산 대비 5.5% 감소한 47.5조원이다.

예산의 경우 총지출 개념과는 별도로 예산총계에서 예산회계 내부간 및 계정간 거래를 제외한 예산순계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산순계의 2017년 예산 대비 지출 증가율은 9.1%이다.

[표 3-2] 2018년 예산지출 규모

(단위 : 조원, %)

구 분	2017년		2018년 (C)	증감률	
	본예산(A)	추경(B)		C/A	C/B
■ 예산지출	274.7	280.3	296.2	7.9	5.7
• 일반회계	224.4	229.8	248.8	10.8	8.3
• 특별회계	50.2	50.6	47.5	△5.5	△6.1
■ 예산순계	303.1	312.3	330.8	9.1	5.9

3-3 기금지출 규모 : 2017년 대비 5.3% 증가한 132.6조원

2018년 기금지출 규모는 2017년 대비 5.3% 증가한 132.6조원으로 이 중 사회보장지출은 8.0% 증가한 42.9조원이다.

기금 사업비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창업기업지원융자 확대 등으로 2017년 대비 6.2% 증가한 116.6조원이고, 이 중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성 기금사업비는 수급인원 증가에 따른 급여지출 확대 등으로 2017년 보다 7.5% 증가한 63.5조원이다.

한편, 기금운영비는 2017년 대비 4.1% 증가한 1.7조원이고, 차입금이자상환은 2017년 대비 △1.0% 감소한 14.3조원이다.

[표 3-3] 2018년 기금지출 규모

(단위 : 조원, %)

구 분	2017년		2018년 (C)	증감률	
	당초(A)	수정(B)		C/A	C/B
합 계(58개) (사회보장지출[1])	125.9 (39.7)	131.7 (39.9)	132.6 (42.9)	5.3 (8.0)	0.7 (7.4)
■ 사업비	109.8	115.6	116.6	6.2	0.9
• 사업성 기금(48개)	47.6	53.1	49.7	4.4	△6.4
• 사회보험성 기금(6개)[2]	59.1	59.3	63.5	7.5	7.2
• 계정성 기금(4개)[3]	3.1	3.2	3.4	8.0	4.3
■ 기금운영비	1.6	1.6	1.7	4.1	4.1
■ 차입금이자상환	14.5	14.5	14.3	△1.0	△1.0

1)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지출
2)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 예방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3) 양곡증권정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복권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04

4-1 재정수지

일반회계 ·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2018년 통합재정수지는 18.3조원의 흑자가 예상되며,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8.5조원 적자로 전망된다.

2018년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1.0% 수준(18.3조원) 흑자이나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1.6%(△28.5조원) 적자로 예상된다. 이는 새 정부 정책과제의 차질없는 이행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확장적인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는 등 강력한 양적 · 질적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2% 내외에서 관리될 예정이다.

[표 4-1] 재정수지

(단위 : 조원, %)

구 분	2017년		2018년 (C)	증감	
	본예산(A)	추경(B)		(C-A)	(C-B)
■ 통합재정수지(Ⅰ)	13.7	13.0	18.3	4.6	5.4
(GDP 대비, %, %p)	(0.8)	(0.8)	(1.0)	(0.2)	(0.2)
• 사회보장성기금수지(Ⅱ)	42.1	41.9	46.9	4.8	5.0
■ 관리재정수지(Ⅰ-Ⅱ)	△28.3	△28.9	△28.5	△0.2	0.4
(GDP 대비, %, %p)	(△1.7)	(△1.7)	(△1.6)	(0.1)	(0.1)

참고 | 관리재정수지란 ?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 중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재정수지를 말한다.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과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

즉,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는 장래 연금급여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고 있으므로 재정의 건전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등이 시행 초기단계로 구조적으로 대규모 흑자를 시현하고 있으며, 실제 국가채무 증가와의 연관성 등을 감안할 때 관리재정수지가 재정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유용성이 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2년부터 통합재정수지와 함께 관리재정수지를 발표하고 있다.

4-2 국가채무

2018년 국가채무는 708.2조원(GDP 대비 39.5%) 으로 추정된다. 이는 주로 일반회계 국채 증가(28.8조원) 등에 기인한다.

2018년 예산의 국가채무 전망치 708.2조원 중 향후 국민들의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58.1% 수준인 411.6조원이며, 나머지 41.9% 수준인 296.6조원은 채무에 상응하는 외화자산, 융자채권 등 자산을 보유한 금융성 채무이다.

적자성 채무는 향후 조세 등 실질적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므로 총지출 관리 등을 통해 발행규모 및 상환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증가 속도를 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금융성 채무는 외평기금과 주택기금의 채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외평기금 채무는 외환시장안정용 국채로서 현재 외화표시 외평채와 국고채로 조성된 자금에 의한 채무로 구분되며, 한국은행 예치금, 외화위탁자산 등 대응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순수하게 국민부담으로 돌아가는 적자성 채무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국민주택기금 채무는 서민주거 안정용 국민주택채를 발행하고, 대출금 형태의 대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 금융성채무로 구분된다. 정부는 금융성채무에 대해서도 재정의 추가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채무 상환이 가능하도록 대응자산 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표 4-2] 국가채무 *

(단위 : 조원, %)

구 분	2016년 결산	2017년 본예산	2018년 본예산
■ 국가채무	626.9	682.4	708.2
(GDP대비, %)	(38.3)	(40.4)	(39.5)
① 적자성 채무	359.9	397.3	411.6
• 일반회계 적자국채	271.3	308.4	327.2
(순증)	(32.8)	(28.7)	(28.8)
• 공적자금 상환기금	48.5	48.4	46.7
• 지방정부순채무	35.0	35.7	33.1
② 금융성 채무	267.0	285.0	296.6
• 외평기금 · 채권	209.8	223.5	235.5
• 주택기금 · 채권	64.0	68.5	74.1
• 공자기금 융자계정	1.6	0.6	0.6

* 2017년, 2018년 본예산 국회 확정 기준

2018년 예산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9.5%로 향후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에 따라 2021년까지 40%대 초반 수준에서 안정화 될 전망이다.

제 2 장

재정운용 방향

01 재원배분 방향

02 중점 추진과제

03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2018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18**



재원배분 방향 01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집행 등에 힘입어 3년 만에 3%대 성장을 복원하는 등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특정부문 중심의 성장으로 부문간 격차가 지속되고 있고, 분배악화 및 고용부진 등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취약한 것도 현실이다.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어 지난 2017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황에서, 우리경제의 지속적 성장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재정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우리 경제 현안 해결을 위해 2018년 나라살림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 · 확장적으로 편성되었다.

구체적인 내용면에서 금년 예산은 '사람중심의 따뜻한 재정운영'을 실현하기 위해 (1)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2) 소득주도 성장 지원, (3) 혁신성장 동력 확충, (4) 국민이 안전한 나라, (5) 인적자원 개발의 5가지 방향에 초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1-1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격차 완화 등 일자리 전반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적 투자 및 지원을 확대한다.
민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재학 – 구직 – 재직」 단계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채용하면 1명분 임금을 연간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추가 채용 지원제도를 1.5만명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장기 근속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을 통해 5만명을

지원한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충하는 한편, 비정규직 고용안정에도 힘쓴다. 국민생활 안전분야를 중심으로 중앙직 공무원을 1.2만명 추가 충원하고, 보육 · 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2.5만개를 창출한다. 이와 함께 기간제의 무기계약직 전환, 청소 · 경비 · 시설관리 용역근로자 직접고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년 최저임금 증가율(전년 대비 16.4%)에 맞추어 아이돌보미 수당 등 인건비 · 고용부담금 인상 등을 지원한다. 일 · 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시 지급하는 급여 지원을 통상임금의 80%로 인상(기존 60%)하고, 아빠 육아휴직 급여도 첫 아이든 둘째 아이든 상관없이 모두 20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3개월간 30만원씩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등을 통해 실업안전망을 강화하고, 노사가 상생하는 일자리 모델을 발굴 · 확산하여 한국형 고용안정 · 유연모델을 정립하고자 한다.

1-2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서민들의 생활비를 경감하는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소득수준 하위 90% 이하의 만 0~5세 아동양육가구에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월 25만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 또한 확대한다. 노인일자리는 7.7만명, 자활사업은 1,500명 확대하고, 청년희망 키움통장을 신규 도입하여 '일하는 복지'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참전유공자들에게 지급하는 무공 · 참전수당을 기존에 비해 월 8만원 인상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생계곤란 가구의 주택을 매입한 후 이를 재임대하는 등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 하고, 60개월 이상의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등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에도 힘쓴다. 또한 전국 252개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치매요양시설을 확충(192개소)하여 치매국가책임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한다.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도모한다. 또한 전국에 신규 도시재생 지역을 대폭 확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낙후된 도시기능을 재활성화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투자한다.

1-3 혁신성장 동력 확충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혁신 생태계 지원 및 혁신 성장 거점 구축 등 혁신성장 동력 확충에 대한 재정지원을 최대한 확대한다.

우선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개발 투자를 1.5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특히 국내외 기술격차가 큰 AI, ICBM, 지능형 센서 · 반도체 등 핵심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융합기술 개발을 위해 의료 · 자율자동차에 대한 테스트베드 및 공용플랫폼 구축을 지원한다.
2,100개의 스마트 공장을 추가 보급하고, 스마트공장 구축 · 고도화 등을 위한 융자를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제조업 생산 프로세스의 혁신도 함께 뒷받침한다.

혁신성장의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참여 · 혁신형 창업공간인 '메이커스페이스를 설치 · 확대하여 메이커 전문 인력양성과 창의적 문화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혁신 인적자본의 확충을 위해 과목간 융합형 교원 연수를 1,000명으로 확대(기존 800명)하고, 학교밖 SW 교실도 기존 300개에서 600개로 2배 확대하는 등 혁신형 인재 양성에 힘쓴다.

이와 함께 각종 정보가 유용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정보공유 기반을 마련하고, 사람 정보 · 공간의 연결을 가로 막는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전면 개선하는 데에도 투자한다.
이를 위해 국가가 보유한 데이터를 민간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융 · 복합 데이터를 생성하여 환자 중심의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보공유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1-4 국민이 안전한 나라

국방비를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전년대비 7.0%로 대폭 확대한다. 북핵 위협 등에 대비하여 Kill-Chain, KAMD, KMPR의 3축 체계 조기구축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스텔스기(F-35A)의 차질 없는 인수를 지원한다. 아울러 병 봉급 2배 인상(병장기준, 21.6만원 → 40.6만원)과 함께 급식비 단가를 끼니당 7,855원으로 인상하는 등 군 장병의 복지와 사기 향상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투자도 지속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화물차 조기폐차 지원 수를 2배 수준인 12만대로 확대하고, 건설기계 및 대형 화물차의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또한, 대기오염 국가측정망을 27개를 확충하고,종합대기측정소 및 집중 측정소를 신규 운영하여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해 친환경 축산농가에 대해 정기적으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 하고 항생제 검사를 확대하는 등 농산물 안정성 조사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축사시설을 현대화하여 가축질병의 주요 원인이 되는 밀집 · 밀식사육 환경을 개선한다.
달걀 등 가금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가금산물 이력제 도입 기반을 구축하고 계란 GP 시설 4개소 구축도 지원한다.

재난 ·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북부 수계를 연결하는 등 가뭄 상습피해지역에 대한 항구적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버스와 화물차 등에 차로 이탈경고장치 등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새로 지원하여 졸음운전을 예방하고 대형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1-5 인적자원 개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 · 보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통근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3만호를 확대 공급하고, 신혼부부 전용 구입 ·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국공립 450개소, 공공형 150개소 어린이집 공급을 통해 양질의 공보육 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교육이 희망사다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전액 국고 지원(2.1조)하여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한다.
영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非대상자 등에 대한 재직자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등 평생 · 직업 교육도 적극 지원한다.

고등교육의 경우 대학교 반값 등록금 수혜대상을 기존 3분위에서 4분위로 확대하는 한편, 해외대학 진학을 지원하는 드림장학금 지급 등 저소득 예비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해외유학 · 연수기회도 대폭 늘린다. 또한, 국립대별 강점 분야를 지원하는 등 국립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발전 허브로 육성하는데 800억원을 투자한다.

중점 추진과제

02

1.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1–1. 민간 일자리 창출
1–2. 공공 일자리 확대
1–3. 일자리 질 제고

2. 소득주도 성장기반 마련

2–1. 저소득층 · 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
2–2. 서민 생활비 경감
2–3. 소상공인 지원
2–4. 지역 균형 발전

3. 혁신성장 동력 확충

3–1. 제조업 · 서비스업을 혁신 생태계로 개편
3–2. 혁신성장 거점 구축
3–3. 사람 · 정보 · 공간의 연결을 가로막는 규제를 전면 개선
3–4. 혁신자본 공급 확대 및 혁신위험 분담

4. 국민이 안전한 나라

4–1. 자주국방 역량 강화
4–2.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 투자
4–3. 평화통일 기반 구축

5. 인적자원 개발

5–1. 저출산 극복 지원
5–2. 교육의 희망사다리 마련
5–3. 고등교육 질 제고

1.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1-1 민간일자리 창출

1) 청년(재학 → 취업 → 근속) 패키지 지원

▶ 재학단계

◉ 일학습 병행제 확대

기업 · 산업계가 현장에 맞는 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일학습 병행제를 통해 청년층이 휴학이나 사교육비에 투자하는 등 불필요한 스펙쌓기 부담을 줄여주고 노동시장의 진입을 지원한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제훈련 시스템이 우리사회에 안정 적으로 정착 ·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학습 병행제 신규 참여기업 수를 3,000개 확대한다. (2018년 누적 12,000개)

▶ 취업단계

◉ 대학일자리센터 확대

대학 취업지원 역량 강화를 통한 청년의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청년특화 통합 서비스 전달 체계인 대학일자리센터로 일원화하고, 대학 규모 · 특성에 따른 맞춤 지원 및 실효성 있는 예산 활용을 위해 대학일자리센터를 대형(6억) · 소형(2억)으로 사업을 체계화하여 단계적으로 확대(2017년 70개소, 대형60+소형10개소/180억원 → 2018년 100개소, 대형60+소형40개소/220억원)한다.

◉ 중소기업 추가채용 지원

어려운 고용여건 등을 감안하여,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한 명의 임금을 연간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을 적극 확대(2017년 48억원 → 2018년 1,930억원)한다.

◉ 해외취업지원

해외취업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현지 인프라(K-Move센터, 2018년 17개)를 활용한 구인처 발굴, 글로벌 취업상담회 등 양질의 해외 일자리 개척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월드잡+를 해외취업 · 인턴 · 봉사 · 창업 지원신청 일원화, 워크넷과 정보연계, 경력 시스템 구축 등으로 허브화하여 체계적인 참여자 관리와 전 · 후 경력관리를 지원한다.

▶ 재직단계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확대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청년 · 기업 · 정부가 함께하여 대 – 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 및 2년간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자산형성 적립금을 확대(2017년 1,200만원 → 2017.7월 추경부터 1,600만원)한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도 취업성공패키지 등 특정 프로그램 참여자에서 중소기업 청년 일반으로 확대된다.

2) 신중년 고용서비스 강화로 재취업 촉진

◉ 생애경력 설계서비스 지원 확대

구직자 및 재직자의 체계적인 재취업준비와 경력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2018년도에는 연령별(40대, 50대, 60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참여자를 25,000명으로 확대(2017년 20,000명)하여 운영한다.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지원 확대

일하고자 하는 중장년에게 생애경력설계를 바탕으로 경로별 · 단계별 맞춤형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연계)하는 신중년 인생3모작 패키지를 신규 제공하고 신중년에 적합한 직무 발굴 및 고용창출장려금 제도와의 적극적인 연계를 추진한다.

◉ 사회공헌 일자리 확대

퇴직 신중년들이 그동안의 전문성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비영리단체 및 사회적기업 등에서 사회공헌활동 시 활동 실비를 지급하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확대(2017년 6천명 → 2018년 6.5천명) 시행한다.

◉ 중장년 고용안정

경비원 등의 고용유지를 위해 60세 이상 고용연장지원금 지원을 연장(2017년 일몰 → 2020년까지)하고 단가를 인상(분기당 18만원 → 24만원)하여 고령자 고용안정에 기여한다.

3) 여성경력단절 예방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강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2017년 155개소에서 2018년 160개소로 5개소 확충한다. 또한 취업설계사를 130명 추가배치하고, 직업교육훈련과정을 50개 확대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여성과학기술인 복귀지원

임신,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이 원하는 전국의 대학연구소, 기업 및 정부출연연구원에 재취업하기 위해 여성과학기술인과 해당 기관 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과제 지원 수를 확대한다(2017년 160명, 40억원 → 2018년 414명, 104억원).

◉ 여성 경력단절 예방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 지식재산권 교육을 확대(50회 → 70회)하고, 생활발명 아이디어의 시제품 제작 · 출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4) 장애인 근로환경 개선

◉ 장애인고용장려금 확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 2.9%, 공공 3.2%)을 초과하여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확대(중증남성 장애인 고용장려금 월 40만원 → 50만원, 경증장애인에 대한 연차별 감액지급 폐지, 6급 경증장애인에 대한 4년간 한시지원 폐지)하여 지원한다.

◉ 장애인근로지원인 확대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의 부수적인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근로지원인 지원인원을 확대한다. (2017년 1,000명 → 2018년 1,200명)

◉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로 인해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취업 장애인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 지원물량을 확대한다. (2017년 7,000점 → 2018년 8,000점)

1-2 공공 일자리 확대

1) 공무원 일자리 확대

◉ 공무원 일자리 확대

현 정부 임기 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의 일환인 공무원 17.4만명 충원계획 중 2018년도 중앙직 공무원 9,475명분의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하였다. 9,475명은 군부사관 2,960명, 경찰 2,593명, 집배원 748명, 근로감독관 565명, 생활안전 등 2,307명, 헌법기관 302명이다.

2)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 보육 · 요양 분야 중심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정부는 보육 · 요양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공공 부문이 마중물로서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 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 17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1단계 계획을 수립하였다.

2018년에는 보육 · 요양 분야 등을 중심으로 2.5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보육 분야는 국공립 · 직장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해 1.0만 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요양 분야는 치매안심병원 · 치매요양시설 종사자 등 0.4만 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치매 환자 전문 요양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치매 국가책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3)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시정

◉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시정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2017. 7. 20.)'에 의거하여 공공부문 기간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청소 · 경비 · 시설관리 등 용역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등 신분안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동일가치노동 – 동일임금 원칙하에 기간제, 무기계약직 근로자 간 차별시정을 위하여 명절상여금(연 80만원), 급식비(월 13만원), 복지포인트(연 40만원)를 지급한다.

1-3 일자리 질 제고

1) 최저임금 인상 반영

최저임금 인상 수준(16.4%)을 감안하여 아이돌보미 수당 등 인건비, 고용부담금 인상 등을 지원한다.

2) 일 · 가정양립

◉ 육아휴직 확대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도 2017년 9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간은 통상임금 80%로 인상하였으며, 2018년 7월부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을 2017년 통상임금 60%에서 2018년 통상임금 80%로 인상한다.

◉ 일 · 생활 균형 인식개선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홍보, 일하는 방식 및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관리자 및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18억원)하여 일 · 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한다.

3) 근로여건 개선

◉ 자율개선 지원

근로감독관이 노동법 위반여부를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 · 처벌하기 이전에,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업종별 자율준수 지원사업 및 사업주 노동법교육 지원사업 포함)이며, 2018년에는 약 10,000개소의 사업장을 지원한다(17.3억원).

◉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확대

소규모 작업장에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대상을 20인 미만 全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2018년 작업환경측정 비용은 5만 개소(2017년 1.6만 개소)를 지원하고, 특수건강진단 비용은 35만 명(2017년 10만 명)을 지원한다.

◉ 유해 · 위험요인 시설 개선

소규모 건설현장(공사금액 20억원 미만)에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등 추락 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 (2017년 2,400개소 → 2018년 2,860개소)한다.

2. 소득주도 성장기반 마련

2-1 저소득층 · 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

1)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급여 현실화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빈곤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2017년 11월부터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소득 7분위 이하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4.1만 가구를 추가 보호하였으며, 2018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총 54만 가구를 추가 보호할 계획이다. 향후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7분위 이하 중증장애인과 노인이 포함된 경우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 급여 현실화

주거급여 · 교육급여 현실화를 위해 인상률을 확대하였다. 주거급여 임차급여는 급지별로 2.9%~6.6% 인상(4인 가구, 서울 기준 월 31.5만원 → 33.5만원)하였으며, 교육급여는 2018년부터 초등학생에 대해서도 학용품비(월 5만원)를 신규 지급하고 중고등 학생 부교재비(4.1만원 → 10.5만원), 학용품비(5.4만원 → 5.7만원)도 대폭 인상하였다. 의료급여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연계하여 본인부담 상한을 인하하고(2종 기준 연 120만원 → 80만원), 치매 · 아동입원 · 노인틀니 등에 대한 본인부담을 완화하였다.

◉ 주거급여 부양의무 폐지(2018년10월) 등 기초생활보장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2018년 10월)하여,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2017년 : 81만 가구 → 2018년 이후 : 130만 가구 이상)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지역에 따라

2017년 대비 2.9~6.6% 인상)와 자가가구에 대한 보수한도액(2017년 대비 8% 인상)도 인상하는 등 서민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2) 사회보험 안전망 확충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10인 미만 기업의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및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지원을 확대(2017년 5,202억원 → 2018년 8,932억원)한다. 특히, 5인 미만 기업의 신규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90%까지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출퇴근재해를 산재로 인정하여 산재보험 수혜자를 확대(2017년 4.4조원 → 2018년 5.0조원)하고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요양종결 후 지원을 강화한다.

◉ 퇴직연금

취약근로계층인 중소기업 노동자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이와 함께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가입 유도를 위해 동 제도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도입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사업주 부담금(10%)과 수수료(50%)를 지원(2018년 5.8억원)한다.

3) 근로빈곤층 자활 · 자립 지원 강화

◉ 자활사업 확대 및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 도입

근로능력 있는 기초수급자의 자활 · 자립 지원도 강화한다. 2018년 자활급여 단가를 최대 8.2% 인상하고 자활근로 일자리도 1,500개를 확대(45,000개 → 46,500개)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탈수급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신규 도입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만 34세 이하 청년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산정시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로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입금하고, 수급자가 통장을 3년간 유지하고 탈수급할 경우 정부 장려금까지 합쳐 총 1,500만원 수준을 지급할 계획이다.

4) 장애인연금 인상 및 일자리 확대

◉ 장애인연금 인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를 확대(35.2만명 → 35.5만명)하고 기초급여도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하여 중증장애인의 소득기반을 확충한다.

◉ 장애인 일자리 확대

도서관 사서 보조, 행정기관 도우미 등 장애인 대상 공공 일자리를 확대(16.3천개 → 17.4천개)하고 활동수당도 인상(+16.4%)하여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5)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확대

◉ 보상금 인상

2018년에는 2017년 물가상승률(1.9%), 2018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2.6%)등 사회경제 지표보다 높은 5.0%를 인상하였다. 이번 보상금 인상률 5%는 최근 8년동안 최고 인상률이다. 보상금과 연계한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의 단가도 각각 5.0% 인상하였다. 또한 민주화 공헌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4.19혁명공로자 보상금을 월 17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전몰 · 순직유족 보상금은 5.0%에서 2.0%를 추가 인상하여 총 7.0% 인상하였다.

◉ 참전 · 무공수당 인상

참전유공자의 평균 연령이 76세로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월 22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무공영예수당도 월 28～30만원에서 월 36～38만원으로 각각 8만원씩 인상하였다.

[참고] 최근 10년간 참전명예수당 인상 내역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월지급액	8만원	9만원	12만원		15만원	17만원	18만원	20만원	22만원	22만원
인상액	–	1만원	3만원	–	15만원	2만원	1만원	2만원	2만원	2만원

◉ 독립유공자 생계곤란 후손 생활지원금 신규 지원 등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생존 애국지사에게 지급하는 특별예우금(월 105～155만원 → 월 158～232만원)을 50% 대폭 인상하였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을 신설하였다. 지원대상은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자녀로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에게는 월 46.8만원,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에게는 월 33.5만원을 지급한다.

◉ 참전유공자 의료비 감면 확대 등

고령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율을 60%에서 90%로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상이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위해 총 사업비 681억원을 들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보훈병원 4개소에 전문재활센터를 연차적으로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현재 전국 6개소(수원, 광주, 김해, 대구, 대전, 남양주)에 운영 중인 보훈요양원은 강원권 공사비 105억원, 전북권 부지매입 및 설계비 등 21억원을 반영하여 보훈요양수요에 적기 대응할 계획이다.

2-2 서민생활비 경감

1) 세일앤리스백 등을 통한 주거비 경감

◉ 주택 매입 후 재임대, 공적임대주택 지원 대폭 확대

주택담보대출 상환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가구의 주택을 매입 후 재임대(Sales & Leaseback)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영구 · 국민임대 · 행복주택 등 저렴한 공적임대주택 지원을 대폭 확대(2017년 10.6조원 → 2018년 12.8조원)하여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2) 노인 · 저소득층 등 중심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

◉ 국가치매책임제 이행 및 독감예방접종 확대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치매요양시설 192개소를 확충하는 등 치매국가책임제를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며, 국가예방접종에 초등학생까지 독감 예방접종을 추가하여 겨울철 독감 유행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할 계획이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저소득층 대상 1회 의료비가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를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 지원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차질 없이 뒷받침한다.

3) 아이 · 노인 · 장애인 돌봄서비스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이용료를 6,500원에서 7,800원으로 인상(20%)하고, 저소득층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계층별(중위소득 120% 이하) 정부지원비율을 5%p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시간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부지원을 연 480시간에서 연 600시간으로 확대하였다.

◉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독거노인 대상인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혜자를 확대(22.5만명 → 24.0만명)하고, 사례관리 전달체계 사업(신규)으로 이관 하여 여타 사례관리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통해 맞춤형 복지를 강화한다.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가사지원, 목욕보조 등을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도 인상(9.8%)하여 서비스 질 제고를 지원한다.

◉ 장애인활동지원 확대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를 확대(6.5만명 → 7.1만명)하고, 서비스 바우처 단가 인상(16.5%)을 통해 서비스 질 제고를 지원한다.

4)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저소득층 거주 주택의 단열재 · 창호공사 비용을 가구당 1.5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인상하고, 중증희귀질환자 가구(2만)를 포함하는 등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54만 가구에서 60만가구로 확대한다.

5) 가격안정 유도 등을 통한 생활비 절감

◉ 공공형 택시 지원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 여건이 취약한 농촌지역 등(전국 160개 시 · 군)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비 절감을 위해 공공형 택시를 확대(9억원 → 80억원) 도입한다.

◉ 채소가격안정제 품목 · 물량 확대

배추 · 무 등 주요 채소류 계약재배 농업인의 일정 약정금액(도매시장 평년가격 80% 이내)을 보전해 주고, 약정물량 50%에 대해 사전면적 조절, 출하중지 등 강화된 수급의무를 부여하는 채소가격안정제 품목(4개 → 5개) · 물량(8% → 10%)을 확대하여 가격안정 및 농업인 소득안정을 지원한다.

◉ 축산물 가격비교 플랫폼(고기넷) 구축

축산농가, 축산물을 취급하는 상인 외 축산물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축산물의 산지 · 도매 · 소매가격 제공하는 축산물 온라인 가격 비교 시스템(고기넷)을 구축할 예정이다.

– (이용방법)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폰(앱)을 통한 가격 조회

* 시스템 구축 후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www.ekape.or.kr)에 이용방법을 공지할 예정임

동 시스템이 구축되면 축산물의 가격 편차(단계 · 구입처별)를 최소화하여 합리적인 가격 형성을 유도하는 한편, 축산물 가격 자율경쟁 촉진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소상공인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통신비

기존에는 이동통신 3사 요금제 추천 서비스만 제공했으나, 2018년 부터는 알뜰폰 요금제를 포함한 통신요금 비교 서비스, 단말기 가격 정보 등을 제공(신규, 5억)하여 더 저렴한 통신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3 소상공인 지원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 영세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를 사업주(30인 미만 고용사업주 원칙)에게 지원(2018년 신규 2조 9,708억원)한다. 이와 더불어 사회보험료 지원 및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및 근로소득증대세제 확대 등 소상공인 ·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2) 소상공인 성장 · 재도전 지원

◉ 소상공인 조직화 · 협업화 지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직화, 협업화 사업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협업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생계형 업종 영위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종별 공동브랜드 · 상품 개발 및 공동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또한 중소슈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슈퍼조합 등을 통한 체인화 추진도 지원한다.

◉ 소상공인 상생자금 신설

경영상황에 따라 원리금 상환액이 결정되는 소상공인 대출상품을 신설한다. 매출액에 따라 상환 규모가 결정되고 사후관리 컨설팅까지 연계 지원하는 자금을 신설하여 매출이 일정하지 않아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도록 지원한다.

◉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담 등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1인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일정수준(154만원) 이하의 수입을 얻는 1인 소상공인에 대해 2년간 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13억원). 이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한다.

3) 상생협력 기반조성

◉ 상생협력 전제 상권활성화 지원

상권내몰림 현상으로 영세 상인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상생협력 전제 상권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상권 내 상가 임차인 · 임대인간 상생협력이 이루어지는 상권에 대해 5년간 국비 최대 40억원을 지원한다.

◉ 협력이익배분제 기반조성

대 ·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인프라 확산과 상생협력 유도를 위해 협력이익배분제 홍보를

추진한다. 협력이익배분제란 대기업이 협력사와 협력하여 달성한 이익이나 손실을 사전에 정해진 배분규칙에 따라 협력사와 공유하는 제도이다. 대기업·중소 기업 등 이해관계자 및 국민 대상 제도홍보를 통해 인식개선을 추진하고, 원활한 제도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4) 전통시장 인프라 확충

◉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전통시장 이용고객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통시장 주차장 신설(30개 → 43개)을 확대한다.

또한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채용지원을 확대하여 전통시장이 자생력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전통시장 안전문제 해소

최근 전통시장에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 개별점포에 화재감지시스템 설치를 확대한다. 사물인터넷(IoT) 기반 화재감지시스템 설치로 화재발생시 소방서 및 상인에게 자동으로 통보하여 화재피해를 최소화한다.

2-4 지역균형 발전

1) 도시재생사업 추진

◉ 신규 도시재생 지역 대폭 확대

도로, 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함 등 기반시설 정비 및 생활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재생지역 內 민간참여 복합시설 구축을 위한 공공 마중물 투자 및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전국에 신규 도시재생 지역을 대폭 확대(68개)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낙후된 도시기능 재활성화를 추진한다.

2) 지역경제 활성화

◉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물류교통망 구축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남북도로 2단계(설계비 192억원) · 새만금 수목원(설계비 17억원)을 신규 지원하고, 남북도로 1단계 · 동서도로 ·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새만금 신항 등 새만금 SOC 사업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1,488억원 → 3,195억원)한다.

◉ 소규모 항만기반시설 신규착공 확대추진

소규모 항만 내 지역 주민들의 편의 및 소득 증진, 정주여건 개선, 연안화물의 안정적 수송을 위하여 소형선박 접안시설 및 여객시설 등 항만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주문진항 물양장 확충(25억원), 땅끝항 여객터미널 신축(10억원), 장승포항 개발(25억원), 옥포항 개발(25억원) 등 지역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신규 시설확충 및 낙후지역의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을 확대(186억원 → 425억원) 추진한다.

◉ 지역 산업기반시설 확충 및 교통인프라 준공 적기 지원

산단 진입도로 14개소 신규착공 등 지역 내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2018년 하반기 개통예정인 서울도시철도 9호선 3단계 사업 등 교통 인프라 준공소요는 빠짐없이 지원한다.

3) 농어촌 지원 확대

◉ 영농 · 영어 초기 생활안정 자금 지급

영농경력 3년 이하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영농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큰 1,200명을 선발하여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여 조기 영농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이들을 농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어 나갈 청년창업농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금뿐만 아니라 농지 · 자금 · 기술교육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어업 분야에서도 우수 청년인력의 어업창업과 어촌 정착을 위해 영어경력 3년 이하만 40세 미만 청년 귀어업인 중 100명을 선발하여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어 정착 지원금을 지급한다.

◉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확대

농지은행 사업 개편을 통해 2018년도부터 영농 규모 · 경력 및 연령별로 차등 지원하는 "맞춤형농지지원" 사업을 도입한다.

특히 사업 확대(2017년 3,343억원 → 2018년 3,883억원, +540억원)를 통해 청년농, 후계농, 귀농인 등 진입 · 성장농을 집중 지원하여 전업농 수준으로 성장을 지원한다.

◉ 쌀 생산조정제 시행

쌀 적정생산을 통한 쌀값 안정으로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쌀 재배농가가 논에 벼 이외 타작물 재배 시 ha당 평균 340만원의 소득을 지원하여 쌀 수급균형을 도모하고 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는 한편, 밭작물 전환 농가의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 직불금 단가 인상

농지의 기능 및 형상을 유지하면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상(45만원/ha → 50만원/ha)하여 한 · 중 FTA에 따른 밭농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 · 농촌의 다원적 가치 증진 및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상(55만원/ha → 60만원/ha)하고, 마을공동기금 조성을 자율화(직불금의 20%이상 적립의무 → 시 · 군단위 자율화)하여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어업 분야에서도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거주 어업인에게 어가 단위로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상(55만원 → 60만원/년)한다.

◉ 재해보험 및 농지연금 확대

태풍 · 가뭄 · 폭염 등 대형화 · 상시화된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현장수요를 반영한 제도 및 상품개선을 추진한다.

농지연금은 신규상품 3종(일시인출형 · 전후후박형 · 경영이양형) 출시에 따라 지원규모를 확대하였다(663억원 → 923억원)

4) 지방재정지원 확대

◉ 지방교부세 확대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 교부세를 대폭 확대(2017년 40.7조원→ 2018년 46.0조원)한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등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폭 확대(2017년 42.9조원 → 2018년 49.5조원)한다.

◉ 포괄보조금 확대

지역의 수요를 전제로 자율적 선택에 따라 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을 확대(2017년 4.9조원 → 2018년 5.5조원)한다.

3. 혁신성장 동력확충

3-1 제조업 · 서비스업을 혁신 생태계로 개편

1) 4차 산업혁명 지원

◉ 4차 산업혁명 핵심 · 융합기술 개발 지원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기술간 융합을 강화해 나간다. 우선, 국내외 기술격차가 큰 AI, IoT, 빅데이터 등 핵심기술에 집중 투자(2017년 5,640억원 → 2018년 6,466억원)하여 기술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하고 신산업 창출도 촉진한다.

또한 정밀의료 암 진단치료 임상시험,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시스템과 같이 의료, 제조, 국방 부문 등에서 기존에 개발된 기술 간 융합을 장려하고 이들의 테스트베드와 공용플랫폼 구축을 확대해 나간다(2017년 5,039억원 → 2018년 6,907억원).

2) 네트워크 중심 지원체계 전환

◉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개발

개별 기업 중심 마케팅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네트워크 중심의 마케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공동브랜드를 개발한다. 한국 중소기업 제품을 상징하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 제품과 연계하여 국내외 브랜드 마케팅 및 판로확보를 지원한다.

◉ 중소기업협동조합 원부자재 공동구매 보증지원

원자재 조달 시장에서 약한 협상력으로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원부자재 공동구매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협동조합 조성을 통해 판매기업과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정부는 공동구매 전용보증 신설을 지원하여 협동조합의 대금지급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 산 - 산 협력체의 공동 연구개발 지원 확대

이노비즈기업, 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새로운 기술과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성 및 연구과제 사전 기획, 기술개발자금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2017년 72억원 → 2018년 147억원).

3) 스마트공장 보급을 통한 제조업 혁신

◉ 스마트공장 보급지원 확대

혁신성장을 견인 · 확산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추진 등을 위해 민간과 협력하여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를 보급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 스마트공장 5,000개를 구축하였으며 2018년에는 스마트공장 2,100개 구축을 지원한다.

*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 사업 : (2017년) 438억원 → (2018년) 782억원

특히, 기존 스마트공장 고도화, IT 연계 제조공정 자동차 등 대규모 시설 투자 및 운전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를 신규 도입(2018년 3,300억원)하여 제조업 혁신 지원 등을 확대한다. 아울러 제조업과 ICT융합을 통한 국내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현실에 맞는 스마트공장 기술개발도 지속 지원한다. (2018년 40억원)

3-2 혁신성장 거점 구축

1)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학생 · 직장인 등 일반인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쉽게 구현화되고, 사업화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혁신 · 융합형 메이커 스페이스(크리에이티브 랩) 구축을 지원한다.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여 아이디어를 구체화해볼 수 있는 공간(일반랩)과 전문적 시제품 장비 등을 활용하여 아이디어의 창업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공간(전문랩)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메이커 전문인력 양성 및 메이커 페어 등 혁신적 문화활동도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2) 혁신성장 지역 거점기반 구축

◉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혁신도시와 산업경쟁력을 갖춘 인근 지역을 연계한 기업 투자 촉진 및 지역 혁신성장 기반 구축을 도모한다. (2018년 신규 200억원)

◉ 개방형 혁신 연구실 구축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지역기업 · 대학 · 연구소 등이 참여하여 공동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개방형 혁신 연구실(78억원 → 141억원)을 중점 지원한다.

3) 사회적기업 지원

◉ 사회적기업 지원

판로 및 경영컨설팅 등의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 성장 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통합플랫폼을 구축(신규 9억원)하고, 경영컨설팅 지원대상을 확대(2017년 130개소 → 2018년 140개소)하며, 사회적기업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모태펀드를 추가조성(신규 75억원)한다.

또한,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2017년 500팀 → 2018년 550팀)을 확대한다.

3-3 사람·공간의 연결을 가로막는 규제를 전면 개선

1) 정보 공유 인프라 구축

◉ 국가보유 데이터 개방 확대

국가보유 32만개 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토록 개방하고,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의료정보) 개인별 건강검진·진료내역 등 통합조회 서비스(건강정보) 한국인 맞춤형 건강지수 개발 및 건강정보 제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데이터프리존 지정

데이터 가공이 자유로운 데이터프리존을 시범적으로 지정(신규, 10억원)하여 다른 분야의 데이터 결합을 촉진하는 등 민간 데이터 활용성을 높인다.

◉ 자율주행차 공유데이터 구축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및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험운행 주행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민간에 공유하기 위한 자율주행차 주행데이터 공유센터를 신규 구축(10억원)한다.

2) 규제 개선 지원

◉ 제조서비스 융합 新 비즈니스의 시장진입 지원

제조-서비스 융합에 기반한 새로운 비즈니스의 안전성·시장성 검증을 위한 실증 기획, 실증, 최적화 R&D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Track-Record를 활용하여 관련 규제를 조속히 개선해 나간다(신규, 6억원).

3) 공간적 장벽 완화

◉ 관광지 와이파이 설치(585개소)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한다. 2015~2017년에 강원 지역에서 실시한 시범 사업(총 458개소 완료)을 확대하여 전국 주요 관광지 585개소에 관광객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 인프라를 구축한다.

3-4 혁신자본 공급 확대 및 혁신위험 분담

1) 혁신자본 확대

◉ 투융자복합금융 융자 확대

기술성과 미래성장가치가 우수한 혁신 창업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인 투융자복합금융을 확대한다. 동 사업은 기존 융자 방식에 투자요소를 가미하여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첫째, 대출시 저금리로 지원해주고 지원기업의 영업성과에 따라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대출이다. 둘째, 채권 발행기업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전환사채, CB)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성장공유형 대출이다. 투자요소를 결합한 혁신모험 자본을 공급하여 창업활성화와 성장단계 진입을 도모한다.

◉ 혁신모험펀드 조성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모험자본공급으로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한다. 혁신모험펀드는 기존 모태펀드와 달리 모험성과 정책금융과의 연계성을 높인 펀드로 향후 혁신성이 높은 기업이 성장(Scale-Up)할 수 있도록 자금공급을 진행한다. 또한 혁신모험펀드의 투자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20조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신보·기보 보증공급과 민간자금을 연계하여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자금공급을 지원한다.

◉ 재도전성공패키지 확대

사업에 실패하였으나 재기의지가 있는 성실실패 기업인을 대상으로 재창업기회를 부여하는 재도전성공패키지를 확대(100억원 → 150억원)한다. 성실한 기업인에게 다시 창업할 수 있도록 재창업컨설팅, 사업공간지원, 사업화자금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사내창업 프로그램 지원 신설

중소·중견기업 및 벤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혁신적 아이디어가 또 다른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의 사내창업·분사(Spin-Off) 활성화를 지원한다. 모기업에서 1억원 이상 선투자한 우수 사내창업팀에 대해 정부에서 1억원을 매칭 투자하고, R&D, 투자유치, 정책자금 연계 등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우수한 창업 아이템이 성공적으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2) 혁신 인적자본 확충

◉ 혁신형 인재 양성 강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과목간 융합형 교육 교원연수를 확대(2017년 800명 → 2018년 1,000명)하고, SW교육 필수화에 맞춰 예비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초등 교원양성대학 SW 교육과정 개발 등을 지원(신규, 26억원)한다.

◉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확대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혁신형 인재양성을 확대(181개교, 306억원 → 200개교, 339억원)한다. 산업분야 맞춤형 교육 및 현안문제해결 중심 교육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로 양성한다.

◉ K-MOOC 4차 산업혁명 관련 콘텐츠 확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콘텐츠를 확대(2017년 35개 → 2018년 50개)하는 등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창출을 강화할 계획이다.

◉ 노사상생형 지역 일자리 확산

노사민정이 의지를 갖고 협력하여 지역적합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려는 자치단체에 컨설팅을 지원하여 지역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을 확대(2017년 3개 지역 → 2018년 8개 지역)한다.

◉ 학교 밖 SW교실 확대

2019년까지 초중등 정규 교과과정으로 편성되는 SW교육을 보완하여 초중등 학생들의 SW적인 사고 함양을 위해 학교 밖 SW교실을 확대한다(300개 → 600개).

4. 국민이 안전한 나라

4-1 자주국방 역량 강화

1) 국방분야 투자 확대

◉ 국방비 및 무기체계 투자 확대

2018년 국방비(일반회계) 규모는 43.2조원으로 2017년 40.3조원 대비 7.0% 증가한 규모이다. 강한안보와 책임국방을 위해 국방비 규모를 2009년 이후 최고수준으로 확대한다. 과거 정부 국방비증가율은 참여 정부 8.9%, 이명박 정부 5.2% 박근혜 정부는 4.1% 수준이다.

방위력개선비 규모는 13.5조원으로 2017년 12.2조원 대비 10.8% 증가한 규모로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이며, 확대된 국방비로 무기체계에 집중투자한다. 과거정부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은 참여 정부 13.0%, 이명박 정부 5.7%, 박근혜 정부 4.8% 수준이다.

2) 북핵 · 미사일 위협 대비 핵심전력 투자 확대

◉ 미사일 방어

북핵 ·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Kill-Chain, KAMD(Korea Air & Missile Defense,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및 KMPR(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대량응징 · 보복)의 3축 체계 조기 구축을 적극 지원한다.(2017년 21,359억원 → 2018년 22,735억원)

◉ 대북억제

대북억제를 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스텔스기(F-35A) 인수 등에 대한 차질없는 지원과 무인기 탐지 · 대응 관련 국지방공레이더,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 등 북한무인기 침투 대비 방공전력을 강화한다.

3) 군 장병 생활여건 및 예비군 훈련여건 개선

◉ 군 장병

병 봉급, 급식비 단가인상 등으로 장병 복지를 향상한다. 병 봉급은 병장기준 2017년 216,000원 → 2018년 406,000원으로 약 2배 수준 인상하고, 영내자 급식비 단가를 5% 인상(2017년 7,481원 → 2018년 7,855원) 및 민간조리원을 증원(2017년 1,841명 → 2018년 1,903명)하여 급식 질을 향상한다.

◉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2017년 10,000원 → 2018년 16,000원) 및 동원훈련장 내 온수 샤워장, 세탁실 설치확대로 예비군 훈련시설 여건을 개선한다.

4-2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 투자

1) 환경위해요인에 적극 대응

◉ 환경위해요인에 적극 대응

저감효과를 기준으로 미세먼지 대책 사업을 재편하여 재정투입 효과를 극대화하고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확보 및 위해성 관리, 도시침수 · 가뭄 · AI 등 환경위해요인 저감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지반침하 · 단수사고 등에 대비하여 노후 상 · 하수도 정비도 추진한다.

◉ 미세먼지 감축 강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을 확대(2017년 60천대 → 2018년 116천대)하고, 건설기계 · 대형 화물차를 비롯한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을 지속하며, 어린이 통학차량 중 노후 경유차의 LPG 차량 전환 지원을 확대(2017년 800대 → 2018년 1,800대)하여 환경유해인자에 특히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한다.

◉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체계 선진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 보건센터를 전국 주요 권역별로 확대하고(1개소 → 4개소), 유사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살생물제 숲과정 안전관리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며(81억원), 흡입독성 시험시설(2개소)을 조기 구축한다.

취약계층 건강영향조사, 영유아 · 청소년 유해인자 노출의 건강영향에 대한 장기간 추적조사 등 환경성질환 예방 · 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 체감형 환경보건 서비스를 구현한다.

2) 먹거리 안전 강화

◉ 농수산식품안전조사

농산물의 생산 · 유통 일부단계에서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통해 부적합품 유통을 사전 차단하여 안전한 농산물 공급(농산물 75천건)하고,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관리 강화로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 마련(사료 20천건)과 환경보전 가치 공유로 친환경농업의 안정적 성장 · 엄정한 인증관리를 통한 부실인증을 근절하며 친환경 축산농가에 대한 정기적인 잔류농약 및 항생제 검사 확대(잔류농약 4천건, 항생물질 4천건)를 통하여 친환경농축산물의 사후관리 강화로 대국민 먹거리안전관리에 지원을 확대한다.

◉ 수산물 유해물질 분석장비 지원 확대 및 패류 가공시설 현대화

식품 안전을 넘어 안심을 요구하는 국민 기대에 맞춰 수산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해물질 검사에 필요한 분석장비 지원을 확대(4개 → 10개 시도/30여개 분석장비 도입)하여 관내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지자체의 검사 능력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협업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수산물에 대한 항생물질, 중금속, 방사능 등 안전성조사를 통하여 불법 · 유해한 수산물의 시중 유통을 차단한다.

아울러, 패류의 경우 식중독 균 등을 체내에 농축하는 특성이 있으며, 특히 굴은 생식(생굴) 비율이 높아 껍질제거(박신) 후 세척에 따른 2차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박신장 시설 지원(10개소)을 통해 위생시설(가공용수 등) 개선을 유도하고자 한다.

◉ 다소비 식품(농축수산물, 가공식품 107품목)을 대상으로 조리과정을 거친 후, 중금속 곰팡이 유해성분 조사

국민들이 다빈도 · 다소비 사용 식품들을 대상으로 한국 고유의 조리과정을 통해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는 유해 · 유용성분의 변화량을 지속적으로 조사 · 평가하여 총 노출량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 · 규격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상시 방역체계 구축 및 축사시설 현대화

AI 발생 위험을 낮추고 발생시 대규모 피해와 재정투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금 밀집 및 방역취약 지역에 있는 가금축사를 안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축사 신축 등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5개소, 국비보조 40% 및 지방비 보조 40%)한다.

또한, 가금 농장주가 농장에 설치된 CCTV 영상기록을 통해 닭 · 오리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찰하여 AI 등 질병 발생 시 조기 신고를 유도하고,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역학조사에서 농가의 평시 방역실태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업규모 가금농가 및 부화장에 CCTV 설치를 지원한다.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축산농가 및 취약지역(밀집사육지역, 전통시장 등)에 농협의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을 지원함으로써 가축전염병 예방과 국민 보건에 기여한다.

전국 16개 시 · 도, 205개 시 · 군에 540개 반(방역요원 540명, 방역차 540대)을 편성 · 운영하여 적기 적소 방역현장에 투입되고 있으며, 지자체 및 축협 자체의 방역차량과의 연계활동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공동방제단 90개반을 추가 편성(450개반 → 540개반)하여 농가당 소독횟수 확대(연 15회 → 24회)로 더욱 강화된 질병예방 활동을 수행한다.

◉ 축산차량 GPS 등록대상 확대 및 축산차량 관제센터 설치

가축전염병 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2012년부터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주요 축산차량을 축산차량으로 등록하고 차량에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여 축산차량의 출입정보를 분석 · 관리할 수 있는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왔다. 2016~2017년 AI 발생 이후 AI 전파 · 확산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기존 축산차량 등록대상(가축 · 원유 · 사료 · 분뇨 등 운반 및 진료 · 예방접종 · 컨설팅

방역 등) 외에 가금부산물 및 남은음식물(사료) 운반, 가금 출하 상 · 하차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농장)의 운영 · 관리에 이용되는 화물차량이 대상으로 포함되어 관리된다. 또한, 축산차량 관제센터를 설립하여 축산차량의 출입정보 및 이동정보를 기반으로 GIS 정보, CCTV영상정보, 축산차량 통행량 분석정보, 역학정보, 축산농장 모바일 영상정보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하고 위반차량 추적 및 모니터링, 상황전파 일제명령, 영상자료 분석을 통하여 신속한 방역대책 의사결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 취약계층 먹는 물 불안 해소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극복을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같은 대체 수자원과 강변여과수, 식수 전용 소규모 댐 등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을 강화하고, 농어촌 음용지하수에 대해 맞춤형 정수장치(신규 700가구), 관정개선(신규 100건), 마을공용관정 개발(매년 5개소)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건강하고 안전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수질 · 수생태계 건강성을 모니터링 하면서 자연성 회복 대책을 강구하고, 오염사고 발생 시 확산 차단을 위한 완충저류시설도 확대 설치한다.

3) 재해 · 재난 예방

◉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한 가뭄 · 홍수 등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진 등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저수지, 양수장 등 수리시설 확충과 수계연결 등 농촌용수개발 사업을 통한 항구적인 용수대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국지적으로 가뭄이 발생하면 가뭄대책비(한발대비용수개발 예산) 지원을 통해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기 설치된 저수지, 방조제 등 대규모 수리시설의 물넘이, 배수갑문 보강으로 안전 영농기반을 구축한다.

◉ 재해위험지역 정비 및 항만시설 보강

상습침수 · 붕괴위험지역 등 시급히 보수 · 보강이 필요한 재난취약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재해위험지구 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등 재해위험지역 등 투자를 확대하여 재해예방인프라를 계속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잦은 태풍 내습 및 지진 발생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 등을 위해 항만 내 재해취약 지역을 정비(재해안전항만구축) 함으로써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침수취약 지역에는 침수방지시설 및 방재언덕 등을 설치하고 태풍 시 피해 예방을 위한 방파제 신설 및 기존 방파제 보수 · 보강 등 안전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341억원 → 914억원)를 통해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확보하고 항만시설을 보호한다.

◉ 졸음운전 방지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 및 화물차 등을 대상으로 차로이탈 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신규로 지원(171억원)한다.

◉ 사고 · 재난 대응

선박 노후화로 인한 해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안선사에 대한 노후선박 교체 지원을 확대(2016년 326억원 → 2017년 386억원)한다.

운항 선박과 섬이 많아 사고의 위험이 높은 서해권역의 선박관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산 · 목포연안 VTS를 확충하고, 우리나라 전해상에서의 VTS센터간 통합정보체계 구축을 추진할 것이다.

◉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긴급상황센터 건립

24시간 정보수집 · 감시, 신고 · 접수, 지휘통제 등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를 위한 긴급상황센터 건립을 완료하여, 감염병 위기상황 조기 인지 및 신속 대응으로 국민 건강을 보존한다.

4) 테러대비 및 치안강화

◉ 대테러 장비 보강

도시지역 작전능력 보강을 위한 양안형 야투경, 대테러 기관단총 등 대테러 장비를 보강한다. (2017년 3억원 → 2018년 174억원)

◉ 실종자 수색 드론 도입 및 사이버수사 장비 확충

접근이 어려운 산악 · 해안 · 절벽 등 특수지형과 시야확보가 어려운 야간 상황시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기 위해 실종자 수색용 드론을 최초로 도입 하였고(4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이버 테러형 범죄수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수사장비를 대폭 확충하였다(2017년 13억원 → 2018년 39억원).

◉ 헬기 시뮬레이션 센터 신축

소방과학실에서 2018년 개발 예정인 구조헬기 조종사 교육용 헬기 시뮬레이터를 설치하기 위한 센터를 신축한다. 동 센터는 연면적 330m^2, 지상 1층 규모로 건립되어 비상상황 조치 절차, 계기비행 능력 숙달, 조종사 비행역량 평가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4-3 평화통일 기반 구축

1) 남북경협 지원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한 추진기반 마련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간 경협기반 사업을 확대(1,389억원 → 2,480억원)하였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북한 공동번영의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확보해 나감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에 새로운 경제질서를 창출하기 위한 구상이다. 남북뿐 아니라, 동북아 이웃국가와의 경제적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우리의 경제영역을 넓혀 나갈 것이다.

2) 인도적 지원 등 남북관계

◉ 이산가족 교류 확대 추진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고,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상봉행사를 확대한다(34억 → 84억). 또한,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를 확대하고, 고령 이산가족 정보 보전을 위해 유전자검사 지원을 확대한다.

◉ 북한지역 인도적 지원 및 민생환경 개선 추진

북한지역 인도적 위기 발생시 상황에 맞는 적절한 품목을 지원하여 통일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농축산 협력, 산림복구, 환경 · 보건의료 분야 협력 등 민생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보건위생 및 민생환경 인프라를 개선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5. 인적자원 개발

5-1 저출산 극복지원

1)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대출상품 신설

통근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2만호 → 3만호)하고,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신설하여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를 우대해준다.

2) 임신 · 출산 지원

◉ 임신 · 출산 지원

분만취약지 산부인과(16개소 → 18개소)와 고위험산모 · 신생아 통합치료센터(13개소 → 17개소)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출산인프라를 개선한다.

3) 육아 · 돌봄 지원

◉ 양질의 보육시설 및 돌봄지원시설 확충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소를 확충하고, 확충방식도 장기임차 방식을 도입하는 등 보다 다양화 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공공형 어린이집도 150개소 확충하고 지원 단가도 인상(367만원/월 → 382만원/월)한다. 이와 함께 공동육아나눔터(66개 지역 → 113개 지역), 시간제 보육시설(380개소 → 443개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250개소 → 260개소)도 확대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양육비용 경감

양육비용 경감을 위해 2018년 9월부터 소득 수준 하위 90%이하의 0~5세 양육가구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를 월 1만원(12만원/월 → 13만원/월) 인상하고 지원연령도 만 12세에서 13세 이하로 상향할 계획이다.

5-2 교육의 희망사다리 마련

1) 유아 · 초 · 중등 교육

◉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을 전액 국고로 지원(2017년 8,600억원 → 2018년 2조 586억원)하여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 소외계층 영재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소외계층 대상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초4~고3)하여 재능이 발현 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재교육프로그램을 지원(신규, 400명)한다.

2) 고등교육

◉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

학생,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추진을 위해 소득연계 국가 장학금 지원을 확대(2017년 3.63조원 → 2018년 3.68조원)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지원금을 약 1조원 추가 투입하여, 가구 소득이 낮은 대학생부터 단계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저소득층 우수 고교생의 해외 대학 지원을 확대(2017년 20명 → 2018년 50명)하고, 어려운 환경의 대학생들도 다양한 도전과 글로벌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파란사다리 사업(신규, 800명)을 신규로 시행하며, 저소득층 대학원생 대상 국비유학 선발 인원을 확대(2017년 10명 → 2018년 20명)할 계획이다.

3) 평생 · 직업 교육

◉ 산업연계 단기교육 과정(한국형 나노디그리) 개설

기업 ·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전문직무를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도록 산업연계 단기교육 과정(한국형 나노디그리)을 개설하여 구직자 · 재직자가 기업 수요에 맞는 직무능력을 갖추도록 지원(신규, 16억)한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등 능력개발지원

부처 간 훈련사업 통 · 폐합 후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훈련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직업훈련을 신설한다. (2018년 신규, 9억원, 1,000명)

5-3 고등교육 질 제고

1) 기초연구(R&D) 확대

◉ 개인기초연구, 집단연구

연구자가 창의적으로 연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 분야만 지정하고 구체적인 주제는 연구자가 스스로 선택하는 연구자 주도형(Bottom-Up) 개인기초연구와 집단연구를 확대(2017년 1.26조원 → 2018년 1.42조원) 추진한다.

2) 국립대학의 지역거점 역할 강화

◉ 거점 국립대 육성 및 지역중심 국립대 특화 지원

국립대별 강점 분야를 지원(2017년 210억원 → 2018년 800억원)하여 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발전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거점 국립대학(9교)은 세계 수준의 연구브랜드 육성 및 지자체와의 연계 · 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중심 국립대학 등(30교)은 지역 전략 발전분야와 연계한 기능 특화에 중점을 두어 국립대학의 전반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내 지역대학과 공공기관 간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양질의 일자리 취업을 통한 지역우수인재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3) 대학 창업 활성화

◉ 대학발 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 창업생태계 구축

대학창업기업들이 창업 초기 단계부터 대학 내 창업 생태계 속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학창업펀드 지원규모를 확대(120억원 → 150억원)하고, 창업선도대학 중 5개교를 선정하여 대학내 창업전공 융합 교육과정 등을 지원하는 대학원특화형 창업선도대학으로 육성(신규, 8억원)할 계획이다.

◉ 창업선도대학 육성 지원 개편

대학인프라를 활용한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선도대학 육성 지원을 개편한다. 기존에 여러 부처가 중첩하여 담당했던 대학창업기능을 역할분담을 통해 명확화 하여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창업선도대학 사업을 개편한다. 방식은 창업선도대학 중 5개교를 선정하여 과학기술 및 대학원 특화 창업선도대학을 육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하는 과학기술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은 우수 특허 · 연구성과 보유한 대학이 보유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후속 R&D를 지원한다. 교육부에서 담당하는 대학원 특화형 창업 선도대학은 대학 내 창업전공 융합교육과정을 지원하여 선도대학에서 육성한 우수 인재가 기술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03

(단위 : 조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 감	
			(B-A)	%
■ 총 지 출	400.5	428.8	28.3	7.1
1. 보건 · 복지 · 고용	129.5	144.7	15.2	11.7
※ 일자리	17.1	19.2	2.2	12.6
2. 교 육	57.4	64.2	6.8	11.8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2.9	49.5	6.6	15.4
3. 문화 · 체육 · 관광	6.9	6.5	△0.4	△6.3
4. 환 경	6.9	6.9	△0.0	△0.3
5. R&D	19.5	19.7	0.2	1.1
6.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16.0	16.3	0.2	1.5
7. SOC	22.1	19.0	△3.1	△14.2
8. 농림 · 수산 · 식품	19.6	19.7	0.1	0.5
9. 국 방	40.3	43.2	2.8	7.0
10. 외교 · 통일	4.6	4.7	0.2	3.5
11. 공공질서 · 안전	18.1	19.1	0.9	5.1
12. 일반 · 지방행정	63.3	69.0	5.6	8.9
※ 지방교부세	40.7	46.0	5.2	12.9

제 3 장

분야별 투자계획

01 보건·복지·고용 분야
02 교육 분야
03 문화·체육·관광 분야
04 R&D 분야
0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06 SOC 분야
07 농림·수산·식품 분야
08 환경 분야
09 국방 분야
10 외교·통일분야
11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2 일반·지방행정 분야



2018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18**



보건·복지·고용 분야 01

1-1 재정지원 방향

2018년 보건 · 복지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144.7조원으로 총지출 대비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인 33.7%를 달성하였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소득지원체계를 확충하고, 주거·의료·돌봄서비스 분야의 지원을 확대하여 서민 생활비 경감을 지원 하였으며 결혼 · 출산 육아의 단계별 지원강화를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도 병행 추진한다.

▣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득지원체계 확충

그간 개선 추세를 보여 왔던 소득불평등 지수가 2016년 들어 악화(균등화 처분가능 소득의 5분위배율 2015년 7.1 → 2016년 7.6)되는 등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소득주도 · 지속가능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초수급자 · 노인 ·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애 주기별 소득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주거비 · 의료비 등 서민 생활부담 경감 지원 확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주거 · 의료 · 교육비 등 필수 생계비의 부담이 높아 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저소득층 교육 지원 확대 등 서민 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 가처분 소득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확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2017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특히, 2017년 신생아 수가 급감(상반기 출생아 수 (2016년) 21.5만 → (2017년) 18.9만명)하는 등 저출산 현상이 우리 경제에 심각한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정부는 합계출산율 제고를 위해 임신 · 출산 · 육아 등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건보 · 의료급여 효율화 등 복지지출 내실화 노력

건보 · 의료급여 효율화 방안 마련,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등 지출 효율화 및 체감도 개선 노력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건보 · 의료 급여는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부정수급 ·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지출효율화 방안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업무분야 · 소속기관별로 분할 운영되고 있는 대상별 사례관리 업무(복지부 7종, 여가부 5종)에 대해서는 연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표 1-1] 보건 · 복지 · 고용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 ((b-a)/a)
합 계	1,294,830	1,446,588	11.7
기초생활보장	104,904	113,147	7.9
취약계층지원	26,082	28,268	8.4
공적연금	449,930	478,007	6.2
보육 · 가족 및 여성	59,225	67,348	13.7
노인 · 청소년	98,013	112,749	15.0
노동	182,653	238,104	30.4
보훈	49,754	55,256	11.1
주택	212,421	233,870	10.1
사회복지일반	8,290	11,265	35.9
보건의료	23,405	24,420	4.3
건강보험	75,811	79,434	4.8
식품의약안전	4,342	4,719	8.7

1-2 부문별 주요 지원 내용

▣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급여인상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보장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자활사업 확대 및 청년희망키움통장 도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고, 긴급복지 강화·읍면동 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2017년) 104,904억원 → (2018년) 113,147억원 (7.9% 증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빈곤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2017년 11월부터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소득 7분위 이하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4.1만 가구를 추가 보호하였으며, 2018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총 54만 가구를 추가 보호할 계획이다. 앞으로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7분위 이하 중증장애인과 노인이 포함된 경우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주거급여 · 교육급여 현실화를 위해 인상률을 확대하였다. 주거급여(임차급여)는 급지별로 2.9%~6.6% 인상(4인 가구, 서울 기준 월 31.5만원 → 33.5만원)하였으며, 교육급여는 2018년부터 초등학생에 대해서도 학용품비(월 5만원)를 신규 지급하고 중고등학생 부교재비(4.1만원 → 10.5만원), 학용품비(5.4만원 → 5.7만원)도 인상 한다. 의료급여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연계하여 본인부담 상한을 인하하고(2종 기준 연 120만원 → 80만원), 치매 · 아동입원 · 노인틀니 등에 대한 본인부담을 완화하였다.

근로능력 있는 기초수급자의 자활 · 자립 지원도 강화한다. 2018년 자활급여 단가를 최대 8.2% 인상하고 자활근로 일자리도 1,500개를 확대(45,000개 → 46,500개) 한다. 특히, 청년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탈수급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신규 도입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만 34세 이하 청년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산정시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로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입금하고, 수급자가 통장을 3년간 유지하면서 탈수급할 경우 정부 장려금까지 합쳐 총 1,500만원 수준을 지급할 계획이다.

2018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1.16%)을 반영하여 긴급복지 소득 선정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생계비 · 주거비 등 지원금액도 인상한다. 특히,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위기사유를 주소득자의 실직 · 휴폐업시 뿐만 아니라 주소득자 못지 않은 소득을 올리던 '부소득자'의 위기까지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보완하였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전국 (3,502개소 읍면동)으로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발굴하고 긴급복지 지원과 연계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표 1-2] 기초생활보장 부문 합계 및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a)	2018년 (b)	증감률 ((b-a)/a)	비 고
합 계	104,904	113,147	7.9	
생계급여	36,702	37,216	1.4	· 4인가구 급여 134 → 136만원
의료급여	47,992	53,466	11.4	· 단가인상, 부양의무완화
주거급여	9,399	11,252	19.7	· 급지별 임차급여 2.9~6.6%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18.10)
교육급여	1,282	1,312	2.4	· 중고생 기준 월 9.5만원 → 16.2만원
자활사업	3,426	3,756	9.6	· 급여단가 최대8.2%인상
긴급복지	1,113	1,113	-	

▣ 취약계층

장애인의 사회참여 · 자립생활 및 권익증진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 (2017년) 26,082억원 → (2018년) 28,268억원 (8.4% 증가)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소득보전을 위한 장애인일자리 및 직업재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특히 장애인일자리를 2017년 1.6만개에서 2017년 1.7만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단가도 2017년 대비 16.4% 수준으로 대폭 인상한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의 대상인원을 2017년 6.5만명에서 2018년 7.1만명으로 확대하고 활동지원 바우처 단가도 2017년 대비 16.4% 수준으로 대폭 인상한다.

또한, 장애인 건강검진병원 10개소를 신규로 지정하고 장애인 건강검진 장비비를 지원하며,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3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여 취약한 장애인 의료 · 보건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지역아동센터 개소당 지원하는 기본 운영비를 2017년 월 473만원에서 2018년 월 516만원으로 43만원 인상한다. 위기 입양인 정착지원사업을 2018년 신규로 지원하고, 가정위탁 아동의 심리치료비 지원 기간도 확대(6개월 → 10개월)될 예정이다.

요보호아동과 저소득층 아동의 저축에 대해 정부가 일정액을 한도로 매칭 지원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 자립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도 2018년부터 기초수급 아동의 가입 가능연령을 기존 12~13세에서 12~17세까지로 확대될 예정이다.

[표 1-3] 취약계층 부문 합계 및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a)	2018년 (b)	증감률 ((b-a)/a)	비 고
합 계	26,082	28,268	8.4	
장애인일자리 지원	814	957	17.7	· 16.4% 단가 인상 · 복지형 1천개 확대
장애인활동지원	5,461	6,907	26.5	· 6.5 → 7.1만명
장애인연금	5,600	6,009	7.3	· 35.2 → 35.5만명 · 20.6 → 25만원/월
장애인건강보건관리	-	9	순증	· 장애인건강검진기관 10개소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개소
지역아동센터지원	1,472	1,587	7.8	· 운영비 월 473만원 → 월 516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	173	196	13.1	· 기초수급아동 가입가능연령 확대 · 12~13세 → 12~17세

▣ 공적연금 부문

연금 수급자 증가에 따른 연금급여를 차질없이 지원하는 한편,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 중이다.

☞ (2017년) 449,930억원 → (2018년) 478,007억원 (6.2% 증가)

4대 공적연금의 성숙으로 연금 수급자 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급여 지급도 확대된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452.7 → 478.1만명으로 25.4만명 증가하고, 이에 따라 급여지급액도 1.7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여타 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의 수급자수도 각각 45.8만명 → 48.8만명, 7.0만명 → 7.3만명, 10.5만명 → 10.7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2016년 3월 출범한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공적연금 통합재정추계를 실시하여 사회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자산운용협의회 운영 및 자산운용시스템 개편을 통해 적립금의 안정적 수익성을 제고하는 등 사회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표 1-4] 공적연금 부문 합계 및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a)	2018년 (b)	증감률 ((b-a)/a)	비 고
합 계	449,930	478,007	6.2	
국민연금	201,977	218,788	8.3	· 452.7 → 478.1만명
공무원연금	173,767	185,400	6.7	· 45.8 → 48.8만명
사립학교교직원연금	43,459	41,705	△4.0	· 7.0 → 7.3만명
군인연금	30,720	32,111	4.5	· 10.5 → 10.7만명

▣ 보육 · 가족 · 여성 부문

공보육 확충 · 보육교사 지원 확대를 통해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한부모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 (2017년) 59,225억원 → (2018년) 67,348억원 (13.7% 증가)

2018년에는 공립 · 공공형 등 공보육 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영유아 보육료 인상, 보조 · 대체교사 확대 등을 통해 보육환경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간제 보육 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등을 통해 가정양육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공립 · 공공형 어린이집 등 공보육의 확충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립어린이집을 2017년 180개소보다 많은 450개소를 신규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수한 민간 어린이집을 장기임차를 통해 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 등

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다양한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우수 민간 어린이집에 추가 지원을 통해 공립어린이집 수준의 보육을 제공하는 공공형 어린이집도 2017년 2,251개소에서 2018년 2,401개소로 150개소 확충하여 운영하고 지원단가도 367만원/월에서 382만원/월로 월 15만원 인상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를 역대 최고수준을 인상(1월부터 부모 바우처 2.6%, 기본보육료 21.8%)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도 의무화하여 보다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2017년 대비 보조교사는 4,000명, 대체교사는 1,000명 증원하여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당초 지급기간이 2017년까지였던 교사겸직 원장 수당도 월 7.5만원씩 2018년까지 연장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가정양육가구 지원을 위해서 시간제 보육시설을 2017년 380개소에서 2018년 443개소로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4개소 확충하며, 공동육아나눔터도 2017년 66개소에서 113개소로 늘리는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서 2018년 9월부터 2인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0～5세 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맞벌이 가정의 일 · 가정양립 지원 및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5%p) 및 시간제 정부지원시간을 연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한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의 건강한 양육과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비를 월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연령 만13세 미만에서 만14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한다. 청소년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는 월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한다.

[표 1-5] 보육 · 가족 · 여성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a)	2018년 (b)	증감률 ((b-a)/a)	비 고
합 계	59,225	67,348	13.7	
영유아보육료지원	31,292	32,575	4.1	· 부모바우처 2.6%, 기본보육료 21.8% 인상
아동수당	-	7,096	순증	· 소득하위 90% 0~5세 아동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9,019	9,877	9.5	· 보조교사 4천명, 대체교사 1천명 확대
공공형어린이집	558	610	9.3	· 2,300 → 2,401개소
아이돌봄지원	868	1,084	24.9	· 시간제 정부지원시간 연 480 → 600시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871	894	2.7	· 지원연령: 만 13세 → 만 14세 미만 · 지원단가: 월 12만원 → 월 13만원

▣ 노인 · 청소년 부문

노후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노인일자리 확대 및 단가 인상을 지원하며, 취약계층 아동 ·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 (2017년) 98,013억원 → (2018년) 112,749억원 (15.0% 증가)

소득보전을 강화하고 높은 노인빈곤율을 완화(2015년 44.8%)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확대한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70%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수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2017년 498만명에서 2018년 517만명으로 확대되며, 지원금액도 2017년 월 20.6만원에서 2018년 9월 월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어르신의 사회참여를 통한 소득확충 및 건강유지를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2017년 43.7만개 일자리를 2018년 51.4만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활동수당을 2017년 월 22만원에서 2018년 월 27만원으로 인상하고 시장형 노인일자리 활동수당도 2017년 연 200만원에서 2018년 연 21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치매국가책임제를 이행하기 위해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치매요양시설도 192개소를 확충한다.

아울러 위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위기 청소년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심리적 · 정서적 지지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동반자를 2018년 115명 증원하고, 협력 연계망인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전국 224개소에서 226개소로 늘려 위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확대 및 내일이룸학교(구 취업사관학교) 지원인원 확대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가출 청소년에 대한 조기 발굴 및 보호 ·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쉼터를 확대하고 거리상담 전문요원 또한 30명 증원한다. 아울러 가출 청소년의 장기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청소년자립지원관을 4개소 신규 지원하는 등 빈틈없는 청소년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이 근로현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현장도우미가 직접 찾아가 고용주와의 중재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표 1-6] 노인·청소년 부문 합계 및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a)	2018년 (b)	증감률 ((b-a)/a)	비 고
합 계	98,013	112,749	15.0	
기초연금	80,961	91,229	12.7	· 498.3 → 516.7만명
노인일자리 운영	4,664	6,349	36.1	· 43.7 → 51.4만개
치매관리체계구축	154	1,457	846.0	· 치매안심센터 252개소
청소년유해환경개선 및 피해예방	49	54	12.1	· 청소년근로권익보호사업 9억원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486	517	6.4	· 청소년동반자 1,146 → 1,261명, CYS-Net 224 → 226개소, 학교밖센터 202 → 205개소, 내일이룸학교 210 → 240명
청소년쉼터 운영	136	156	14.8	· 청소년쉼터 123 → 130개소, · 거리상담전문요원 30 → 60명, · 청소년자립지원관 4개소(신규)

▣ 노동 부문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일자리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고, 대상별 맞춤형 고용지원을 강화하여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한다.

☞ (2017년) 18조 2,653억원 → (2018년) 23조 8,104억원 (30.4% 증가)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여건을 확충하고, 청년들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추경을 통해 도입된 청년 핵심 일자리사업(3종)을 2018년도에는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은 2017년 추경 시 3천명에서 2018년 15천명으로 확대하고, 취업성공패키지는 청년들의 구직활동 애로 해소를 위하여 '청년구직 촉진수당'을 2017년 9.5만명에서 2018년 19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

수준을 2017년 1,200만원에서 2018년 1,600만원으로 확대하고, 그간 제한된 참여경로를 폐지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 이후에만 가능한 육아휴직을 2018년 하반기부터 임신기에도 가능(임신기 육아휴직)토록 하고,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을 인상(2017년 150만원 → 2018년 160만원)한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도 2017년 9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간은 통상임금 80%로 인상하였으며, 2018년 7월부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도 2017년 통상임금 60%에서 2018년 통상임금 80%로 인상한다.

'재직 → 전직 · 재취업 → 은퇴' 단계별 중장년 재취업 지원을 위해 「생애경력 설계 서비스」를 확대(2017년 20천명 → 2018년 25천명)하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컨설턴트를 증원 배치(36명 증원)함으로써 프로그램 운영의 질을 제고 한다. 또한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신직업 도전이 가능한 노년플래너 등 55개 직무)에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창출장려금'(86억원 규모)을 신설하여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급 인력양성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체계 전반을 혁신한다. 구직자 훈련은 공공 · 민간부문 전반에 신기술 훈련과정을 확산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공공부문은 바이오, IoT 등 하이테크 훈련과정(1년 과정, 545명, 27억)과 신성장 · 융복합분야(3개과정, 90억원) 훈련과정을 신설하고, 폴리텍 학과를 미래성장동력 산업에 맞게 개편(8개학과, 85억)한다. 민간부문은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을 지속 확대(2017년 600명 → 2018년 1,000명)할 계획이다. 재학 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기업 · 산업계가 현장에 맞는 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일학습병행제는 인적자원개발 역량이 있는 기업 중심으로 확대(2017년 9,500개 → 2018년 12,000개)하고, 특성화고 재학생을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기존 교과과정을 미래 신기술 분야로 개편하는 '4차 산업혁명 선도 고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신설(2018년 신규, 13억, 8개학과)한다. 아울러, 부처 간 훈련사업 통 · 폐합 후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훈련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직업훈련

(2018년 신규, 9억원, 1,000명)을 신설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 영세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사업주에게 지원(2018년 신규, 2조 9,708억원)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험료 지원대상 월 보수(2017년 140만원 → 2018년 190만원)를 확대하고, 신규가입자의 지원비율도 상향조정(2017년 60% → 2018년 80%~90%) 한다.

[표 1-7] 노동 부문 합계 및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비 고
합 계	182,653	238,104	30.4	
일자리안정자금지원	-	29,708	순증	· 2,998천명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5,202	8,932	71.7	· 155 → 225만명
취업성공패키지	3,305	5,029	52.2	· 청년구직촉진수당
청년내일채움공제	1,970	3,555	127.6	· 5만명
고용창출장려금	2,620	3,926	49.8	·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등
모성보호육아지원	10,846	13,111	20.9	· 출산휴가급여 등 인상
일학습병행운영지원	1,295	1,317	1.7	· 0.95 → 1.2만개
고용보험기금	98,578	109,223	10.8	· 구직급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53,129	59,256	11.5	· 산재급여 등
임금채권보장기금	4,484	4,558	1.7	· 체당금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2,993	3,673	22.7	· 장애인고용 장려금등
근로복지진흥기금	1,417	1,359	△4.1	· 생활안정자금 등

▣ 보훈 부문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5%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을 각각 월 8만원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도 월 33.5만원~46.8만원 신설한다. 또한,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율은 60%에서 90%로 확대하고, 지방보훈병원 4개소에 전문재활센터 단계적 확충(2018년~2020년), 전북권 보훈요양원 신규 설치 등을 통해 보훈의료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 (2017년) 49,754억원 → (2018년) 55,256억원 (11.1% 증가)

2018년에 보상금(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포함)을 5% 인상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또한 민주화 공헌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4.19혁명공로자 보상금을 월 17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전몰 · 순직유족 보상금은 7.0% 인상 하였다.

• 보상금 : (2017년) 최대 월 5,258천원 → (2018년) 최대 월 5,521천원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은 각각 월 8만원 인상하여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예우를 강화한다.
고령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율도 60%에서 90%로 대폭 확대한다.

• 참전명예수당 : (2017년) 월 22만원 → (2018년) 월 30만원
• 무공영예수당 : (2017년) 월 28~30만원 → (2018년) 월 36~38만원
•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율 : (2017년) 60% → (2018년) 90%

생활형편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을 신설하였다. 지원대상은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자녀로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에게는 월 46.8만원,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에게는 월 33.5만원을 지급한다.
상이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위해 총 사업비 681억원을 들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보훈병원 4개소에 전문재활센터를 연차적으로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현재 전국 6개소(수원, 광주, 김해, 대구, 대전, 남양주)에 운영 중인 보훈요양원은 강원권 공사비 105억원, 전북권 부지매입 및 설계비 등 21억원을 반영하여 보훈요양수요에 적기 대응할 계획이다.

- 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 (2018년) 17억원 (신규)
- 보훈요양원 건립 : (2017년) 21억원 → (2018년) 126억원

2019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사전 준비를 위해 30억원을 편성하였고,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서대문구 의회 부지를 활용하여 총사업비 364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표 1-8] 보훈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비 고
합 계	49,754	55,256	11.1	
보상금*	30,976	32,654	5.4	· 5% 인상
참전 · 무공수당	6,755	8,418	24.6	· 월 8만원 인상
진료비	5,544	7,009	26.4	· 참전유공자 감면율 60 → 90% 확대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	526	순증	· 월 33.5 ~ 46.8만원
보훈요양원	21	126	500.0	· 전북권 신규 설치
100주년 기념사업	–	30	순증	
임정기념관 건립	10	74	640.0	

*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포함

▣ 주택 부문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하려는 근로자·서민에게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속 지원한다.

☞ (2017년) 212,421억원 → (2018년) 233,870억원 (10.1% 증가)

2018년 주택부문 정책 패러다임은 과거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으로 전환하였다. 주거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임대주택과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개인의 생애단계 진전에 맞추어 패키지로 지원하고,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년·신혼·고령가구의 주거사다리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을 17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2017년 10.6조원에서 2018년 12.8조원으로 약 2.2조원 확대하였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 사업형태는 유지하면서 공급입지, 공급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각 생애단계별 수요를 최대한 고려할 계획이다.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 사업의 예산 규모는 7.4조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주택저당증권(MBS)·은행 재원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여 필요시 저리의 정책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이차보전 예산을 확보하였다.

수혜계층별로 보면 청년층에게는 도심내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셰어하우스, 일자리 연계형(산단형 주택), 여성안심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취업준비생 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 확대(월 30만원 → 40만원)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에게는 특별공급비율 상향, 국민임대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 신혼부부 매입

임대 신규 도입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총 3만호를 공급하고, 평형 확대 및 특화 시설 강화 등으로 정주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구입 · 전세자금 지원 사업에 신혼부부 전용 상품을 도입하여 대출한도 상향,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령가구를 위해서는 임대 주택 건설시 문턱제거 ·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고, 홀몸 어르신 안심센서 등을 통해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연금형 매입임대 등 생활자금 마련도 지원할 계획이다.

그밖에 저소득 ·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7만호 이상 공급하고, 소득이 낮은 서민 · 실수요자에 대하여 금리 인하 등 혜택을 확대하는 등 정책모기지의 공공성 및 효과성 강화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표 1-9] 주택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비 고
합 계	212,421	233,870	10.1	
주택구입·전세자금*	92,674	73,500	△20.7	
영구임대 출자	445	645	44.9	· 0.2 → 0.5만호(사업승인)
국민임대 출 · 융자	5,404	6,202	14.8	· 0.7 → 1.9만호(사업승인)
행복주택	25,070	23,441	△6.5	· 4.8 → 3.5만호(사업승인)
매입임대	10,453	17,828	70.6	· 1.2 → 1.6만호
전세임대*	–	33,010	순증	· 2.7 → 4.0만호
집주인임대주택	–	2,933	순증	

* 2018년부터 내역사업인 전세임대사업(2018년 3.3조원)이 임대주택 지원으로 프로그램 변경

▣ 보건의료 · 건강보험 및 식품의약안전 부문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및 보건의료산업 진흥을 지원하고, 감염병 대응역량과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 (2017년) 103,558억원 → (2018년) 108,574억원 (4.8% 증가)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재난적 의료비 제도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지속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예방접종에 초등학생까지 독감 예방접종을 추가하여 겨울철 독감 유행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결핵안심국가 사업의 일환으로 의료기관, 어린이집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더불어, 노인과 외국인근로자 결핵검진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외상의료진 처우개선을 위한 권역외상센터 지원 확대(400억원 → 601억원)와 응급이송 체계 개선을 위한 응급의료전용헬기 확충(6기 → 7기), 급성 심뇌혈관 질환자를 위한 권역 심뇌혈관센터를 확대 설치한다.(12개소 → 14개소)

감염병 예방 및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각 1개소)을 구축 지원하고,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확대(7개소 → 9개소)하는 한편 긴급상황실 및 즉각 대응팀을 24시간 체재로 가동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시설개선지원(72억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스크린 도어설치(신규 4개소) 등을 통해 병문안 문화도 개선한다.

제약 · 의료기기 · 한의약 등 각 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투자를 내실화하여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한다. ICT기반 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 구축 · 임상개발컨설팅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신약개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의 임상정보시스템 개발 및 한약제제의 안정성 · 유효성을 합리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임상인프라 구축 지원 등 전략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보건산업을 진흥한다.
식품에 대한 기준규격 재평가를 보다 정확하게 추진하기 위해 조리를 거칠 경우 실제

발생하는 유해성분과 유용성분의 변화량을 분석하고, HACCP 인증 시 서류 확인 위주의 평가에서 생산품 등에 대한 현장 검사결과를 반영한 검증위주의 평가로 전환할 계획이다. 필수의약품 공급 안전화를 통한 국민의 치료기회 보장을 위해 위탁 제조 및 총괄운영을 실시하고, 첨단 의료기기 지원 및 의약품 신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맞춤형 의료기기(3D 프린팅)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적용 예시 모델을 개발한다.

[표 1-10] 보건의료 · 건강보험 및 식품의약안전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비 고
합 계	103,558	108,574	4.8	
보건의료	23,405	24,420	4.3	· 국가예방접종(3,143→3,421억원)
건강보험	75,811	79,434	4.8	· 건보지원(68,764→71,733억원)
식품의약안전	4,342	4,719	8.7	· 식품안전관리인증원(156→190억원)

참고1

일자리 분야

참고 1-1 재정지원 방향

2018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 규모는 총 19.2조원으로 2017년 17.2조원 대비 12.6%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청년·여성·신중년 등 대상별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지원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과 일자리 안전망 강화에 투자의 중점을 두었다.

새 정부 들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일자리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2017년 일자리 예산은 2017년 대비 12.6% 증가한 19.2조원 수준으로 최근 5년간 일자리예산 연평균 증가율 7.9%를 훨씬 상회한다.

일자리 예산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용에 긍정적인 고용서비스(+20.4%), 고용장려금(+16.2%) 위주로 투자를 확대하였다. 다만, 직업훈련은 질적 구조조정을(2.25 → 2.1조) 실시하였고, 직접일자리는 노인, 장애인 등 수요가 높은 분야 위주로 확대하였다.

대상별로는 청년(+20.9%)·노인(+39.2%)·여성일자리(+17.6%)를 대폭 확대하였고, 장년(△6.0%)은 인턴제 폐지(△241억), 장년고용지원금(86억, 신설) 등 증감요인이 반영되어 규모가 축소되었다.

이와 함께, 2018년에는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참여자 데이터에 기반하여 평가하고,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에는 사업별로 취업률·고용유지율 등 성과지표, 고용영향평가, 현장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상대평가하여 사업별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구조 개선이나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 사업 목적과 정책대상이 유사·중복되는 사업의 개편 방안 등을 담을 계획이다.

[참고 1-1] 일자리분야 재정투자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합 계	170,736	192,312	12.6
직접일자리	27,069	31,961	18.1
직업능력개발훈련	22,460	20,645	△8.1
고용서비스	7,999	9,354	16.9
고용장려금	31,752	37,879	18.9
창업지원	22,003	24,475	11.2
실업소득 유지 · 지원	59,453	67,998	14.4

참고 1-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직접일자리 창출

청년, 어르신,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직접 일자리 83.2만개를 창출한다.

☞ (2017년) 27,069억원, 76.5만개 → (2018년) 31,961억원, 83.2만개

2018년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은 전년보다 6.8만개 증가한 83.2만개를 지원한다. 이 중 수요가 높은 장애인활동지원(2017년 5.7만명 → 2018년 6.2만명) 및 아이돌봄서비스 (2017년 2.0만명 → 2017년 2.3만명) 등을 확대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또한, 어르신의 일자리 기회 제공을 위해 노인일자리 규모를 7.8만개 확대(2017년 43.7만명 → 2018년 51.4만명)한다. 이와 함께, 지역공동체일자리 규모를 늘리는 등 (2017년 0.8만명 → 2017년 1만명) 지역단위 취업 기회 제공에도 기여한다.

[참고 1-2] 직접일자리 창출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합 계	27,069	31,961	18.1
장애인활동지원	5,461	6,907	36.8
노인일자리	4,578	6,262	22.9
지역공동체 일자리지원	279	343	24.9
아이돌봄서비스	868	1,084	30.5

▣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존 직업훈련 시스템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신기술 · 고숙련 직업훈련 중심으로 재편하고, 청년 대상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대폭 확충한다.

☞ (2017년) 22,460억원 → (2018년) 20,645억원 (8.1%감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람' 중심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부처간 유기적 협업이 핵심이다. 신산업 육성과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역량을 집중한다.



폴리텍 하이테크 훈련과정,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 등 신기술 훈련과정을 지속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 유망분야 선도 고졸인재 양성사업'을 통해 특성화고 학과를 신기술 중심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기존 직업훈련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업기간 1년 미만 영세 자영업자, 대기업

소속 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통해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지원도 강화한다.

[참고 1-3] 직업능력개발훈련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합 계	22,460	20,645	△8.1
건설근로자기능향상 및 취업지원	74	107	43.5
실업자능력개발지원	600	678	13.0
전직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5,449	5,253	△3.6
중견 · 중소기업현장훈련지원	113	152	34.6
장애인직업능력개발	233	341	46.6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213	269	26.1
SW전문인력역량강화	226	266	18.0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R&D)	675	839	24.3

▣ 고용서비스

적극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 및 장애인에게 구직촉진 수당을 지원한다. 또한, 대학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확대하여 고용서비스 제공을 획대한다

☞ (2017년) 7,999억원 → (2018년) 9,354억원 (16.9%증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에 대해 월 3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본격 지원(2017년 9.5만명 → 2018년 19만명)하여 청년층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해 청년장애인구직촉진수당(30만 × 3개월) 신설 및 취업성공수당을 개편(2017년 100만원 → 2018년 150만원)하여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확대 지원한다.

대학일자리센터를 확대(2017년 70개소 → 2018년 100개소)하여 청년의 취·창업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5개소 신규 설치(2017년 145개소 → 2018년 150개소)한다. 또한 40세 이상 신중년 인생 3모작 지원 인프라 확대를 위해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컨설턴트를 증원(2017년 200명 → 2018년 236명)하고, 생애경력 설계 서비스 지원을 확대(2017년 2만명 → 2018년 2.5만명)한다.

[참고 1-4] 고용서비스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합 계	7,999	9,354	16.9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	115	순증
갱생보호활동	-	72	순증
고용서비스모니터링	33	47	40.0
중장년층취업지원	237	251	6.0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295	319	8.0
취업성공패키지	3,305	5,029	52.2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110	144	30.0

▣ 고용장려금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을 본격 시행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인원을 확대하고,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사업을 신설한다.

☞ (2017년) 31,752억원 → (2018년) 37,879억원 (18.9%증가)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이 청년을 3명 이상 채용 할 수 있도록 3명 정규직 채용시 1명의 인건비를 3년간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을 2017년 3천명에서 2018년 15천명 규모로 본격 시행한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참여경로를 폐지하는 등 참여 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2년 이상 장기 근속 및 자산 형성(5만명)을 적극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인원(2017년 2,100명 → 2018년 4,459명)을 확대한다. 또한 양질의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8년부터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참고 1-5] 고용장려금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합 계	31,752	37,879	19.3
청년내일채움공제	476	3,555	646.8
고용유지지원금	850	336	△60.5
고용장려금 융자	678	425	△37.3
고용창출장려금	2,620	3,926	49.8
고용안정장려금	1,066	1,265	18.7
모성보호육아지원	10,846	13,111	20.9
직장어린이집지원	1,218	1,451	19.2

▣ 창업지원 및 실업소득 유지 · 지원

청년창업자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One-stop 밀착 지원으로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를 인상하며, 체불노동자 생계보호 강화를 위해 체당금 지급을 확대한다.

☞ 창업 : (2017년) 22,004억원 → (2018년) 24,475억원 (11.2%증가)

☞ 실업 : (2017년) 59,453억원 → (2018년) 67,998억원 (14.4%증가)

청년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쉽게 창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 창업자에게 교육, 사업화 지원, 자금, 보육 등 창업 전 단계를 연계 지원하는 '창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을 확대(40억 증)하고, 실패 중소기업인에 대해 재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한다.(151억원 → 1 97억원, 47억원 증)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 하한액을 인상(2017년 46,584원 → 2018년 54,216원)한다. 또한 체불노동자 생계보호 강화를 위해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인상(2017년 300만원 → 2018년 400만원)하고, 지급인원을 확대(2017년 5.3만명 → 2018년 5.6만명) 한다.

[참고 1-6] 창업지원 및 실업소득 유지 · 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합 계	81,457	92,473	13.5
대학창업펀드	120	150	25.0
창업사업화지원	1,261	1,535	21.7
창업기업자금융자	16,500	18,660	13.1
창업저변확대	478	562	17.7
구직급여	53,351	61,572	15.4
체당금지급	4,044	4,099	1.4

교육분야 02

2-1 재정지원 방향

2018년 교육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64.2조원이며, 2017년도 57.4조원보다 11.8% 증가한 수준이다.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2.9조원에서 49.5조원으로 대폭(15.4%) 증가하였다. 2018년에는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을 전액 국고로 지원(2조 586억원)하고, 소외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대별 강점 분야 지원을 통해 국립대학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연계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및 행복기숙사 건립 등을 지원한다. 구직자·재직자가 단기에 기업이 원하는 필수 직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산업연계 단기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을 통해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기회를 국가 차원에서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 유아에서 대학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책임 강화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을 전액 국고로 지원(2조 586억원)한다.

소외계층 대상 잠재력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추진을 위해 소득연계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행복기숙사 건립을 지원하여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통한 지식정보 · 융합 교육 강화

소프트웨어교육 필수화에 맞춰 예비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소프트웨어 교육이 학교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려 학생 참여 중심의 융합형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고, 교사연구회 및 STEAM교육 연수인원을 확대하여 창의 · 융합형 인재양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고등교육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등교육의 질 제고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 등을 통해 대학별 강점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국립대학 고유의 사회적 책무와 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부가가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창업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 운영을 지원하고, 대학 창업기업들이 대학창업펀드를 통해 창업 초기 단계부터 대학 내 창업 생태계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 개인의 역량개발을 위한 성인평생학습 활성화

재직자, 구직자가 기업 ·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전문직무를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도록 산업연계 단기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을 통해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기회를 국가 차원에서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표 2-1] 교육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합 계	574,123	641,898	11.8
유아 및 초 · 중등교육	471,494	537,165	13.9
고등교육	94,584	96,742	2.3
평생 · 직업교육	6,935	6,726	△3.0
교육일반	1,110	1,265	14.0

2-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유아 및 초 · 중등교육 부문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여 유아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고, 소외계층 대상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재능이 발현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재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2017년) 471,494억원 → (2018년) 537,165억원 (13.9% 증가)

20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을 전액 국고로 지원(2조 586억원)하여 그 간의 정부 – 시 · 도교육청 간 갈등을 해소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부담비율(금액)



탁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경제적 여건이나 사회적 · 지리적 배경으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소외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는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교육 역량을 갖춘 우수한 예비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초등 교원양성 대학의 소프트웨어교육 교육과정과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통해 예비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소프트웨어교육이 학교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등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 참여 중심의 융합형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고, 교사연구회 및 STEAM교육 연수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표 2-2] 유아 및 초 · 중등교육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합 계	471,494	537,165	13.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29,317	495,407	15.4
영재교육지원사업	3	13	333.3
소프트웨어인재양성기반구축	-	26	순증
융합형과학기술인재양성기반구축	20	26	30.0

▣ 고등교육 부문

국립대별 강점 분야를 지원하여 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연구자 주도형 이공분야 기초연구 예산을 확대하여 연구 저변 확대와 국가연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반값 등록금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해외연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2017년) 94,584억원 → (2018년) 96,742억원 (2.3% 증가)

교육 · 연구의 지역 허브이며 지자체-지역기업 등과의 주요 접점인 국립대학의 혁신 및 집중 육성을 위해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을 확대(210억원 → 800억원)하고 혁신도시 내 지역대학과 공공기관 간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양질의 일자리 취업을 통한 지역우수 인재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 이해도가 높은 학생을 모집하여 창업 실행 역량을 갖추도록 창업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원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5개교 내외)을 시범 운영하고 대학 창업기업들이 창업 초기 단계부터 대학 내 창업 생태계 속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학창업펀드 지원규모를 확대(120억원 → 150억원)할 계획이다.
이공 분야 풀뿌리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기반한 혁신적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개인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3,034억원 → 3,484억원)한다. 특히, 단기 성과 중심 연구가 아닌 실패 가능성을 전제한 창의·도전적 연구와 국가 차원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보호·소외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집중 강화할 계획이다.

학생,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추진을 위해 소득연계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생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의 공공기금을 지원하여 공공·연합기숙사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우수 고교생의 해외 대학 지원을 확대(20명 → 50명)하고, 어려운 환경의 대학생들도 다양한 도전과 글로벌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파란사다리 사업(800명)을 신규로 시행하며, 저소득층 대학원생 대상 국비유학 선발 인원을 확대(10명 → 20명)할 계획이다.

[표 2-3] 고등교육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합 계	94,584	96,742	2.3
국립대학 혁신지원	210	800	281.0
대학원특화형창업선도대학육성	-	8	순증
대학창업펀드 조성	120	150	25.0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830	1,040	25.3
개인기초연구	3,034	3,485	14.9
맞춤형국가장학금지원	39,450	39,958	1.3
행복기숙사지원사업	1,018	1,116	9.6
글로벌현장학습프로그램운영	85	123	44.7

▣ 평생 · 직업교육 부문

산업연계 단기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구직자 · 재직자가 기업 수요에 맞는 직무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소외계층의 실질적 평생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평생교육 바우처를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치 · 운영하고, 특수외국어 교육기반 조성을 위해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2017년) 6,935억원 → (2018년) 6,726억원 (3.0%감소)

재직자, 구직자가 기업 ·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전문직무를 단기간(6개월 내외)에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모델을 개발하는 산업연계 단기 교육과정(한국형 나노디그리)을 운영할 계획이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실질적인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원한다. 그간 초 · 중등 및 고등교육 단계 중심인 교육 희망사다리를 평생교육까지 확대하여,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기회를 국가 차원에서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K-MOOC 강좌를 확대(300개 → 500개)하여 성인학습자가 저명한 대학교수 · 우수한 강의에 쉽게 접근하고 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내년부터 국가수준의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를 신규로 설치 · 운영한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 교구 개발,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체제 구축 등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중국 위해시 중세한국국제학교의 한국부 운영 중단(2018.3.)으로 인한 교민자녀의 교육공백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3월 웨이하이한국학교를 신설하고, 한-프 간 행정약정(2016. 6.)에 따라 개설된 프랑스 내 한국어 국제섹션 수업을 담당할 정규교사를 파견(4개교 5명 내외, 1.7억원)할 계획이다.

[표 2-4] 평생 · 직업교육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합 계	6,935	6,726	△3.0
산업연계 단기 교육과정	-	16	순증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	24	순증
K-MOOC	69	78	13.0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운영지원	-	13	순증
재외동포교육운영지원	673	689	2.4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	-	32	순증

문화·체육·관광 분야

03

3-1 재정지원 방향

2018년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6.5조원 수준으로 2017년 6.9조원보다 6.3% 감소하였다.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예술 및 문화산업 전반에서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시장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국민 100세 시대에 대비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한다.

▣ 예술인의 창작권을 보장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유 지원 확대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금고를 구축하고, 지역에서 예술인이 활용할 수 있는 공연연습공간을 확대 조성한다. 소외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금액을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 생활 속에서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예술동아리 교육 실시 및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를 신규 조성한다.

▣ 콘텐츠 기업 성장 금융기반 마련과 불공정 관행 개선 등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콘텐츠산업 재도약

국내 콘텐츠시장에서의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창작자 권리보장 강화를 위한 공정한 콘텐츠산업 환경을 조성하고 해외유통시장 촉진을 통한 수출 시장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4차산업 혁명시대에 부응한 콘텐츠 산업 성장 금융기반 확충을 위한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 조성을 확대하고 중소콘텐츠기업의 운영 및 제작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을 신규로 도입한다.

▣ 쉼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

내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여행 주간, 여름관광 캠페인을 전개하고 근로자 휴가비 지원을 통한 기업 · 근로자의 휴가문화를 개선한다. 세계가 찾고 싶은 한국을 만들기 위해 해외시장별 외래관광객 유치활동의 적극적인 전개, 전략적 해외 홍보활동 강화,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거점 조성 등을 추진한다. 또한 의료, 웰니스, MICE 등 고부가 관광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전통시장 · 스포츠 한류 · 공연관광 등 테마별 관광콘텐츠를 활용하여 외래관광객 대상 먹거리, 볼거리 제공을 통해 방한 관광 만족도를 제고한다.

▣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제공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고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확대로 국민 체육복지의 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국가대표 선수 전략종목을 집중 육성하고 경기단체 경기력향상 및 훈련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한다. 아울러,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 · 운영 지원으로 스포츠를 통한 국격 제고 및 체육교류 · 협력을 통한 평화증진을 도모한다.

[표 3-1] 문화 · 체육 · 관광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합 계	68,932	64,606	△6.3
문화예술	27,166	27,201	0.1
관광	15,538	14,021	△9.8
체육	15,021	11,850	△21.1
문화 및 관광 일반	2,981	3,180	6.7
문화재	7,891	8,017	1.6

3-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문화예술 부문

지역 및 계층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역량을 확대하여 누구나 일상 속에서 쉽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예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창작을 활성화하여 건강한 예술생태계를 구축한다.

☞ (2017년) 27,166억원 → (2018년) 27,201억원 (0.1%증가)

소외계층의 다양한 문화 향유를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 금액을 인상(1인당 6만원 → 7만원)하여 계층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699억원 → 821억원), 지역 문화 자원을 공유하는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확대(162억원 → 176억원)함으로써 국민문화 향유권을 지속 신장시킬 계획이다.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신규, 15억원) 및 아동 · 청소년 예술교육센터를 조성(신규, 40억원)하여 국민의 예술 감수성과 창의성 증진을 도모하고, 국공립 도서관 · 박물관 등 문화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인문정신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지속적으로 도모한다.
(156억원 → 169억원)

일상생활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역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1,790억원 → 1,800억원), 「문학진흥법」 제18조에 따라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추진하여 문학 자료의 수집 · 보존 · 복원과 연구 · 전시 · 교육기능을 갖춘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신규, 30억원)

문화적 공간 조성 및 문화콘텐츠 개발 · 보급을 핵심으로 하는 문화적 도시재생(신규 4억원),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서 문화도시 육성을 위한 문화도시 컨설팅(신규 1억원), 전국 폐산업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 및 산업단지 내 문화공간 확보 등과 같이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 세종학당을 한국어 · 한국문화 보급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219억원 → 224억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한국어 말뭉치(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국가 언어 자원의 활용성 제고 및 확산을 도모하고자 한다.(신규, 11억원)

열악한 창작환경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확대 지원(251억원 → 276억원)하고, 경력단계별로 창작 지원을 활성화하여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예정이다.(311억원 → 342억원)

문화콘텐츠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및 프로젝트 제작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콘텐츠 기업 이차보전사업을 실시한다.(신규 20억원) 기업별 융자한도는 3~5억원이며, 선정된 기업은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일반 대출금리보다 2%p 낮은 이자부담을 지게 된다.
이를 통해 융자를 원하는 기업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콘텐츠산업 내 제1금융권 자금융통을 유도한다.

콘텐츠공정상생센터를 구축(신규, 1.35억원)하여 게임, 대중문화, 음악, 웹툰 등 콘텐츠 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한다. 산업 구성원들은 임금체불, 불공정한 계약 강요, 수익배분 거부 등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하여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조정절차 활용 및 소송지원과 같은 사후조치도 지원한다. 한편, 콘텐츠 장르별 불공정행위 유형분석, 인식조사 등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문화콘텐츠 수출의 성장세가 둔화된 가운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및 해외유통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한류 선호도 및 시장 구매력을 갖춘 동남아와 중남미 지역을 차세대 시장으로 개척하고, 이를 위해 문화콘텐츠 중심으로 화장품 · 의류 · 식품 등 연관 산업까지 확장한 K-콘텐츠 엑스포 개최(4회, 중남미 동남아) 등을 통해 현지 한류 붐을 조성



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국내외 저작권 보호를 통한 콘텐츠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새로운 공공기관인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운영 지원(신규, 7억원)을 통해 기관 필수 정보자원 보안 체계를 구축한다. 권리자 주도 불법유통 자동감시망을 확대(6억원 → 9억원)하여 해외에서의 한류콘텐츠를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또한,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한 저작물 공정이용을 위한 서비스R&D에 대한 투자를 확대(21억원 → 39억원)한다.

출판수요 창출을 위한 2018 책의 해(신규, 20억원) 및 전근대적인 출판유통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출판유통통합시스템 구축(20억원), 파주출판단지 세계문화클러스터 육성(신규, 7억원) 등 출판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해 지원한다. 또한,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2018 직지코리아(신규, 18억원)행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표 3-2] 문화예술부문 주요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합 계	27,166	27,201	0.1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	1,071	1,181	10.3
한글의 가치확산	268	289	7.8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251	276	9.7
예술창작지원	311	342	9.8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1,197	1,244	3.8
지역문화 진흥	362	451	24.6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6,332	13,332	110.5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19,989	23,053	15.3
저작권 보호 · 이용 활성화 기술개발	64	73	13.4
출판산업육성	229	293	27.8

▣ 관광 부문

근로자 휴가지원제 신규 추진 등 관광복지를 강화하고 관광벤처 육성, 외래관광객 안내체계 구축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에 주력한다.

☞ (2017년) 15,538억원 → (2018년) 14,021억원 (9.8% 감소)



여행 주간 전개 등 국민 관광의 새로운 수요창출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여행 주간, 여름관광 캠페인 전개 및 한국관광의 매력 홍보(120억원 → 116억원) 등을 통한 국내 여행 활성화 및 관광 산업 민간투자 활성화를 추진하고, 또한 근로자 휴가비 지원을 통한 기업 근로자의 휴가문화를 개선할 계획이다.(신규 25억원)

코리아 둘레길(15억원 → 31억원)을 통한 걷기여행 붐 확산 및 습지 · DMZ · 화석 · 동굴 등 우리 고유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관광 자원화 추진 및 특화관광명소를 중심으로 시설 · 콘텐츠 등을 종합 개선하고, 3~4개 지자체를 관광권역으로 연계하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240억원 → 240억원)

세계가 찾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외래관광객 방한시장별 맞춤형 마케팅 강화 및 고품격 관광여건 조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해외시장별 외래관광객 유치활동의 적극적인 전개(546억원 → 598억원), 전략적 해외 홍보활동 강화(255억원 → 257억원),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거점 조성 등을 추진하여 '한국관광 이미지' 홍보 및 외래관광객 유치를 확대한다.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 지속 추진 및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 중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 및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기업도시 진입 도로 지원 사업 등 체계적 광역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지역의 특색있는 역사, 문화, 생태자원을 관광자원화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관광벤처기업 발굴 및 관광벤처 육성펀드 조성(188억원 → 221억원) 사업으로 혁신적



관광기업 발굴과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육성 지원을 실시하고, 지역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관광사업체인 관광두레 조성(40억원 → 60억원) 사업을 통해 새로운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MICE산업육성(232억원 → 250억원), 의료 및 웰니스 관광(61억원 → 74억원), 크루즈 관광 등 고부가 관광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전통시장 스포츠 한류 · 공연관광 등 테마별 관광콘텐츠를 활용하여 외래관광객 대상 먹거리, 볼거리 제공을 통해 방한관광 만족도를 제고한다.

[표 3-3] 관광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합 계	15,538	14,021	△9.8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	1,696	1,197	△29.4
폐광지역 관광상품개발	189	139	△26.5
관광레저 기반구축	402	123	△69.4
국내관광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 지원	265	307	15.8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	188	221	17.6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지원	546	598	9.5
관광산업 융자지원	5,500	4,950	△10.0

▣ 체육 부문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생활체육 지원을 확대하고 스포츠를 통한 국위 선양을 위해 전문체육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을 강화하며, 성공적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최를 지원한다.

☞ (2017년) 15,021억원 → (2018년) 11,850억원 (21.1%감소)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제공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문화향유 기회 신장을 위하여 스포츠강좌 이용권 수혜인원(40,000명 → 43,750명) 확대, 국민체육센터를 기존 시·군·구 대상 거점형 에서 생활밀착형 중심으로 확대(20개소, 40억원) 지원한다. 또한, 여학생, 농산어촌 학생 등 대상 방과 후 스포츠프로그램을 확대(70억원)하고, 스포츠클럽 육성(134억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353억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118억) 등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회시설비 및 패럴림픽적립금, 올림픽코리아하우스 운영 등을 지원(434억원)하고, 올림픽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문화적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문화올림픽' 지원 사업(387억원 → 121억원)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올림픽 이외에도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등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335억원), 청소년스포츠교류 등 국제체육교류 지원(95억원) 사업을 통하여 주요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과 국제체육교류를 활성화하며, 도핑 방지활동 지원 강화(74억원 → 98억원), 개발도상국의 스포츠 발전 지원(58억원)을 통하여 스포츠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한다. 국가대표 선수, 후보 및 꿈나무양성 등 전문체육 경기력 강화를 위해 전략종목을 집중 육성하고 경기단체 경기력향상 및 훈련여건 개선 지원을 확대한다. (회원종목단체 지원 확대, 286억원 → 311억원)

스포츠산업 연구개발을 지속 지원하고(97억원 → 77.5억원), 업계의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해 기존(2015년~2017년)에 결성된 스포츠산업 펀드(845억원)에 100억원을 추가 출자하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업 지원 확대(26.6억원 → 35.8억원) 및 선도기업 육성 신규 추진(30억원) 등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대(126억원 → 136.7억원)한다. 또한 환경의 제약에서 자유로운 지속적인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가상스포츠교실 보급(64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장애인 전문체육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시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 장애인생활·전문·국제체육 지원 등 장애인 체육 활성화 사업(506억원)도 지속 추진한다.

[표 3-4] 체육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합 계	15,021	11,850	△21.1
생활체육 종목보급	238	240	0.8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179	201	12.3
국민체육센터건립지원	431	561	30.1
방과후스포츠프로그램 운영지원	200	270	35.0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	195	335	71.8
태권도 진흥	154	174	13.0
평창동계올림픽대회지원	2,696	434	△83.9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384	420	9.4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301	354	17.6
장애인 체육활성화 지원	517	506	△2.1

▣ 문화재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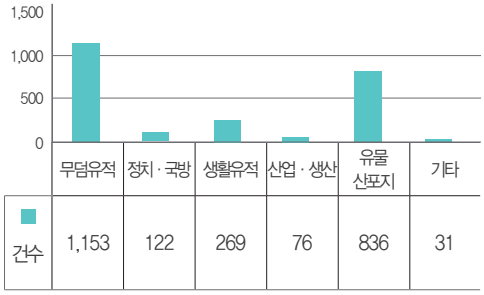
지속 가능한 문화재 보존 · 전승을 통해 문화유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확대로 국민의 문화 향유를 향상한다.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선진적인 문화재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국제사회 협력 강화로 국가 간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한다.

☞ (2017년) 7,891억원 → (2018년) 8,017억원 (1.6%증가)

문화유산의 역사성 복원과 신라왕경 및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복원 · 정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문화재 보존 · 전승을 추진한다. 서울 풍납토성 복원(490억원), 지역문화유산 관광자원 기반 구축(26개, 272억원), 가야문화권 유적의 체계적 조사로 가야사 가치를 재조명할 계획이다.



〈 신라왕경 월정교 복원 〉



〈 가야문화권 유적별 분포현황 〉

특히, 일제 강점기 변형 · 훼손된 경복궁 흥복전(2015년～2018년, 180억원), 광화문 월대 · 동서십자각 권역, 사직단(2015년～2027년, 165억원), 안동 임청각, 조선왕릉 능제 등을 중점 복원할 예정이다.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 및 발전방안 연구(2019～2019년)', '전승지원 통합 플랫폼 구축'(2018년～2020년),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권역별 실시(2억원)를 통해 무형문화재 전승 기반 강화 및 활성화에 노력한다.

궁 · 능 무료관람 확대, 창덕궁 인정전, 파주장릉 등 비공개지역의 단계적 개방을 확대

하고 4대궁 및 종묘 매 · 수표시스템 개선, 외국인 안내해설사 확충(56명 → 61명), 안내 브로슈어 다국어 확대 등 관람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민관람 편의 제고에 힘쓸 계획이다. 문화재 지진에 대비하여 건축문화재 유형별 내진성능 평가기준 마련(석조 · 목조), 지진 위험지도를 제작하고 현장별 재난대응 매뉴얼 작성 · 비치, CCTV 기능 개선으로 방재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한다.

문화재수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계약제도 합리화, 이력관리, 감리제도 개선, 하도급 계약 심사기준 마련 등 문화재 수리품질 향상과 설계 심사 내실화 및 중요 수리 현장공개 확대를 추진한다.

세계문화유산, 인류무형유산,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지속 추진하고 라오스 왓푸 유적 내 홍낭시다 사원 보수(9억원), 미얀마 바간유적 벽화 복원(2억원) 등 국제사회 지원을 확대하여 우리 문화유산의 국제 영향력 향상에 주력할 계획이다.

[표 3-5] 문화재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합 계	7,891	8,017	1.6
문화재정책기반 구축	570	524	△8.1
문화유산 교육연구	475	603	26.9
문화재 보존관리	3,363	3,339	△0.7
궁능원 관리	703	760	8.1
문화재 보호	712	622	△12.6
문화재연구소 운영	146	158	8.2
문화재 국제교류	598	568	△5.0
문화재 활용	448	481	7.4
문화재 행정지원	597	625	4.7
문화자원개발	222	277	25.0

R&D 분야

04

4-1 재정지원 방향

2018년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2017년 대비 1.1% 증가한 19조 6,681억원이다. R&D 분야의 예산 편성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융합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와 중기R&D 투자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 R&D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유지

[그래프 4-1] 정부 R&D 투자 추이(2009~2018년)



의무지출의 증가와 더불어, 일자리, 복지 등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재정소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 기술 진흥을

뒷받침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에 경주하였다. 2018년 R&D 예산 규모는 19.7조원으로 최근 1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5.3%에 달한다. 이는 동기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인 4.7%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그간 정부의 과학기술진흥 의지를 보여준다. 올해 R&D 예산 증가율(1.1%)은 전년(1.9%)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장기 계속사업에 대한 일몰 전환, 사업구조 정비, 기획 및 집행점검 등 투자 효율화 노력을 통해 이를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국정과제에 재투자하여 정부 투자의 전략성을 높였다.

[표 4-1] R&D분야 기술분야별 재정투자 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합 계	194,615	196,681	1.1
기초 · 나노	23,368	24,114	3.2
에너지 · 환경	21,849	22,093	1.1
우주항공 · 생명 등	50,407	49,972	△0.9
기계 · 제조 · 공정	14,330	13,849	△3.4
전자 · 정보	25,951	25,954	0.0
기타	58,709	60,698	3.4

▣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 · 융합기술 개발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어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선제적인 기술확보에 주력한다. 국내 · 외의 기술격차가 큰 AI(인공지능), IoT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핵심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여 선제적으로 기술경쟁력을 확보한다. 이에 따라 향후 해당 분야에서 신산업과 일자리의 창출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 기술간 융합이 제품 및 서비스로 상용화 될 수 있도록 국방, 의료, 제조, 자율주행차 등 각 분야의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임상 및 실증을 지원한다. 이들 테스트베드는 향후 공용 플랫폼으로 발전하여 산 · 학 · 연 융합연구의 토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 기술창업 · 중소기업 R&D 지원 확대로 신산업 일자리 창출

창업의 활성화와 기업의 성장은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창업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강화하여 기술창업 활성화를 촉진한다. 대학의 교원이나 학생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새로운 융합 기술개발과 신제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형 R&D를 적극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참여 기업은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에 따르는 위험을 분산하고, 기술개발 비용을 절감한다.

▣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R&D 지출효율화 추진

R&D분야를 구조조정하여 전년대비 약 1.0조원을 절감하였다. 지출 구조조정은 각 부처의 자율적인 구조조정과 전반적인 집행점검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장기 계속 사업의 일몰과 재기획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조조정 후 재투자' 시스템을 확립하였다.

또한, 지출 구조조정과 투자 시스템정비를 통한 지출효율화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각 부처의 자율 구조조정과 집행점검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및 융 · 복합 기술개발, 중소기업 R&D 지원, 그리고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하는 개인기초 및 집단연구 등에 재투자하여 재정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4-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 융합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 융합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핵심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 4차 산업혁명 R&D : (2017년) 12,126억원 → (2018년) 15,225억원 (25.6% 증가)

4차 산업혁명 관련 R&D 투자 확대를 위하여 기초과학, 핵심기술, 기반기술, 융합 기술, 공통기반 등 5대 영역에 걸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전략적으로 투자한다. 핵심기술, 기반기술, 융합기술에 걸쳐 각기 투자 전략을 설정하고, 단순한 사업별 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연관되는 기술 · 산업 · 제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하는 '패키지화 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국내 · 외 기술격차가 큰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대응 핵심 및 기반기술 개발에 전년 대비 12.8% 증가한 6,466억원을 집중 투자함으로써 기술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신산업 확산을 선도한다. 또한 국방, 의료, 제조, 자율 주행차 등 이종 (異種) 기술간 융합을 촉진하고 융합기술 테스트베드와 공용플랫폼 구축하는 등 기술실증 및 상용화 지원에 27.0% 증가한 6,907억원을 투자한다.

4차 산업혁명에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 저변의 전문 기술인력 양성이 시급한 과제이다. 그중에서도 SW교육은 가장 기본이 되므로, SW중심 대학을 기존 20개에서 25개로 확대 지원한다.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의 지능형 반도체, 스마트 설계 · 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과정도 기존의 14개(79억원)에서 17개 과정(124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표 4-2] 4차 산업혁명 대응 분야 R&D 투자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4차 산업혁명 대응 R&D	12,126	15,225	25.6
기초과학	758	936	23.5
핵심기술	2,099	2,803	33.6
기반기술	3,541	3,663	3.4
공공융합	1,276	2,293	79.7
산업융합	3,763	4,614	22.6
공통기반	689	915	32.8

▣ 기술창업 · 중소기업 R&D 지원을 통해 일자리 적극 창출

기술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간 협업 R&D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한다.

☞ 창업성장기술개발 : (2017년) 1,951억원 → (2018년) 2,727억원 (39.8% 증가)

☞ 중소기업네트워크형R&D : (2017년) 72억원 → (2018년) 147억원 (103.1% 증가)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어 있는 창업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강화하여 기술창업을 촉진한다. 혁신창업과제(510억원)를 신설하여 4차 산업혁명 대응 중점 투자분야(122개 품목)를 집중 지원하고, 민간투자주도형(TIPS) R&D 지원을 확대(590억원 → 736억원)하는 등 창업기업 전용 R&D 사업인 창업성장기술개발의 투자를 대폭 강화(1,951억원 → 2,727억원)한다.

초기 창업에 있어서 재무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학 내 구성원이 우수한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본이 없어도 창업할 수 있도록 과기형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신규 16억원)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여러 중소기업이 협업 R&D를 추진하여 개별 기업의 보유기술을 공동활용하고,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에 따르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네트워크형R&D를 확대(72억원 → 147억원) 지원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비용 부담을 낮추고, 협업을 통한 융·복합 기술개발을 장려한다.

[표 4-3]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R&D 투자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창업성장기술개발	1,951	2,727	39.8
과기형창업선도대학육성	-	16	순증
중소기업네트워크형 R&D	72	147	103.1

▣ 기초연구 및 청년과학자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국가 과학기술의 미래역량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자 주도형(Bottom-up)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청년과학자를 적극 육성한다.

☞ 기초연구 R&D예산 : (2017년) 1.26조 → (2018년) 1.42조 (12.7% 증가)

기초연구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근간으로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다. 개인기초연구(1,0조원 → 1.1조원)와 집단기초연구(2,513억원 → 3,028억원)의 양적 투자 확대와 더불어, 연구자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진흥할 계획이며, '연구자 맞춤형' 기초연구를 촉진할 계획이다.

결혼 및 임신으로 인하여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의 업무 복귀를 지원한다. 여성과학기술인이 연구개발 현업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학연구소, 기업, 출연연 등에 414개의 공동연구 과제를 지원한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공계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문기술 연수를 확대한다.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113억원 → 126억원)을 통해 석 · 박사(125명 → 130명) 및 학사(2,000명 → 2,100명) 인력의 산업현장 맞춤형 연수를 확대 지원하고, 이공계인력 중개센터를 통해 실질적인 채용연계까지 지원한다.

[표 4-4] 기초연구 및 과학기술인력 지원 R&D 투자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개인기초연구	10,130	11,215	10.7
집단기초연구	2,513	3,028	20.5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활성화 지원	40	104	158.8
이공계전문기술연수	113	126	11.3

▣ 사회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체감형 R&D 투자 확대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치매, 질병, 범죄, 환경문제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 치매 대응 R&D예산 : (2017년) 190억원 → (2018년) 393억원 (106.7% 증가)

☞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 (2017년) 120억원 → (2018년) 126억원 (5.0% 증가)

치매 국가책임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치매의 근본적인 치료 기술은 물론, 예방, 진단, 돌봄 등 전주기적 기술개발을 지원한다(190억원 → 393억원). 특히 단기간 내에 성과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질병예방, 조기진단, 돌봄 서비스 기술개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여 치매환자 정보 제공 어플리케이션 개발, 지역사회 예방 프로그램 개발, 뇌 진단 영상기술의 개발을 추진한다.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실종아동 등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본격 착수 한다(신규 33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등 3개 부처는 실종 아동 찾기, 범죄대응 등 국민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한 신원확인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최근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기오염원 배출을 저감시키기 위한 기술개발을 강화(120억원 → 126억원)한다.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 독감, 동물 구제역 등 전염성 높은 인간과 동물의 감염병 진단 및 예방 기술개발을 확대(155억원 → 290억원)하는 등 국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한다.

[표 4-5] 사회문제 해결 및 삶의 질 향상 관련 R&D 투자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치매 대응 R&D	190	393	106.7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 기술개발	-	33	순증
국가전략프로젝트(미세먼지)	120	126	5.0
AI · 구제역 대응 R&D	155	290	87.1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05

5-1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2018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재정투자규모는 16.3조원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한 수준이다. 2018년에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통한 수출지원, 창업지원시스템의 확대·개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확대 등에 역점을 두었다.

▣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및 에너지 복지 확대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시설과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보급 확산을 위해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자 장기저리의 사업비 융자지원을 강화한다 (860억원 → 1,760억원)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가구 주택의 단열재·창호공사 비용 지원 확대(가구당 평균 1.5백만원 → 2백만원)로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와 중증희귀질환자 가구(2만) 포함 등 에너지바우처 대상(54만 → 60만)을 확대하여 서민층 생활안정에 기여한다.

▣ 미래 신산업 육성과 제조업부흥을 위한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AI, IoT, 자율주행차 등 미래 신산업 분야 핵심기술 개발 및 시장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9,080억원 → 9,977억원) 이를 통하여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제조업 부흥을 위한 우선적 조치로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 지원과 함께 로봇 · 센서 · 엔지니어링 핵심 기반 기술에 집중 지원으로 제조업의 스마트화와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 수출구조 혁신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수출것걸음 사업 등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을 강화(106억원 → 113억원)하고 인도, 아세안 등 신흥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전략시장 특화 마케팅을 신설(18억원)하는 등 수출품목. 시장 다변화 등 수출구조 혁신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한다. 또한 수출기업이 지원 서비스와 공급기관을 선택하는 수출바우처 적용 사업을 확대하여 소비자 선택권 및 경쟁 촉진을 지원한다. (1,786억원 → 1,850억원)

▣ 소상공인 협업화 및 경영안정 지원 강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협업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업종별 공동브랜드 개발 및 공동마케팅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조직화 · 협업화를 지원한다. 또한 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한다.

[표 5-1] 산업 · 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합 계	160,238	162,588	1.5
산업진흥고도화	89,671	91,463	2.0
무역 및 투자유치	5,864	6,333	8.0
에너지 및 자원개발	32,896	32,683	△0.6
산업금융지원	11,864	12,388	4.4
산업기술지원	14,482	14,001	△3.3
산업 · 중소기업 일반	5,461	5,721	4.8

5-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산업진흥 · 고도화 부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미래유망 신산업 육성에 투자를 확대하고,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핵심 기술 집중지원 및 제조혁신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제고를 지원한다

☞ (2017년) 89,671억원 → (2018년) 91,463억원 (2.0% 증가)

조선 · 철강 · 반도체 · 디스플레이 등 기존 주력산업의 기술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한편, 첨단신소재, 바이오 · 헬스케어 등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성장을 견인 · 확산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추진 등을 위해 민간과 협력하여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를 보급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 스마트공장 5,000개를 구축하였으며 2018년에는 스마트공장 2,100개 구축을 지원한다.

*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 사업 : (2017년) 43억원 → (2018년) 782억원

아울러 제조업과 ICT융합을 통한 국내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현실에 맞는 스마트공장 기술개발도 지속 지원한다. (2018년 40억원)

또한, 노후 산업단지를 혁신하여 국내 제조업의 핵심 기반인 산업단지를 고부가가치 생산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산단 혁신지원센터' 지원을 통해 기업지원시설과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2018년 566억원)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한다. 학생 · 일반인 대상으로 누구나 쉽게 메이커 활동에 입문할 수 있도록 전국에 일반랩을 구축한다. 전문가 ·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제조업 기반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거점에 전문랩을 설치한다. 이와 함께 메이커 전문인력 양성 등 혁신적 문화활동도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 · 중견기업 및 벤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혁신적 아이디어가 또 다른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의 사내창업 · 분사(Spin-off) 활성화를 지원한다. 선발된 민간 엑셀러레이터가 유망 기업을 발굴 · 투자하면, 이후 3년간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기업을 집중 보육하는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사업 예산을 740억원(290개사)에서 1,062억원(400개사)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협업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업종별 공동브랜드 개발 및 공동마케팅을 지원한다. 경영악화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임금근로자 전환 및 유망업종 재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한다. 이외에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해 매출액에 따라 상환 규모가 결정되고 사후관리 컨설팅까지 연계지원하는 자금을 신설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상가 임대인 · 임차인간 상생협력이 이루어지는 상점가에 대해 상권활성화를 지원하여 상권내몰림 현상을 방지한다.
한편 전통시장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통시장 주차장 신설을 확대(30개 → 43개)한다. 그리고 화재위험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반 화재감지시스템 확충을 지원한다.

모태펀드(특허계정) 내 800억원 규모의 IP 투자펀드를 조성(2018년 4개)하여 R&D 성과물인 우수 IP의 사업화 · 수익화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으로, 정부예산 200억원을 모태펀드(특허계정)에 출자한다.

[표 5-2] 산업진흥 · 고도화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합 계	89,671	91,463	2.0
소재부품기술개발(R&D)	2,688	2,617	△2.6
경제협력권산업육성(R&D)	1,456	1,009	△30.7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438	782	78.6
창업기업자금(융자)	16,500	18,660	13.1
창업사업화지원	1,261	1,535	21.7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	998	1,082	8.4
모태조합 출자	-	200	순증

▣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수출품목, 시장 다변화 등 수출구조 혁신을 지속 뒷받침하는 등 기업의 수출활력 제고 및 무역금융 집중 지원을 강화하고 한미 FTA 개정협상 등 통상현안 대응을 차질없이 지원한다

☞ (2017년) 5,864억원 → (2018년) 6,333억원 (8.0% 증가)

수출것걸음 사업 등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을 강화(106억원 → 113억원)하고 인도, 아세안 등 신흥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전략시장 특화 마케팅을 신설(18억원)하는 등 수출품목, 시장 다변화 등 수출구조 혁신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한다. 또한 수출기업이 지원 서비스와 공급기관을 선택하는 수출바우처 적용 사업을 확대하여 소비자 선택권 및 경쟁 촉진을 지원한다. (1,786억원 → 1,850억원)

무역보험기금을 2016년 수준으로 지원(300억원)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업화 및 무역보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한미 FTA 개정협상, 보호무역주의 확산 대응과 함께 주요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등을 차질없이 지원하여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126억원 → 151억원)

[표 5-3]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비 고
합 계	5,864	6,333	8.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167	2,402	10.9	
수출지원기반활용	638	646	1.2	
무역보험기금출연	-	300	순증	
양자산업협력	71	91	28.8	
세계엑스포참가지원	-	11	순증	

▣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2017년) 32,896억원 → (2018년) 32,683억원 (0.6% 감소)

신재생에너지는 초기 투자비 부담으로 보급·확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보급 확산을 위해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자 장기저리의 사업비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860억원 → 1,760억원)

저소득 가구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 거주 주택의 단열재·창호공사 비용 지원(가구당 평균 1.5백만원 → 2백만원), 중증희귀질환자 가구(2만) 포함 등 에너지바우처 대상 (54만 → 60만)을 확대하는 등 에너지복지를 확충하여 서민층 생활안정에 기여한다.

신재생에너지 대표분야인 태양광 R&D분야에 집중 투자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기여한다. (618억원)

[표 5-4]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비 고
합 계	32,896	32,683	△0.6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860	1,760	104.7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1,000	1,900	90.0	
저소득에너지효율개선	489	639	30.6	
에너지바우처	740	832	12.4	
군단위LPG배관망지원	-	287	순증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R&D)	2,038	2,079	2.0	

▣ 산업금융지원 부문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정책금융(융자, 보증, 보험 등)을 확대한다.

☞ (2017년) 11,864억원 → (2018년) 12,388억원 (4.4% 증가)

성장단계별 자금지원을 통한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였다.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융자 규모는 3.6조원에서 3.7조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16,500억원 → 18,660억원)과, 융자와 투자방식을 결합한 복합금융 방식의 자금지원(1,500억원 → 1,700억원)을 확대한다.

신용보증 공급규모도 확대한다. 신보·기보 보증공급 계획은 67.4조원에서 71.2조원으로 확대한다. 중소조선사에 대한 선수금 환급보증에 대해 신보에서 4년간 1천억원의 재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혁신모험펀드 투자기업 대상 대출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신보·기보에서 3년간 1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시설자금 융자시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당초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시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채무자부담이었다. 이를 민간은행과 동일하게 채권자 부담으로 변경하고, 이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 및 민간은행과의 형평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표 5-5] 산업금융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비 고
합 계	11,864	12,388	4.4	
신성장기반자금	8,800	8,800	-	
투융자복합금융	1,500	1,700	13.3	
신용보증기관출연	300	400	33.3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	127	131	3.6	

▣ 산업기술지원 부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뿌리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기술표준화 및 글로벌 지적재산권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 (2017년) 14,482억원 → (2018년) 14,001억원 (3.3% 감소)

잠재역량이 있으나 R&D 자금이 부족한 창업기업과 민간에서 선별한 유망 기술창업팀(TIPS)에 대해 기술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2017년 1,951억원 → 2018년 2,727억원)하여 기술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 특히 TIPS R&D의 경우, 고액 자금이 소요되는 바이오 분야의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5억원 → 7억원)한다.

수출기업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술(AI, 빅데이터, IoT) 등 전략 분야 R&D를 집중 지원(2017년 2,394억원 → 2018년 2,269억원)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초보기업 → 유망기업 → 글로벌 강소기업 → 월드클래스 300으로 이어지는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제품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제품의 공정 · 품질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2017년 360억원 → 2018년 444억원)한다. 우수한 기술력 경영노하우 등을 보유한 실패기업인 및 사업전환 추진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2017년 38억원 → 2018년 46억원)하여 사회적 자산의 재기를 지원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한다.

[표 5-6] 산업기술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비 고
합 계	14,482	14,001	△3.3	
창업성장기술개발(R&D)	1,951	2,727	39.8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2,394	2,269	△5.2	
공정 · 품질기술개발(R&D)	360	444	23.2	
재도전기술개발(R&D)	38	46	20.5	

SOC 분야 06

6-1 재정지원 방향

2018년 SOC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19.0조원으로 2017년 22.1조원 대비 14.2% 감소하였다. SOC 분야 전반에 걸쳐 지출구조조정과 투자효율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대비 및 미래 신산업 육성, 국민생활과 밀착된 안전 및 재해예방 등에 중점을 두었다.

▣ SOC분야 지출 구조조정과 투자 효율화

그간 축적된 SOC 스톡과 재원배분 우선순위 변화 등을 감안하여, 과거 집행실적 및 투자성과 등에 따라 투자의 우선순위와 연차별 소요를 점검하고 신규건설 보다는 기존 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2018년 완료소요는 빠짐없이 반영하여, 기간교통망의 적기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 고속도로 · 철도 등 주요 교통시설의 공공성 강화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도로공사가 건설 ·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조기 완공과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도입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여 출퇴근 부담 완화와 서비스 질 개선을 도모한다.

▣ 재해 예방 및 생활 밀착형 안전투자 확대

항만시설 및 댐 안전성 보강으로 태풍 · 지진 · 홍수 ·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특수교(신규) 및 전차선로에 피뢰 · 소화시설을 설치하여 낙뢰 및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 또한 버스 · 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신규로 지원한다.

▣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신산업 대응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자율주행차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공유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전용시험비행장 2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표 6-1] SOC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 억원, %)

부 문	2017년(a)	2018년(b)	2017년 대비	
			증감액(b-a)	증감율((b-a)/a)
합 계	221,354	189,916	△31,439	△14.2
도로	74,089	59,382	△14,707	△19.9
철도 · 도시철도	71,436	51,969	△19,467	△27.3
해운 · 항만	17,607	17,644	37	0.2
항공 · 공항	1,436	1,435	△0.1	△0.0
물류 등 기타	21,672	22,875	1,204	5.6
수자원	18,108	16,779	△1,329	△7.3
지역 및 도시	12,028	16,621	4,592	38.2
산업단지	4,978	3,209	△1,769	△35.5

6-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도로 부문

고속도로, 국도 등 기간교통망 확충을 통해 물류비용 절감 및 국민편익 제고를 추진한다.
☞ (2017년) 74,089억원 → (2018년) 59,382억원 (19.9% 감소)

사고위험 감소와 병목해소, 고속도로간 연계 강화를 위한 경부고속도로 영천-언양 확장 및 옥산 - 오창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금년 완공될 계획이다.

중부고속도로 서청주 - 증평간 확장을 위한 설계에 착수하고 설계가 완료된 12개 국도 사업 공사를 착공하여, 지역간 원활한 교통 및 물류 흐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국도상 교량의 내진보강을 올해 완료하고, 교량에 대한 피뢰 · 소방설비 설치는 새로 시작하여 2020년까지 마무리하는 등 지진과 자연재해에 대한 SOC 시설의 안전도를 강화해 나간다. 또한 위험도로 및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 등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안전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주변 교통상황과 장애요인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효과적 대응을 도와주는 지능형 첨단도로교통체계(C - ITS)의 실증사업에 착수하여 도로 교통체계도 개선해 나간다.

[표 6-2] 도로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고속도로	13,649	11,362	△16.8
국도	26,587	20,165	△24.2
민자도로	11,630	6,489	△44.2
광역도로	769	680	△11.6
국가지원지방도	4,697	3,667	△21.9
도로관리	16,202	16,536	2.1

▣ 철도 부문

수도권의 교통 혼잡해소 및 통근시간 단축,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확대하는 등 빠르고 안전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한다.

☞ (2017년) 69,415억원 → (2018년) 47,723억원 (31.2% 감소)

대도시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진접선 복선전철, 대구권 광역철도 등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차질없이 지원하여 광역철도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외곽지역과 서울 도심 주요거점을 빠르게 연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사업은 당초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며, 기존 운영 중인 노선에 대해서도 급행화 사업을 추진하여 수도권 통근시간의 획기적인 단축이 전망된다.

지역 간 철도속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진주~광양 전철화, 장항선 복선전철, 문산~임진각 전철화 사업 등 신규 전철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수원발 · 인천발 KTX 및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통해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철도망 확충 이외에도 기존 노후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국민안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철도교량, 터널, 전기설비 등 각종 철도시설에 대해서 성능 평가를 하고 첨단 기계장비를 도입 및 시설 생애주기 정보관리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철도시설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표 6-3] 철도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고속철도	810	702	△13.3
일반철도	44,488	23,077	△48.1
광역철도	6,019	4,067	△32.4
철도안전 및 운영	18,099	19,878	9.8

▣ 도시철도 부문

서울도시철도 9호선 3단계 등 교통 인프라 준공소요는 적기 지원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 및 지진대비 등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량을 지원하고, 내진보강 지원을 확대하여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한다.

☞ (2017년) 2,021억원 → (2018년) 4,246억원 (110.1% 증가)

서울도시철도 9호선 3단계 등 2018년에 완공되는 교통인프라의 준공소요 및 현재 추진중인 서울 7호선 석남연장, 부산－사상 하단 도시철도, 인천 1호선 송도연장 등 차질없는 지원을 통하여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아울러, 도시철도 노후화에 따른 사고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핵심 안전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이며,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지진에 취약한 서울 도시철도 1~4호선에 대한 내진보강 소요를 확대하여 2018년에 조기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표 6-4] 도시철도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도시철도건설	1,895	4,143	118.6
도시철도경영개선	126	103	△18.0

▣ 해운 · 항만 부문

해운산업 재도약 기반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연안여객선 안전대책 이행 및 활성화를 지원하며, 국가기간산업 성장을 위한 주요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국제물류거점으로서 항만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 (2017년) 17,607억원 → (2018년) 17,644억원 (0.2% 증가)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전담지원기관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고, 해운기업 선대 효율화 및 해운 · 조선 상생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 친환경 고효율선박 확보 지원을 신규투자(2018년 43억원)한다.

카페리 등 연안여객선 건조 지원을 위해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출자금을 증액(2017년 250억원 → 2018년 300억원)하고, 연안여객항로(국가보조항로 27개)에 대한 운항 손실금 지원을 통해 도서민에게 교통편의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도서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또한, 항만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유휴항만시설을 해양산업의 융복합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인적과실 예방정책 지속적 추진, 해사안전감독관제도 운영 및 세월호 사고이후, 해양사고 발생 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해양안전체험관(50억원, 경기도) · 국민해양안전관건립(51억원, 진도) 사업도 지속 지원한다.

부산항 신항만 개발에 따라 남컨테이너부두 진입도로를 착공하고, 광양항에서는 대형선박 입출항 안전확보를 위해 특정해역 준설을 신규 추진하는 등 항만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해수면 상승과 폭풍 및 지진해일 등에 따른 재해취약지구 정비를 위하여 재해안전항만 구축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마산항 방재언덕 설치사업 및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 시설, 속초항 북방파제 보강공사가 2018년 완공되고, 울산신항 남방파제 및 동방파제 보강사업이 신규 추진된다.

노후항만 공간을 해양문화공간 등으로 전환하기 위한 항만재개발 사업으로 광양항 제3투기장에 대한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며,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 추진한다.

[표 6-5] 해운항만 부문 재정투자 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합 계	17,607	17,644	0.2
신항만 개발	6,260	4,664	△25.5
주요항 및 일반항	7,630	8,404	10.1
항만운영 및 해상운송	1,746	2,586	48.1
해양인력 양성 및 관리	480	546	13.8
해양교통 및 안전관리	1,491	1,444	△3.2

▣ 항공 · 공항 부문

드론 창업기업 지원, 비행시험장 구축, 규제 샌드박스 사업 등을 통해 혁신성장 선도산업인 드론 분야를 적극 지원하고, 김해신공항·제주 제2공항 건설 등 대규모 공항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 (2017년) 1,436억원 → (2018년) 1,435억원 (0.04% 감소)

기술력을 가진 중소 드론 제작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드론 창업공간 및 역량강화 지원, 드론 상용화에 필요한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확대(3개소 → 5개소)함으로써 세계 드론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한편 도서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울릉도 및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의 설계완료 및 공사 착공을 추진하고, 대규모 국책사업인 김해신공항,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등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공분야 취업 연계성 강화를 위해 기존 외국에 의존하던 제트교육과정의

국내 운영 등 맞춤형 교육과정 및 지원프로그램을 지속 지원한다.

[표 6-6] 항공 · 공항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항공발전지원	911	915	0.5
일반공항건설 및 관리	442	433	△2.0
항공운영지원	83	87	4.8

▣ 물류 등 기타 부문

교통사고 예방, 안전강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해외건설 수주 지원 및 교통서비스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업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 (2017년) 21,672억원 → (2018년) 22,876억원 (5.6% 증가)

대형차량에 대한 첨단안전장치 장착, 자동차안전도 강화 등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형 택시 전국 지원,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 등을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를 지속 추진한다. 한편 생활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등을 통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등 교통서비스 강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수도권복합물류터미널 진입도로 준공 등 물류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를 지속 추진 하고 물류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 확대, 물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종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해외건설 수주지원 강화를 통한 해외인프라시장개척지원을 확대하고 국제개발협력사업(ODA)과 연계하여 해외시장 다변화와 투자형 해외사업 진출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해외건설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해외건설사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드론 안전기반 구축,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하고 SOC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R&D 투자를 지속 확대한다.

[표 6-7] 물류 등 기타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교통 및 물류정책	8,602	9,317	8.3
국토교통R&D · 정보화	5,492	5,833	6.2
해양정책 등	3,943	3,952	0.2
해양수산R&D · 정보화	2,798	2,921	4.4
경제자유구역사업 등	836	852	1.9

▣ 수자원 부문

안정적인 물공급과 지속적인 수자원 확보를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 홍수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기반을 구축한다.

☞ (2017년) 18,108억원 → (2018년) 16,779억원 (7.3% 감소)

2018년 수자원 부문은 안전 · 재난예방 투자를 중점 강화하여 노후화 된 댐, 수도시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댐 안정성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가뭄대응을 위한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 노후관 보강을 위한 광양(Ⅰ단계) 노후관 개량 사업으로 재난에 안전한 국토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별 가뭄 취약성 분석으로 가뭄 취약지도를 구축하고 국가관측망 확대 등을 통해 가뭄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지역맞춤형 가뭄 대책을 추진한다.
홍수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사전 재해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도시부 등 홍수 대응력 강화를 위해 도시하천유역 침수예방 선도사업

(10개소)을 선정하고 치수 · 이수 · 환경 · 문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지역 맞춤형 하천 정비도 추진한다.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존 수원의 여유량을 전환 · 공급하는 급수체계 조정사업을 지속추진하고, 도서 · 해안지역에 신규수자원확보를 위한 지하수댐 설치사업 등 대체수자원을 통한 소외지역 물 복지를 실현할 계획이다.

ICT기술을 접목한 SWC(Smart Water City) 시범사업,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 하천 관리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첨단 물 관리를 추진하고, 각종 국제행사와 공동연구 등 활발한 국제협력 사업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표 6-8] 수자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15,509	14,668	△5.4
댐건설 및 치수능력증대	1,351	950	△29.7
용수공급 및 개발	1,046	930	△11.1
수자원정책	203	232	14.3

▣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부문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개발, 도심재생을 지속 추진하고,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지역및도시 : (2017년) 12,028억원 → (2018년) 16,621억원 (38.2% 증가)

☞ 산 업 단 지 : (2017년) 4,978억원 → (2018년) 3,209억원 (35.5% 감소)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낙후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지역 맞춤형 성장촉진 지역개발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는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하여 생활편익 사업 등 주민지원사업도 계속 지원한다.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교통, 방범, 방재 등 도시의 다양한 정보를 종합 · 분석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건축물 안전 제고를 위해 건축자재, 시공과정 등을 샘플링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를 위한 현황 조사를 지속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과 위치정보 정확성을 위한 기준점 정비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산업단지 준공시기에 맞추어 기반시설이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진입도로를 지원하여 원활한 기업 활동과 물류비 절감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60~70년대 조성하여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산단의 공업용수도 건설을 지속 지원한다.

[표 6-9]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 지역 및 도시	12,028	16,621	38.2
• 지역개발	3,731	4,400	18.0
• 도시정책	1,794	4,851	170.5
• 국토정보관리 등	2,182	2,243	2.8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3,109	2,893	△6.9
• 새만금개발	1,213	2,233	84.1
■ 산업단지	4,978	3,209	△35.5
• 산업단지진입도로	3,821	2,386	△37.6
• 지역거점조성	881	605	△31.4
• 노후공단재정비 등	276	219	△20.8

농림·수산·식품 분야

07

7-1 재정지원 방향

2018년 농림 · 수산 · 식품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19.7조원으로 2017년 19.6조원 대비 0.5% 증가되었다.

FTA 시장개방, 농촌인구 고령화 등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가 소득 및 경영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농어촌 활력 제고를 위해 자본 ·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세부적으로는 청년농어업인 지원 및 스마트 농어업 확산 지원 등 지속가능한 농수산식품 산업 육성, 근본적 쌀 수급안정 대책 추진, 직불제 지원 강화, 재해 대응력 제고 등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어촌 조성, AI 등 가축질병예방, 지진 등 재해·재난 대비 등을 추진한다.

▣ 농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

노지채소에 ICT장비를 보급하여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장적용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노지분야 빅데이터 수집 · 분석을 통한 최적생육 환경 분석 및 관측모형 개발을 위한 노지채소작물 스마트팜모델개발을 신규(2018년 11억원)로 추진한다.

또한, 노지채소 주산지 위주 ICT시설보급, 빅데이터 수집 · 분석을 통해 2019년에는 경제성 분석 및 비즈니스 모델개발, 최적생육환경 분석, 빅데이터 기반의 관측모형도 개발할 계획이다.

기술력을 갖춘 청년의 유입을 촉진하여 ICT 융복합 첨단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생산

유통 · 연구 · 교육시설 등이 집적화 · 규모화된 스마트팜 혁신 밸리를 조성한다.

*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105억원: 20ha/개소, 1개소(2년차), 2개소(1년차)

아울러,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를 지속 추진하고, ICT 융복합 시설 보급, 스마트팜 온실 신축 등을 확대 지원하며, 스마트팜 시설의 안정적 운영 · 관리를 위한 컨설팅, 교육, 홍보 등을 통해 현장지원을 강화한다.

* 시설원예 현대화 324억원(1,011ha), ICT융복합확산 82(33ha 및 1,050호), 고추비가림시설 102(160ha), 특용작물시설현대화 107(390개소)

또한, 축사시설현대화로 동물복지, 질병예방, 안전 · 위생 등을 고려해 가축사육 환경을 개선하고, ICT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축사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등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한다.

▣ 청년 농어업인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대

영농경력 3년 이하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영농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큰 1,200명을 선발하여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고 경영실습 임대 농장 조성하여 청년농들이 초기 자본투자 없이 농업의 전 과정을 본인 책임하에 경영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조기 영농창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어업분야에서도 2018년부터 최초로 영어경력 3년 이하 만 40세 미만 청년 귀어업인 중 100명을 선발하여 최장 3년 간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여 우수 청년인력의 어업창업과 어촌 정착을 유도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을 농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어 나갈 청년창업농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금 뿐만 아니라 농지 · 자금 · 기술교육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농지은행 사업 개편을 통해 2018년도부터 영농 규모 · 경력 및 연령별로 차등 지원하는 “맞춤형농지지원” 사업을 도입한다.

특히 맞춤형농지지원 사업 중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의 확대를 확대(2017년 1,800억원 → 2018년 2,540, +740억원)를 통해 2030세대 등 청년농에게 최우선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 농촌 구현을 지원한다

농업부문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영농정착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선도 농업법인에서 단기간 실무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을 신규(2018년~) 추진한다.

영농 취 · 창업 의지가 높은 청년층을 선발하여 관심 직무분야, 사업분야에 적합한 우수 농업법인 매칭을 통해 농업관련 실무경험 및 정보제약으로 인한 영농정착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법인 경영에 대한 직무능력 개발 및 경력 형성기회를 제공한다.
농식품 벤처 · 창업 기업의 전주기적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술 – 자금 – 판로' 등 창업보육을 제공하고, 새로운 판로개척과 시제품 시장 반응성을 확인하기 위해 농식품 벤처 · 창업기업 우수제품 홍보 · 판매관을 확대한다.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여 농촌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의 성장 단계별 지원을 통해 경영체 육성을 추진하고, 지역 특화품목에 기반한 지역단위 네트워크, 지구 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지역 특화산업 거점을 육성한다. 여가 · 문화소비 증가 등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큰 농촌관광 활성화 추진을 통해 농촌을 국민의 여가 · 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 농촌지역의 부존자원이 집적된 지역을 6차산업지구로 지정하여 전후방 연관산업이 융복합된 지역특화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한다.
지역자원의 통합적 활용을 위해 농업인 · 생산자단체 · 가공업체 · 체험마을 등이 참여하는 6차산업화 네트워크 구성 지원으로 공동의 홍보 · 마케팅 · 판매 등 공동사업을 촉진한다.

어촌 6차산업화를 통한 어업 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밀착형 전담지원기구인 어촌특화지원센터(4개소 → 10개소)를 추가로 지정 · 운영한다.

▣ 쌀 수급안정과 농촌복지 확충

적정생산을 통한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쌀 재배농가가 논에 벼(쌀) 이외 타작물 재배 시 한시적(2018년~2019년)으로 일정수준의 소득을 지원(2018년 5만ha, 1,368억원)하여 논 타작물 전환을 유도하고, 식량원조협약(FAC) 등 쌀 해외원조(연간 5만톤, 460억원 규모)를 추진하여 신규 수요를 창출한다.

또한,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통해 한·중 FTA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지의 기능 및 형상을 유지하면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밭고정직불금과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조건불리 지역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상하여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 지원을 확대한다.

태풍·가뭄·폭염 등 빈발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을 위해 농업재해보험 품목확대(69개 → 73개) 및 상품개선으로 보험가입률을 제고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발생시 상황관리 및 신속한 복구를 지속 지원한다.

▣ AI 등 가축질병 예방

축사시설현대화로 AI 반복 발생하는 가금 밀집사육지역을 개편하고, 가금농장 CCTV 설치로 방역실태 점검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질병에 강한 축산업으로의 구조 혁신을 추진한다.

민간 방역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민·관 공동방역체계를 확립,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방역활동 추진하여, 구제역, AI 등 악성가축전염병 선제적 방역을 통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 및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
2010년~2011년 구제역·AI 대규모 발생을 계기로 상시방역·검역 및 초동대응체계 구축 등 선진제도를 도입, 질병근절 기반을 마련하고 방역주체의 책임성 및 자율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자율방역이 곤란한 소규모 취약농가는 정부차원의 방역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가금(산물)이력제 및 자체품질평가제 운영으로 'AI 및 살충제 계란' 등으로부터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방역 등의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한다

▣ 항구적 가뭄대책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적 가뭄에 대비하여, 이미 확보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과 동시에 새로운 수자원 개발을 통해 농업분야의 가뭄대응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저수지 · 양수장 등 수리시설 확충과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부족한 지역으로의 수계 연결 등 항구적인 가뭄에 대응한 농촌용수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강수량 부족으로 저수율이 낮아 물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영농기전 인근 하천수를 활용하여 저수지 물 채우기 등 한발대비 용수확보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태풍,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기 설치된 저수지, 방조제의 대형시설물(물넘이, 배수갑문 등) 보강을 통한 안정적 영농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표 7-1] 농림 · 수산 · 식품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합 계	196,221	197,256	0.5
농업 · 농촌	147,062	147,812	0.5
수산 · 어촌	21,208	21,573	1.7
임업 · 산촌	20,499	20,943	2.2
식품업	7,451	6,928	△7.0

7-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농업 · 농촌 부문

농산물 시장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농업의 미래산업화 기반구축을 위해 농업 경쟁력 제고, 농업인 소득 · 경영 안정, 밭작물 생산 및 유통 · 소비기반 확충에 중점 지원한다.
아울러, 가축질병 · 재해대비 등 안전분야의 지원강화에도 역점을 둔다.

☞ (2017년) 131,659억원 → (2018년) 134,953억원 (2.5% 증가)

근본적 쌀 수급안정 대책 추진, 직불제 지원 강화 및 재해 대응력 제고 등 농업인 소득 안전망 확충을 위해 벼 적정 재배면적 유도를 위한 쌀생산조정제 도입(2018년 신규, 5만ha, 1,368억원) 및 쌀 식량원조(2018년 신규, 5만톤, 460억원) 추진하며, 가격등락이 큰 노지채소의 자율수급관리 강화를 위해 채소가격안정제(2017년 4품목 / 100억원 → 2018년 5품목 / 168억원) 및 계약재배(2017년 2,293억원 → 2018년 2,793억원)를 확대한다.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서 밭 · 조건불리 · 친환경농업 직불금 단가 인상(2017년 2,789억원 → 2018년 2,878억원) 및 재해보험 확대(농작물 2017년 53품목 / 2,870억원 → 2018년 57품목 / 3,031억원) 및 농업인 안전보험(2017년 593억원 → 2018년 595억원)을 지원한다.

AI 등 가축질병 예방, 청년농업인 지원 및 스마트 농업 확산 지원 등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동물복지형 축사(가금 160개소, 가금외 600개소) 지원 및 가금 밀집 사육 개선(5개소) 등 축사시설현대화 확대(2017년 1,549억원 → 2018년 2,072억원)를 통해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가금농장 CCTV 지원(2,570개소), 공동방제단 (450개소 → 540개소, 2017년 95억원 → 2018년 131억원) 확대, AI 항원뱅크 구축(25억원) 등 상시 방역 체계를 구축 및 동물보호 · 복지 등 반려동물 산업육성 기반을 구축한다.
청년농업인에게는 성장단계별로 자금 · 기술 · 농지 등 패키지 지원 및 식품 · 외식산업

육성 등 일자리 지원(2017년 11,206억원 → 2018년 12,649억원)과 스마트원예 단지 용수 · 전기 · 도로 등 기반 구축(2017년 1개소/ 35억원 → 2018년 3개소 / 105억원) 및 스마트 축사 확산(2017년 350개소 / 269억원 → 2018년 600개소 / 498억원), 동식물 자원산업화(2017년 17억원 → 2018년 31억원) 등 전후방 연관 산업 지원 및 농식품 R&D 투자 확대(2017년 2,034억원 → 2018년 2,131억원)로 첨단 농업화 촉진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잔류농약 · 중금속 등 농산물 안전성 조사(2017년 201억원 → 2018년 233억원) 및 살충제 · 항생제 등 잔류물질 정밀 검사 장비 지원(도축검사, 2017년 149억원 → 2018년 200억원), 어린이 영양균형 및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24만명을 대상으로 과일간식 제공(2018년 신규 72억원), 국가차원의 먹거리 종합 계획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 추진(2018년 신규 12억원, 지역별 모델개발, 8개지역 푸드플랜 수립 등)하며 외래 병해충 유입방지 등 식물검역검사 인프라도 확충(2017년 104억원 → 2018년 159억원) 한다.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촌 조성을 위해서는 100원 택시 확대(2017년 18개소 / 10억원 → 2018년 82개소 / 42억원), 노후주택개량(융자, 2017년 5,000억원 → 2018년 5,500억원) 등 낙후된 농촌 교통 ·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농지연금(2017년 663억원 → 2018년 923억원) 및 건강 · 연금 보험료 지원 강화(2017년 3,444억원 → 2018년 3,472억원) 등 고령 · 은퇴 농가에 노후 생활안정 지원 확대로 농촌형 복지를 확대하며, 마을의 특성에 따라 농촌 공간을 조성하고, 공공서비스 공급 · 전달체계 차별화(일반농산어촌개발, 2017년 8,723억원 → 2018년 8,794억원)를 통해 맞춤형 지역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농업의 6차산업 고도화와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농촌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2017년 1,154억원 → 2018년 1,158억원)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지진 등 재해 · 재난 대비 농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농업생산기반조성 사업은 지진 발생에 대비한 내진보강 및 가뭄 · 홍수 피해 예방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표 7-2] 농업 · 농촌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합 계	131,659	134,953	2.5
쌀 수급안정 등 소득안전망 확충	67,318	67,899	0.9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육성	20,513	23,009	12.2
안전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938	1,198	27.2
귀농귀촌 및 복지농촌 조성	22,825	23,175	1.5
농업생산기반 확충	20,065	19,672	△2.0

▣ 수산 · 어촌부문

지속가능한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수산자원조성 및 불법어업단속을 강화하고, 수산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통해 수출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살기좋은 어촌조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 (2017년) 21,208억원 → (2018년) 21,573억원 (1.7% 증가)

지속가능한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서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 강화를 위해서 어업지도선을 추가 건조(신조 4척, 대체 5척) 한다. 또한,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을 위해 참치, 연어 등 고부가가치 품종 외해 양식시설 구축(3개소, 10억원)을 지원한다.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수출확대를 위해 수산물 산지 유통센터(3개소, 36억원) 및 소비지 분산물류센터(2개소)를 구축하고,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127억원)를 계속 추진한다. 또한,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 주요 거점지역에 수출지원센터를 확대(7개소 → 10개소, 41억원) 설치하고, 국내 주요 거점에는 수출물류센터를 추가 (1개소 → 3개소, 50억원)로 구축한다.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건불리 직불제(90억원 → 102억원)를 확대 시행하고, 어선원 및 어선보험, 어업재해보험 등 정책보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청년 어업인의 귀어 · 귀촌지원을 위해 정착 지원금(100명, 1인당 최대 100만원/월)을 지원하고, 창업 지원센터도 확대하여 유망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살기좋은 어촌 조성을 위해 노량항 등 33개 국가어항(1,945억원 → 1,997억원)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어촌 6차산업화 사업을 강화하여 어촌특화지원센터를 확대(4개소 → 10개소) 구축하고 귀어 · 귀촌인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3억원) 등 어촌정주여건 개선에 투자를 강화한다.

원양어업활성화를 위해 국제수산기구의 협상 및 대응을 강화하고, FAO 세계수산 대학 시범사업을 확대(5억원 → 10억원) 추진한다. 또한, 연안국과의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56억원 → 91억원)한다.

[표 7-3] 수산어촌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합 계	21,208	21,573	1.7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4,405	4,647	5.5
유통 · 품질 · 안전관리 등	4,105	4,222	2.8
수산경영	4,227	3,842	△9.1
어촌 · 어항 개발	4,602	4,728	2.7
원양협력, 수산연구 등	3,869	4,134	6.8

▣ 임업 · 산촌 부문

산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산림복지 시설 확충과 양질의 산림분야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산림재해 예측기반을 강화하고,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 (2017년) 20,499억원 → (2018년) 20,943억원 (2.2% 증가)

경제림 육성을 위해 임도를 확대(774km → 810km)하고,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15개 단지)을 지원한다. 벌채에 따른 경제수종 조림사업을 지속추진(23.9천ha)하고, 우량 묘목을 생산하기 위해 묘목생산 단가를 인상(470원/본 → 544원/본)하고, 양묘시설 현대화 (3개소)를 추진한다.

목재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 목재생산시설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51개소)하고, 목재산업단지 조성(1개소)과 숯산업클러스터 조성(1개소)을 추진한다. 청정임산물 생산규모화를 지속추진하고, 국산 표고톱밥배지 생산확대를 위한 배지센터를 설치(2개소)한다. 또한, 귀산촌 활성화를 위해 창업지원을 확대(240억원 → 340억원)하고, 임업인의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단기경영자금 (100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증가하는 산림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지덕권 산림치유원(1개소)을 조성하고, 국립자연휴양림을 신규로 조성(3개소)한다. 양질의 산림복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숲해설 분야 전문업 위탁을 확대(98개소 → 229개소)하고, 유아숲 · 산림치유 분야도 전문업 위탁방식으로 전환(158개소)추진한다. 또한, 휴양림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전국 휴양림 통합 예약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한다.

산불진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신규 운영(300명)하고, 지진 등으로 인한 땅밀림 대응을 위해 땅밀림 조사 · 복구 및 모니터링(98억원)을 신규 추진한다. 산사태 예측 고도화를 위해 산악기상망 구축을 확대(10개소 → 50개소)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강화를 위해 나무주사 지원(50억원 → 120억원)을 강화한다.

산림생물자원 보전 · 관리를 위해 국립 세종수목원 조성을 지속추진(249억원)하고, 새만금 지역에 수목원을 신규로 조성(17억원)한다.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강화를 위해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확대(8개소 → 9개소)하고, 백두대간 마루금의 체계적인 보전 · 관리를 지원한다.

[표 7-4] 임업 · 산촌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합 계	20,499	20,943	2.2
임도시설(경제 · 생활 · 세종 · 제주)	1,503	1,558	3.6
조림사업	999	1,122	12.4
숲가꾸기	2,551	2,090	△18.0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	134	153	14.1
산림서비스도우미	106	262	147.2
산사태 재난 · 경계피난	10	63	547.4
사방사업	2,329	1,795	△22.9
산림생물다양성증진	144	202	40.6

▣ 식품업 부문

식품 · 외식산업이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영안정 및 성장 산업화를 지원하고, 유망분야 선제적 육성, R&D · 인프라 확충 및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통한 식품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 (2017년) 7,478억원 → (2018년) 6,954억원 (7.0% 감소)

식품 · 외식분야 청년 취 · 창업 지원을 위해 실습형 · 체험형 프로그램 제공을 확대하고,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산원료의 지속적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산 농산물 구매보증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외식경영주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한다.

유망분야 선제적 육성을 위해 기능성 식품산업 기반구축과 발효 미생물 산업화를 위한 지원도 신규로 추진한다.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농식품수출업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 – 민간 간 협력을 통한 기획수출 및 기 진출한 국내 대형 유통망을 활용한 동남아 지역 수출 확대 등을 통해 농식품 수출시장을 다변화 한다.

아울러, 지자체별 다양한 먹거리 관련 이슈를 통합 관리하는 먹거리 순환 종합전략(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을 지원한다.

[표 7-5] 식품업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비고
합 계	8,208	7,478	△8.9	
기능성식품산업육성	26	26	-	
푸드서비스 선진화	18	15	△19.4	
식품소비 및 산업인프라강화	144	132	△8.3	
수출인프라강화	435	479	10.2	
농식품수출시장다변화	84	84	-	
전통발효식품육성	137	70	△48.8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3,805	3,386	△11.0	융자
지역단위푸드플랜구축지원	-	12	순증	신규
농식품바우처지원사업	-	5	순증	신규

* 농식품원료구매와 시설현대화를 지원하는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사업의 집행률과 실수요를 감안한 감액반영 및 소스산업화센터건립지원, 할랄인증 도축·가공시설 지원, 평창동계올림픽 K-Food Plaza 운영 등 사업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예산 감소가 전년대비 예산 감소요인으로 작용

환경 분야

08

8-1 재정지원 방향

2018년 환경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전년대비 0.3% 감소한 6.9조원이다. 미세먼지, 화학물질 등 환경위해요인 대응과 생태계 보전 · 복원 등에 중점을 두고 투자를 확대하였다.

▣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위해요인 저감사업 강화

저감효과를 기준으로 미세먼지 대책 사업을 재편하여 재정투입 효과를 극대화하고,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확보 및 위해성 관리, 도시침수 · 가뭄 · AI 등 환경위해요인 저감 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지반침하 · 단수사고 등에 대비하여 노후 상 · 하수도 정비도 추진한다.

▣ 자연의 보전 ·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습지 등 생태 우수지역 보호 및 훼손지 복원을 추진하고, 도시 지역 소생태계를 복원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국립공원 · 생태탐방로 등을 확충하고, 수생태계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 · 복원사업도 추진한다.

▣ 사회전반의 지속가능성 제고

지속가능한 생산 · 소비, 자원의 순환 등을 위한 제도 · 기반을 정비하고, 환경산업 육성을 통해 환경도 살리고 성장동력과 일자리도 확보한다.

▣ 기초시설 투자 예산을 조정하여 환경예산 내실화 도모

신설투자 필요성, 집행가능성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시설투자 예산을 합리적인 규모로 조정하고 국정과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표 8-1] 환경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합 계	69,160	68,985	△0.3
상하수도 · 수질	41,679	40,131	△3.7
폐기물	3,492	3,147	△9.9
대기	5,798	7,547	30.2
자연 및 해양환경	8,439	8,451	0.1
환경 일반	9,751	9,708	△0.4

8-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상하수도 · 수질 부문

상하수도 보급률(2015년말 기준 상수도 98.6%, 하수도 92.5%)이 선진국 수준에 근접함에 따라 기초시설 설치비를 조정하여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노후 상하수도 현대화, 가뭄 대비 등 신규 정책수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상하수도 시설이 1980년대 이후 집중 투자되어 왔고, 상당한 물량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상태에 있으며, 점증하고 있는 지반침하 등 상하수도시설 안전사고와 단수사고 등을 감안하여,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하수관로 투자 중 개량 투자비율을 38.4% 수준(2017년 31.9%)으로



〈 노후하수관 교체 〉

확대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극복을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같은 대체 수자원과 강변여과수, 식수 전용 소규모 댐 등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을 강화한다.

아울러, 건강하고 안전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수질 · 수생태계 건강성을 모니터링하면서 자연성 회복 대책을 강구하고, 오염사고 발생 시 확산 차단을 위한 완충저류 시설도 확대 설치한다.

[표 8-2] 상하수도 · 수질 부문 주요변동 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합 계	12,534	13,247	5.7
노후지방상수도정비	512	1,084	52.8
하수관로정비	7,355	6,878	△6.5
하수처리수 재이용	321	462	43.8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3,866	4,013	3.8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 조사	382	458	19.7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98	352	260.8

▣ 대기 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을 확대(2017년 60천대 → 2018년 116천대)하고, 건설기계 · 대형 화물차를 비롯한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을 지속하며, 어린이 통학차량 중 노후 경유차의 LPG 차량 전환 지원을 확대(2017년 800대 → 2018년 1,800대)하여 환경유해인자에 특히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한다.



〈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

대기오염 국가측정망을 확충하고(2017년 2개소 → 2018년 13개소) 종합대기측정소(1개소)와 집중측정소(2개소)를 신규로 운영하는 등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제고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기존 차량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친환경차를 늘려 대기질을 개선하고 관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2017년 14천대 → 2018년 20천대), 하이브리드 자동차(2017년 50천대 → 2018년 60천대)와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2017년 530기 → 2018년 1,070기)를 대폭 확대한다.

[표 8-3] 대기부문 주요변동 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합 계	4,401	6,342	44.1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2,643	3,523	33.3
대기개선 추진대책	1,225	2,143	74.9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312	394	26.3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83	87	4.8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138	195	41.3

▣ 폐기물 부문

그간 폐기물이 발생한 이후의 관리에 초점을 맞췄던 그간 국내 자원순환 정책의 기준(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순환자원 인정,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품 순환 이용성평가 등 생산부터 유통 소비 ·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 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자원순환촉진지원 사업(2018년 32억원 순증)을 시행한다.



〈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

에너지 ·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신규로 5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전국적인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술력, 성장성 있으나 담보력 없는 영세 재활용업체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통해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한다.

분리배출 취약지역의 배출환경 개선사업으로 타 폐기물에 비해 재활용률이 낮은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을 제고하고, 방치중인 매립시설의 오염물질 확산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 안정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표 8-4] 폐기물 부문 주요변동 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합 계	2,742	2,956	△6.2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1,397	1,270	△9.1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109	2	△98.2
자원순환촉진지원	–	32	순증
재활용산업육성 융자	1,329	1,284	△3.4
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R&D)	128	72	△43.8

▣ 자연 및 해양환경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관련된 나고야의정서 국내발효에 따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설치 · 운영한다. 동 센터는 국내 산업계와 연구기관의 국내외 생물자원 이용과 그 이익 공유과정을 지원하여 나고야의정서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의정서 당사국으로서의 의무준수를 이행하여 국제적인 신뢰를 확보한다.

AI 발생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AI 대응 철새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신 · 변종 감염병에 효과적인 대응 및 질병확산 예측가능성 향상을 위해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R&D를 처음으로 추진한다.

개발사업자에게 협력금을 징수하였다가 생태계 복원 시 환급해 주는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 사업, 도시 내 유휴공간을 생태공원화하는 자연마당 조성 사업(2018년 신규 4개소) 등을 통해 생활 주변의 생태적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 국가철새연구센터 〉

해양오염사고는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을 훼손 하고, 연안 주민들에게 직 · 간접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유발한다. 이러한 해양 오염사고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태세 구축을 위하여 방제작업정을 배치하고, 방제단정 교체를 지원한다.

[표 8-5] 자연 및 해양 부문 주요변동 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합 계	190	231	21.6
유전자원정보관리	-	6	순증
환경생물산업 소재발굴	35	35	-
AI대응 철새정보 네트워크 구축	-	11	순증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R&D 사업	-	6	순증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금	94	108	14.9
해양오염방제	61	65	5.4

▣ 환경일반 부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 보건센터를 전국 주요 권역별로 확대하고 (1개소 → 4개소), 유사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살생물제 全과정 안전관리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며(81억원), 흡입독성 시험시설(2개소)을 조기 구축 한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 〉

취약계층 건강영향조사, 영유아 · 청소년 유해인자 노출의 건강영향에 대한 장기간 추적조사 등 환경성질환 예방 · 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 체감형 환경보건 서비스를 구현한다.

인간과 자원의 공생, 개발과 보전의 조화,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기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원을 확대하고 전세대 · 계층 맞춤형 환경교육을 추진한다.

환경산업 육성 · 수출지원으로 환경분야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중소환경기업 지원 확대, 해외진출 밀착지원, 미래환경산업 펀드 본격 운영하여 환경사업 성장세를 가속화 한다.

[표 8-6] 환경일반부문 주요변동 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합 계	431	467	8.3
환경성질환 예방 및 사후관리사업	70	73	5.0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지원	67	80	19.0
화학사고 사전예방 제도 운영	7	10	38.9
환경교육강화	110	128	16.3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원	21	32	52.4
환경산업수출기반 육성지원	156	144	△7.7

국방 분야

09

9-1 재정지원 방향

2018년 국방비(일반회계) 규모는 43.2조원으로 2017년 40.3조원 대비 7.0% 증가한 규모이다. 강한안보와 책임국방을 위해 국방비 규모를 참여정부 이후 최고수준으로 확대하여 북핵 · 미사일 위협 대비 핵심전력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군의 사기진작을 위한 장병 생활여건 및 병영문화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한다.

▣ 군의 사기진작을 위한 장병 생활여건 및 병영문화 개선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병 봉급 인상 국정과제에 따라 병 봉급은 병장기준 2017년 216,000원에서 2018년 406,000원으로 2017년 대비 88% 수준으로 대폭 인상한다. 영내자 급식비 단가를 5% 인상(2017년 7,481원 → 2018년 7,855원) 및 민간조리원 62명 증원 등 군부대 급식 질을 개선한다.

성고충전문상담관은 2017년 23명에서 2018년 44명으로 확대하여 성폭력을 예방한다. 격오지 부대 독서카페를 2017년 858개소에서 2018년 989개소를 확대 설치하고, 장병 선호에 따른 자기계발비용을 2018년에 10개 부대에 시범실시를 통해 군 복무적응 지원 및 자기계발기회 확대 등을 추진한다.

예비군 훈련여건 개선을 위해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2017년 10,000원 → 2018년 16,000원) 및 동원훈련장 내 온수샤워장, 세탁실 설치확대로 예비군 훈련시설을 보강한다.

▣ 북핵 · 미사일 위협 대비 핵심전력 투자를 적극 확대

'유능한 안보와 튼튼한 국방' 구현을 위한 기본조건인 방위력 개선향상을 위해 적극 투자할 예정이다. 우선,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안보 현실을 반영하여,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위체계의 핵심전력인 3축 체계 조기 구축에 적극 지원한다. 우리나라 3축 체계는 북한의 공격에 대응하는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 Korea Air and Missile Defence), 북한의 도발시 북한의 지휘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대량응징 · 보복(KMPR : 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도 자주방위능력 강화를 위해 지상 · 해상 · 공중전에 필요한 24개의 신규 사업을 통해 필수전력을 추가 확보한다. 대표적인 지상 방위력 개선사업은 국지방공 레이더, 방공지휘통제 경보체계, K-9 자주포 성능개량 등이며, 해상은 무인기뢰처리기-Ⅱ, 전술함대 지유도탄(수직형), 복합감응기뢰소해구, 상륙돌격장갑차-Ⅱ이다. 그리고 공중전 전력 보강을 위해서 의무후송전용헬기 양산, 조종사보호의세트-Ⅱ, 장거리공대지 유도탄 2차 사업을 지원한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첨단전력 방위체계를 위해 스텔스기(F-35A)를 인수하고, 이지스함 구축을 지원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자체 첨단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국방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전년 대비 4.2% 증가)하여 선진국 수준의 국방과학 기술력을 확보한다.

또한, 자주국방 및 방위산업 활성화와 동시에 방위력개선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무기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체계를 수립함과 동시에 철저한 소요검증 및 사업 타당성조사 강화로 국방예산 지출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 대테러 역량 강화 및 적정 군수 지원으로 대비태세 강화

도시지역 작전능력 보강을 위한 양안형 야투경, 대테러 기관단총 등 대테러 장비를 보강한다. (2017년 3억원 → 2018년 174억원)

전투력 유지에 필수적인 장비유지 중심으로 투자하되, 일반 물자 구입 축소, 소요예측 정교화 등을 통해 예산 효율화를 병행한다.

[표 9-1] 국방분야 재정투자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합 계	403,347	431,581	7.0
병력운영	171,464	184,009	7.3
전력유지	109,913	112,369	2.2
방위력 개선	121,970	135,203	10.8

9-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병력운영 부문

장병 처우개선과 급식 질 향상을 위해 봉급 및 급식비를 인상하고, 국방개혁에 따른 병력감축 추진에 따라 전투력 유지 및 병력 정예화를 위해 군 간부 1만 명을 추가 증원한다.

☞ 병력운영 : (2017년) 17.1조원 → (2018년) 18.4조원 (7.3%증가)

장병들의 자랑스럽고 만족도 높은 군 복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정과제로 병 봉급을 2022년까지 최저 임금의 50%수준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70만원(병장기준) 수준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2018년 병 봉급은 2017년 대비 87.8% 인상하여, 병장 기준 2017년 216,000원 → 2018년 406,000원으로 증가한다.(병 인건비 예산 : 2017년 10,472억원 → 2018년 18,140억원)

다양하고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급식비 단가를 5.0% 인상(2017년 7,481원/일 → 2018년 7,855원/일)하고, 민간조리원을 62명 증원하여, 2017년 100명당 1명에서

2018년 90명당 1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국방개혁 추진에 따라 전체 병력규모는 2020년까지 50만명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감축하되, 부사관 및 군무원 증원 등을 통해 정예화된 병력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병력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부사관을 2,470명을 증원한다. 부대개편 및 신규무기체계 도입에 따른 첨단무기 정비인력(150명), 무자격 의무병 대체를 위한 전문 의무인력(340명) 등 군무원 490명을 증원한다.

[표 9-2] 병역운영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비 고
합 계	171,464	184,009	7.3	
인건비	122,649	133,937	9.2	· 처우개선율 +2.6%
급식 및 피복	27,155	21,892	1.1	· 기본급식비 단가 +5.0% 7,481→7,855원
기금 전출금 등	21,660	28,178	3.8	

▣ 전력유지 부문

군 복무적응 지원 및 자기계발기회 확대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고 예비군 훈련여건을 개선한다. 대테러 장비 보강 등 대테러 역량을 강화하고, 전투력 유지에 필수적인 장비유지 중심으로 투자하고 일반 물자구입 축소, 소요예측 정교화 등을 통해 예산 효율화를 병행한다.

☞ 전력유지 : (2017년) 11.0조원 → (2018년) 11.2조원 (2.2%증가)

군 복무중 자기계발 기회 확대를 위해 어학 · 기술자격증 취득 등에 대한 자기계발 비용을 1인당 5만원 한도내에서 2천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민간 전문인력인 성고충전문상담관은 2017년 23명에서 2018년 44명으로 확대하여 성고충 상담 및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장병들의 휴식시간에 독서분위기 조성을 위한 독서카페는 2018년 989개소를 설치하여 완료한다. 예비군 훈련여건 개선을 위해 동원생활관에 온수샤워장 10개소, 세탁실 17개소를 설치하고, 동원훈련보상비를 60.0% 인상(2017년 10,000원 → 2018년 16,000원)하여 예비군훈련 실비를 현실화한다.

장병 등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응급 외상환자 신속 지원을 위한 「국군외상센터」 완공에 앞서 민간병원과의 진료협력을 시범 실시한다. 장병 건강권 확보를 위해 미세먼지 마스크를 2017년 경계병 3개에서 2018년 전 장병 14개로 확대 지급한다. 노후 상용구급차 축소(노후화율 : 2017년 15.8% → 2018년 4.9%) 등 노후 의무장비와 시설을 현대화한다.

군에 대한 對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배상금을 현실화한다.(군 소음피해 배상금 2017년 558억원 → 2018년 954억원). 지뢰피해자(196명/65억)와 특수임무수행자 (178명/106억)에 대한 보상을 지속 시행한다.

국방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군사시설 관련 기존의 '건설' 중심에서 '유지관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시설유지비 확대, 2018년도 4,098억/711억 증가) 신규건립을 최소화하며 시설물의 수명 장기화를 모색한다. 또한 전비 태세 준비를 위한 탄약고와 정비고를(탄약고 187동 → 261동/개선율 42.5% → 44.4%, 정비고 50동 → 122동/개선율 73.1% → 74.3%) 비롯하여 장병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병영 생활관 필수시설을 중점적으로 개선한다.(육군 병영생활관 17동 신규 반영)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 유지를 위해 전차, 함정, 전투기 등 군 보유 주요 전략자산에 대한 안정적인 수리부속 공급 등 정비 지원을 강화한다.(2017년 28,164억원 → 2018년 30,269억원) 신규 도입된 아파치헬기 교탄 확보, 대테러 부대에 대한 장비 · 물자 완비 등 작전 완전성 보장을 위해 교육용 탄약 및 장비 · 물자확보를 확대한다. 또한 날로 진화하고 있는 사이버 해킹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 사이버방호 센터 체계보강, 지능형 위협분석체계 구축 등 관련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인력을 전문화하는 등 사이버전력을 강화한다.

도시지역 작전능력 보강을 위한 양안형 야투경, 대테러 기관단총 등 대테러 장비를 보강하여 대테러 역량을 강화한다. 전투력 유지에 필수적인 장비중심으로 투자하되, 일반 물자구입 축소, 소요예측 정교화 등을 통해 예산 효율화를 병행한다.

[표 9-3] 전력유지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합 계	109,913	112,370	2.2
군수지원 및 협력	46,806	49,355	5.4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27,774	27,946	0.6
군인사 및 교육훈련	5,811	5,349	△8.0
기타	29,522	29,720	0.6

▣ 방위력개선 부문

북핵 도발 등을 대비 방위력 개선을 강화하기 위해 3축 체계 등 필수전력을 조기 확보하며, 자주국방 및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첨단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 방위력 개선 : (2017년) 12.2조원 → (2018년) 13.5조원 (10.8%증가)



북핵 위협 등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핵심 전력인 한국형 3축 체계(Kill Chain, KAMD : Korea Air and Missile Defence, KMPR : 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를 최우선적으로 증강함과 동시에 국지도발 대응과 적 추가도발 의지를 분쇄하기 위해 감시정찰 · 타격 전력을 보강한다.

통신기반체계를 개선사업(군위성통신 체계-Ⅱ, 전술정보통신체계 등)을 통해 국방개혁으로 인해 변화하는 작전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K-2 전차, K-9 자주포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기동능력과 정밀타격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우리나라 자체 첨단전력 방위체계 개선을 위해 스텔스기(F-35A)를 인수하고 이지스함 구축을 지원한다. 첨단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원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국방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며, 국방 관련 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에 시설보강 등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국방과학 기술력을 확보한다.



또한, 방위력개선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무기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체계 수립과 동시에 철저한 소요검증과 사업타당성조사 강화를 통해 국방예산 지출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표 9-4] 방위력개선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합 계	121,970	135,203	10.8
무기체계 양산 및 도입	94,132	106,186	12.8
국방 R&D 투자	27,838	29,017	4.2

외교·통일 분야 10

10-1 재정지원 방향

2018년 외교 · 통일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4.7조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된 수준이다. 2018년에는 외교인프라 강화, 재외국민보호 및 국민외교,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 및 상생형 ODA,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실질적 통일준비 등에 중점을 두었다.

▣ 외교인프라 강화 및 재외국민보호 및 영사서비스 강화

외교수요에 부응하여 외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외공관의 인적 · 물적 외교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테러 자연재난에 대비한 재외국민보호 및 국민외교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이다. 또한 한국에 대한 호감도 증대, 한국외교의 수용성 강화를 위한 차별성 있는 정책 및 문화 공공외교 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 지속가능개발의제 시대를 맞아 국제개발협력 지속 확대

UN 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을 위해 해방 직후 최빈국에서 60여년만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 발전한 경험을 바탕으로 ODA를 통한 국제사회 기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ODA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개발협력 문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하고, 백신보급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여 국내 기업의 신흥 시장 진출을 적극 도모 할 수 있는 분야의 ODA 사업을 중점 지원한다.

▣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정부는「문재인의 한반도정책」에 따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하여 "한반도

新경제지도 구상", "인도적 문제해결" 등 각 분야에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한반도 新경제지도 구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 확대 및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 등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표 10-1] 외교 · 통일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합 계	45,660	47,238	3.5
외교 · 통상 부문	33,305	34,980	5.0
통일 부문	12,355	12,258	△0.8

10-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외교 · 통상 부문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국제사회 기여를 지속하고 외교수요에 부응하는 외교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교인프라 확충 및 재외국민보호 및 국민외교 기반구축을 위해 외교 · 통상부문 총 지출은 3조4,980억원으로 편성한다.

☞ 외교 · 통상부문 총지출: (2017년) 33,305억원 → (2018년) 34,980억원 (5.0%증가)

2018년도 외교 · 통상부문 총지출은 3조 4,980억원으로 테러 대응 등 안전 강화,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국제기여 확대 등으로 2017년도 보다 1,675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한국외교의 수용성 강화를 위한 전략지역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북미지역 국가와의 협력관계 강화를 도모해 나간다(35억원 → 37억원). 아울러 유럽지역

국가(16억원 → 26억원)와의 협력관계 증진도 추진하고 있다.
외교의 공론화 과정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및 정책적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해 국민외교 추진기반 구축 예산(5억원)을 신규 반영하였다.

IS 등 국제적인 테러단체의 위협이 확대되고, 지진 등 자연재난 발생으로 인한 해외 진출한 우리 국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재외국민보호예산을 확대(104억원 → 112억원)하고, 특히 재외국민 안전제고를 위해 '해외안전지킴센터' 예산(1.3억원)을 신규 반영하였다.
또한, 재외공관 행정직원 증원 및 처우개선을 확대하여(1,256억원 → 1,303억원)하여 외교인프라를 확충한다.



〈 공공외교 한국주간행사(Korea Week) 〉



〈 재외국민보호 – 해외안전여행 캠페인 〉

국제개발(ODA) 분야는 세계적인 난민 증가 등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응하여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는 동시에, 국익을 증진하는 개발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한다. 청년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ODA에 활용하는 KOICA의 CTS 사업을 확대(73억원 → 86억원)하고, 글로벌헬스연구기금을 신설(50억원)하여 백신 보급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업의 참여를 적극 확대한다.
청년의 국제기구 진출을 확대(43명 → 63명)하고, 개발협력 인재 양성을 위하여 KOICA에 단계별 교육과정(20개)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경력 관리를 돕는다. 개발협력 코디네이터를 신설(12명)하는 등 수준별 일자리를 확충하여 국제개발협력 인재 양성을 위한 경력 사다리를 마련한다.
또한, 개도국의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며 국내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과 연계되는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사업을 확대(9,545억원 → 10,581억원)하고,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공유하여 개도국의 성공적인 발전을 돕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을 적극 추진(203억원 → 212억원)한다.



〈 방글라데시 직업훈련원 역량강화사업 〉



〈 한-필 카비테 친선병원 건립사업 〉

[표 10-2] 외교 · 통상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외교 · 통상 부문	33,305	34,980	5.0
공적개발원조(ODA)	22,174	23,651	6.7
국민외교 추진기반 구축	-	5	순증
행정직원 역량강화	1,256	1,303	3.8

▣ 통일 부문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통일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일부문 총지출은 1조 2,258억원으로 편성한다.

☞ 통일부문 총지출 : (2017년) 12,355 억원 → (2018년) 12,258 억원 (0.8%감소)

☞ 남북협력기금 총지출 : (2017년) 9,627억원 → (2018년) 9,624억원 (0.03%감소)

「한반도 新경제지도 구상」은 환동해권 에너지 · 자원벨트, 환서해권 교통 · 물류 · 산업벨트, 접경지역 환경 · 관광벨트의 3대 벨트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남북간 경협기반 사업을 확대(1,389억원 → 2,480억원)하여 「한반도 新경제지도 구상」 추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또한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통일국민협약'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추진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산가족이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이산가족 상봉행사 사업을 연 3회 기준으로 확대(34억원 → 84억원)한다.
또한, 부자 관계뿐만 아니라 형제 · 자매 관계까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산가족에 대한 유전자 검사 지원을 확대한다.



〈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



〈 하나센터 지역취업지원 사업 〉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생활 안정을 위해 주거지원금 단가를 인상(13백만원 → 16백만원)하고, 원활한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지역적응센터를 확대(23개소 → 25개소)하여 북한이탈 주민의 자립 · 자활 능력 제고 및 사회통합을 위한 생활밀착형 정착지원을 강화한다.

[표 10-3] 통일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통일 부문	12,355	12,258	△0.8
경협기반(무상)	1,389	2,480	78.5
이산가족 교류지원	61	120	97.0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1,110	1,126	1.4

11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1-1 재정지원 방향

2018년도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의 재정투자규모는 19.1조원으로 2017년 18.1조원보다 5.1% 증가하였다. 2018년 예산은 생활치안 기반 확대, 범죄예방 ·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안전 · 재난사고 시 현장 대응능력 제고 및 재해 ·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예방 등에 중점을 두었다.

▣ 민생치안 인력증원 등 범죄예방 활동 강화

경찰관 증원계획에 따라, 2018년에는 2,593명의 인력(해경포함)을 증원한다. 증원된 인력은 대부분 지구대 · 파출소에 배치하여 현장 치안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선제적 범죄 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범죄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고, 여성 ·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성 밤길 안심 거리를 조성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맞춤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마을변호사 및 법률홈닥터 활동을 지속 지원하고, 무료 법률구조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는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조력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및 수용자에 대한 취업 연계형 직업훈련 확대를 통해 수용자의 인권 보장 및 안정적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치료명령 대상자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는 등 재범 방지 및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도모할 것이다.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시설을 확충하고, 간병비 지원 확대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 및 재해예방 인프라 지속 확충

중앙119구조본부 상황실을 확대 · 보강하고 구조헬기 시뮬레이션 센터를 신축하는 등 소방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해상 재난 대응을 위해 신형 연안구조정의 지속적 확충으로 현장 구조능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또한, 상습침수 ·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재해위험지역 예방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표 11-1]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합 계	181,397	190,678	5.1
법원 및 헌재	19,058	19,608	2.9
법무 및 검찰	34,206	37,635	10.0
경찰	104,790	108,349	3.4
해양경찰	12,071	12,671	5.0
재난관리	11,272	12,414	10.1

11-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법원 및 헌법재판소 부문

개인회생 · 파산신청자에 대해 무료상담 및 소송비용 등 지원을 확대하고,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제도를 전면 실시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국선변호료 지원 : (2017년) 568억원 → (2018년) 595억원 (4.8%증가)

대법원은 개인회생 · 파산신청자에 대해 무료상담 및 소송비용 등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회생법원 내 "뉴스타트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회생법원을 방문한 채무자들에게 개인회생 · 파산절차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경제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파산관재인 보수를 지원한다.

또한,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선임된 국선변호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 및 공판 단계까지 변호활동을 계속하는「논스톱 국선변호인제도」의 전면적 실시를 지원한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을 통해 국민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구조제도 및 사회적 약자의 법률서비스 개선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증가하는 헌법재판 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재판활동 연구지원 등을 강화하고, 무인 행정민원발급기 설치 등 대국민서비스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표 11-2] 법원 및 헌법재판소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비 고
합 계	19,058	19,608	2.9	
도서관운영지원	79	88	11.5	· 사법정보인프라구축 및 도서관 확장 · 이전
국선변호료지원	568	595	4.8	· 구속사건논스톱 국선변호제도 실시
등기빅데이터 시스템구축	–	35	순증	· 등기정보 제공 시스템 고도화
소송구조지원	46	60	32.1	· 개인회생 · 파산소송 구조지원
헌법재판정보화	34	38	10.0	· 헌법재판정보시스템 고도화

▣ 법무 및 검찰 부문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법률조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용자에 대한 인권 보장 및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보호 및 지원으로 범죄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한다.

☞ 법률구조 : (2017년) 477억원 → (2018년) 503억원
☞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 (2017년) 486억원 → (2018년) 671억원
☞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 (2017년) 171억원 → (2018년) 212억원

마을변호사 및 법률홈닥터 활동을 지속 지원하고, 무료 법률구조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는 등 서민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한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기존 시설 내 유휴시설 리모델링 및 수용자 관리비용 현실화 등을 통해 수용자 처우를 개선해나가는 한편, 취업 연계형 교도작업 및 직업 훈련 실시를 통해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한다.

범죄피해자 전문 치유시설인 스마일센터를 추가로 2개소 확충(11개소 → 13개소)하는 한편, 전국 스마일센터를 총괄하는 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범죄피해자의 조속하고 원만한 일상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아동학대 피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도 3개소 확충(60개소 → 63개소)한다.

[표 11-3] 법무 및 검찰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비 고
합 계	34,206	37,635	10.0	
법률구조	477	503	5.3	· 무료법률구조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대
교정시설 장비운용 및 현대화	486	671	37.9	· 유휴시설 리모델링, 시설 내진 보강 등
시설보완	22	73	229.4	· 취업연계형 교도작업장 및 직업훈련장 신설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171	212	24.0	· 스마일센터 2개소 신설 등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및 지원	183	193	5.5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 확충 등

▣ 경찰 부문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관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여성 밤길 안심거리 조성, 사이버 테러 수사용 장비, 2차 교통사고 예방, 수사민원 상담센터, 지구대 · 파출소 리모델링 등 국민안전을 위한 치안인프라를 확충한다.

☞ 여성청소년보호활동 : (2017년) 126억원 → (2018년) 131억원 (3.5%증가)

☞ 사이버안전수사활동 : (2017년) 13억원 → (2018년) 39억원 (203.5%증가)

경찰관 증원계획에 따라, 2018년에는 2,057명 인력증원을 추진한다. 증원된 인력은 대부분 지구대 · 파출소에 배치되어 현장 치안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범사회적 협력을 바탕으로 생활 주변의 범죄 불안요인으로부터 주민의 삶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공동체 치안을 위한 범죄분석 시스템 및 여성 밤길 안심거리 조성 등 국민과 함께하는 치안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여성 ·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밀한 보호활동 전개를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 가정폭력 통합 솔루션 등을 지속 추진한다.

특히, 제7대 전국동시 지방선거 지원을 위한 선거상황실을 운영하여 엄정한 선거사범 수사 등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인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동원 병력 운영비 등도 지원한다.

경찰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근무여건 개선 및 치안인프라 지속 확충을 위해 노후 헬기·버스 교체,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확대, 지구대 · 파출소 리모델링, 2차 교통사고 예방, 사이버 테러 수사용 장비 구입 등을 추진한다.

[표 11-4] 경찰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비 고
합 계	104,790	108,349	3.4	
여성청소년보호활동	126	131	3.5	· 지문 등 사전등록제
성폭력예방지원 및 여성청소년범죄수사	39	49	25.6	· 성범죄자 신상정보관리
사이버안전수사활동	13	39	203.5	· 사이버 테러 수사용장비
교통안전활동	779	792	1.7	· 2차 교통사고 예방
경비경찰활동	421	469	11.4	· 평창동계올림픽안전관리
청사시설관리	782	846	8.2	· 지구대·파출소 리모델링

▣ 해양경찰 부문

해양영토·주권 수호 역량 강화를 위해 경비함정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해양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를 지속 강화한다.

☞ 함정건조: (2017년) 408억원 → (2018년) 524억원

☞ 해양오염예방활동: (2017년) 56억원 → (2018년) 59억원

서해 및 NLL해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해 중형급 경비함정 3척, 중형 방탄정 2척과 독도 · 이어도 주변의 영토 수호를 위해 3000톤급 대형 경비함정 1척을 2020년까지 배치할 계획이다.

해상에서의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복구 및 구조활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로 헬기 1대를 추가 반영하여 총 3대의 중형급 신형헬기를 도입한다.

연안에서의 안전한 선박운항을 위하여 군산 · 목포연안 VTS를 확충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 해역에서의 VTS간 통합을 추진한다.

갈수록 높아지는 해양 오염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방제작업정 1척을 추가로 도입하고 노후한 방제단정 3척 및 오염방제 비품의 교체도 확대한다.

해양 경비 및 안전사고 대응 일선에 있는 해양경찰 요원들의 안전을 우선하기 위하여 각종 진압 및 전투 장비를 추가로 확보하고, 직무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 중형헬기(탑승인원 14명) 〉



〈 VTS센터 〉

[표 11-5] 해양경찰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비 고
합 계	12,071	12,671	5.0	
함정건조	408	524	28.3	· 선박펀드 상환 종료, 3천톤급 등 총 6척 건조중
해양오염예방활동	56	59	6.5	· 방제작업정 1척 신규 도입, 방제단정 3척 노후교체
항공기도입	379	210	△44.6	· 대형헬기 1대 도입 종료, 중형헬기 3대 신규 도입
연안구조장비도입	198	156	△21.5	· 신형연안구조정 12척 도입 및 계류시설 13개소 설치
VTS구축운영	269	154	△42.9	· 경인·태안연안VTS 종료, 군산·목포연안VTS 신규반영

▣ 재난관리 부문

소방안전교부세와 재난 및 안전관리특별교부세 확대를 통해 지자체 안전투자를 유도하고, 재해 예방사업의 지속 투자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소방안전교부세와 재난 및 안전관리특별교부세 : (2017년) 1조 399억원 → (2018년) 1조 740억원

☞ 재해예방투자 : (2017년) 6,413억원 → (2018년) 6,570억원

재난에 대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소방의 역량을 강화한다. 소방공무원들의 심신건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중앙119구조본부 상황실 보강 및 헬기 시뮬레이터 센터 신축을 추진한다.

☞ 소방공무원 복지증진 : (2017년) 21억원 → (2018년) 42억원

☞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수도권대, 영남대) : (2017년) 17억원 → (2018년) 28억원

소방안전교부세와 재난 및 안전관리특별교부세가 확대되어 지자체 안전투자를 유도하고, 상습침수 · 붕괴위험지역 등 시급히 보수 · 보강이 필요한 재난취약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재해위험지구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 등 재해위험지역 등 투자를 확대하여 재해예방인프라를 계속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경주 · 포항지역 지진 발생을 계기로 지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내진보강 제도개선, 교육 · 홍보 및 인력양성 소요 등을 확대 지원한다.

재난현장에 대한 대응성 강화를 위해 소방의 물적 · 인적 역량을 함께 강화한다. 중앙119 구조본부의 상황실을 보강하여 전국의 대형 재난 대응성을 높이고, 구조헬기 시뮬레이터 센터를 신축하여 조종사들의 훈련 여력을 확대한다. 나아가 충청 · 강원권, 호남권에 대한 중앙119특수구조대 청사 신설 및 장비 도입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충주 화학센터 신설에 따른 소요장비를 구매한다.

한편 참혹한 현장에 자주 노출되어 일반인 대비 정신질환 등 유병률이 높은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찾아가는 심리상담실(3년 주기 → 2년 주기)', '심신안정

프로그램(연간 930명 → 1,860명)'을 확대한다. 그간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해 공상 처리가 곤란하고 건강 이력이 관리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건강이력 DB 관리시스템' 또한 구축할 예정이다.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의 투명성 저하로 인한 승강기 안전 위해요인 해소를 위해 '승강기 유지관리 입찰시스템'을 구축한다. 2018년부터 국민 생활안전과 산업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기 위해 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를 운영한다.

[표 11-6] 재난관리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사 업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비 고
합 계	11,272	12,414	10.1	
재해예방투자	6,413	6,570	2.4	· 재해위험지역정비, 우수저류시설설치, 소하천정비
소방공무원복지 증진	20.8	41.6	100.0	·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심신안정 프로그램 확대 등
중앙119특수 구조대 지원(수도권대, 영남대)	16.7	27.6	65.3	· 중앙119구조본부 상황실 보강, 헬기 시뮬레이터 센터 신축 등

참고2

안전 분야

선제적 예방투자 강화 및 생활 밀착형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지속 추진과 교통사고·산업재해 등 생활 밀착형 안전관리 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안전분야 투자 규모는 세월호 사고 이후 2015년에 2조원 이상 크게 확대된 이후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8년에는 15조원대로 증가하였다.

* (2014년) 12.4조원 → (2015년) 14.8 조원(+19%) → (2016년) 14.7조원 → (2018년) 14.6조원 → (2018년) 15.1조원 (+3.9%)

경주·포항지진 이후 한반도 대형지진 발생가능성에 대비하여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지진방재 예산 투자규모를 2017년 대비 대폭 확대 지원하였다.

[참고 2-1] 지진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합 계	3,771	6,490	72.1
지진대비인프라구축	532	899	68.8
지진조기경보체계구축	289	184	△36.4
내진 보강	2,949	5,408	83.4

안전위험 시설에 대한 상시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 공공시설 등 재난 취약시설의 보수·보강을 지속 추진하고 사회·경제적 파장이 큰 노후 SOC 개보수, 재해예방 투자,

가뭄 및 지진대응,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 예방 등 재해 ·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예방투자를 강화하였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 특화된 안전관리 대책 지원을 강화하여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고 교통사고, 산업재해, 식품안전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생활 밀착형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참고 2-2] 안전분야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합 계	145,699	151,377	3.9
재난안전시스템 운영	38,370	40,378	5.1
재해예방시설 확충	70,585	72,646	2.8
교육 · 훈련 · 홍보	1,638	2,026	27.1
안전 R&D	7,075	7,742	10.8
예비비	28,032	28,585	2.1

12 일반 · 지방행정 분야

12-1 재정지원 방향

2018년 일반·지방행정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69.0조원으로 전년대비 8.9% 증가된 수준이다. 2018년에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지원 및 지방재정의 형평성 · 건전성 강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는 정부혁신, 재정운용의 투명성 강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

▣ 지방재정 안정적 지원 및 지방재정의 형평성 · 건전성 강화

복지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교부세를 전년대비 5.2조원 증액(40.7조원 → 45.9조원)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 재원 부족을 대비하여 1,2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국가에서 인수할 계획이다.

타당성조사 중복해소 및 간소화, 예산편성 자율성 확대,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주체변경 등을 통해 지방재정제도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등으로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제고한다.

▣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는 정부혁신

국민참여 확대와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범정부적 협력을 통해 삶의 질과 직결된 난제를 해결하는 행정 혁신을 추진하여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한다.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성 제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투 · 개표 사무, 위법행위 예방 · 단속, 최근 도입된 사전투표 및 후보자의 정책선거 정착 등을 위해 차질없이 뒷받침 한다.

▣ 국민참여예산제도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제안, 심사, 선정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통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 재정에 대한 직접적인 국민 참여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지능형 정부 구현으로 온라인 서비스 혁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과 서비스를 혁신하는 지능형 정부를 본격 구현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과 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사이버 안전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표 12-1] 일반 · 지방행정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합 계	633,379	689,863	8.9
지방행정재정지원 (교부세 · 지방채인수 제외시)	415,389 (8,076)	467,363 (7,558)	12.5 (△6.4)
재정 · 금융	171,787	177,377	3.3
입법 및 선거관리	11,658	10,479	△10.1
정부자원관리	8,602	7,600	△11.7
국정운영	5,331	5,638	5.8
일반행정	20,611	21,407	3.9

12-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지방행정 · 재정지원 부문

재정건전성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 발전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기반조성 및 주민 중심의 맞춤형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한다.

☞ (2017년) 415,389억원 → (2018년) 467,3634억원 (12.5% 증가)

지방세 비과세 · 감면 정비, 신 세원 발굴, 세외수입 체납징수 확대, 지방교부세 증액(40.7조원 → 45.9조원) 등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 발전을 지원한다. 또한, 중앙 · 지방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 효율성 강화로 경쟁력 있는 지방 자치를 구현한다.

주민주도의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공동체 활성화로 소득 증대 등 지역경쟁력을 강화한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로 상생 공동체 기반을 강화하고, 도서지역의 원활한 연료 운반을 위한 사업을 지원한다.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접경권(강원 · 경기 · 인천 등 15개 시 · 군)발전 지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등 각 지역의 지역개발사업을 지속 지원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한다.

[표 12-2] 지방행정 · 재정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비 고
합 계	415,389	467,363	12.5	
지방교부세	407,313	459,804	12.9	· 국세수입 증가
지방분권 균형발전 홍보지원	-	10	순증	
섬 발전 협력사업	-	20	순증	
특수상황지역개발	1,894	1,894	-	

▣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국회의 원활한 입법활동 지원 및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추진한다.

☞ (2017년) 11,658억원 → (2018년) 10,479억원 (10.1% 감소)

국회 인턴 1명을 보좌관 8급 비서직으로 전환하고, 비교섭단체 정책지원비를 대폭 증액(2017년 7억원 → 2018년 14억원)하는 등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2017년 434억원 → 2018년 393억원)하고 국회 미래연구원 설립(2018년 신규, 39억원)을 통하여 국회의 중장기적 정책 역량을 강화한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위법행위 예방 · 단속 및 선거 참여율 제고를 위한 투표편의 확대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에 중점을 두고 지원(2014년 221억원 → 2018년 210억원) 한다. 특히,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투표소에 장애인 임시경사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올바른 선거 · 정치문화 정착을 위한 선거 · 정당관계자 교육 및 주권의식 등의 교육을 확대(2017년 29억원 → 2018년 38억원)한다.

[표 12-3] 입법 및 선거관리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비 고
합 계	11,658	10,479	△10.1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1	210	14,897.9	· 지선 선거관리경비
입법활동지원	434	393	△9.4	· 인턴1인→8급 전환
국회 미래연구원	-	39	순증	· 미래연구원 설립
민주시민의식 및 함양지원	29	38	31.0	· 교육과정 증설

▣ 재정 · 금융 부문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혁신기업 투자확산 및 안정적 정책모기지 공급 등 정책금융 지원 등을 위해 재정 · 금융부문에 17조 7,377억원을 편성하였다.

☞ 재정 · 금융부문 총지출 : (2017년) 171,787억원 → (2018년) 177,377억원(3.3%증가)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제안, 심사, 선정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2018년 19억원)한다. 예산국민참여단 운영 등 국민참여를 통해 국가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이 생활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혁신기업을 지원하는 대규모 모험자본 공급(혁신모험펀드)을 위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투자할 계획이다(2018년 1,000억원). 또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규로 900억원 출자한다. 장기 · 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서민 · 중산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표 12-4] 재정 · 금융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비 고
합 계	171,787	177,377	3.3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	19	순증	· 예산국민참여단 운영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	900	순증	· 정책모기지 원활한 공급
한국산업은행 출자 (혁신모험펀드)	-	1,000	순증	
국고채이자상환	118,270	119,926	1.4	

▣ 정부자원관리 부문

지능형 정부 구현을 통해 첨단행정 혁신기반을 강화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 안심하고 이용하는 사이버 환경을 구현할 계획이다.

☞ (2017년) 8,602억원 → (2018년) 7,599억원 (11.7% 감소)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첨단 신기술이 전자정부에 도입되어 국민 개인별 비서형 온라인서비스가 실현되고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이 개선되며, 주민안전 · 생활환경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 중심의 과제가 새롭게 추진된다.

아울러, 전자정부 전체 사업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사업계획 수립시 사전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 받도록 절차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IoT 등 신기술 확산에 따른 보안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전자정부 사이버안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권리행사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한다.

[표 12-5] 정부자원관리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합 계	8,602	7,599	△11.7
전자정부지원	1,263	869	△31.2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	36	53	45.8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	–	20	순증

▣ 일반행정 부문

노후 청사시설 유지관리 및 창성동 별관 신축 등을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국가기록물 관리 개선 등을 위해 일반행정 부문 총지출은 2조 1,407억원으로 편성한다.

☞ 일반행정부문 총지출 : (2017년) 20,611 억원 → (2018년) 21,407억원 (3.9%증가)

2018년도 일반행정부문 총지출은 21,407억원으로 청사시설 유지관리, 기록물관리 확대 지원 등으로 2017년도 보다 796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청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통해 모범고용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지속 수행한다. 또한, 세종시 정주여건 안정화에 따라 수도권 출퇴근 버스 운행노선 감축(2017년 116억원 → 2018년 98억원) 및 노후된 청사 시설물 정비, 각종 편의시설 개선 등 입주부처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불편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전자문서, 행정정보데이터, 웹, 디지털시청각 등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전자기록에 대한 기록관리 투자를 강화한다. 또한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기록물 관리 업무의 안정성을 강화한다.

[표 12-6] 일반행정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a)	2018년(b)	증감률((b-a)/a)	비 고
합 계	20,611	21,407	3.9	
정부청사 시설 관리	1,835	1,694	△7.7	· 정부청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무원통근버스 운행	116	98	△15.5	· 통근버스 점진적 감축
국가기록물정리	71	83	16.9	· 기록실무원 정규직 전환

3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제1장 2018년도 예산

제2장 2018년도 기금 운용계획

별 첨 작성자 및 편집자 명단

제 1 장

2018년도 예산

01 2018년도 예산 총칙

02 일반회계

03 특별회계 규모 및 개요

04 계속비

05 명시이월비

06 국고채무 부담행위



2018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18**



2018년도 예산총칙

01

■ 제1조 2018년도 세입 · 세출예산 총액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일반회계	301,417,202,896,000원
②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580,541,000,000원
③ 교통시설특별회계	18,247,036,000,000원
④ 등기특별회계	364,273,685,000원
⑤ 교도작업특별회계	129,925,000,000원
⑥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437,206,500,000원
⑦ 환경개선특별회계	4,786,267,025,000원
⑧ 우체국보험특별회계	992,150,000,000원
⑨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564,081,000,000원
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290,943,613,000원
⑪ 국방 ·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567,384,000,000원
⑫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255,311,000,000원
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71,809,511,000원
⑭ 지역발전특별회계	9,889,905,000,000원
⑮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892,717,000,000원
⑯ 양곡관리특별회계	1,758,255,000,000원
⑰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104,087,638,000원
⑱ 조달특별회계	342,035,230,000원
⑲ 우편사업특별회계	4,676,894,069,000원
⑳ 우체국예금특별회계	3,278,252,000,000원

■ 제2조 2018년도 세입 ·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예산」과 같다.

■ 제3조 2018년도 계속비는 별첨 「계속비」와 같다.

■ 제4조 계속비 예산으로 총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내에서 연부액을 초과하여 시공할 수 있다.

■ 제5조 2018년도 명시이월비는 별첨 「명시이월비」와 같다.

■ 제6조 2018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별첨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같다.

■ 제7조 국가재정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한도액은 1,300,000,000,000원으로 하며, 일반회계 재해대책예비비 사용에 준하여 집행한다.

■ 제8조 2018년도에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연도 중 최고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① 통합계정(일반회계 및 16개 특별회계 적용, 우체국보험 · 우체국예금 · 양곡관리특별회계는 제외)	30,000,000,000,000원
② 양곡관리특별회계	2,000,000,000,000원
③ 공공자금관리기금	8,000,000,000,000원
④ 국유재산관리기금	200,000,000,000원

■ 제9조 2018년도 중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액면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당해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차환하기 위한 국채발행액은 그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 주택도시기금	16,000,000,000,000원
② 공공자금관리기금	108,000,000,000,000원
③ 외국환평형기금	1,000,000,000달러(미합중국화폐)

■ 제10조 ① 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의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식비, 임차료
3. 배상금, 국선변호금, 법정보상금
4.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
   (국고금관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조달자금에 대한 이자지출 포함) 경비
5.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6. 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한 군 및 해양경찰의 유류경비 부족액
7. 기업특별회계의 양곡관리비용, 우체국예금 지급이자, 우편운송료
8. 재해대책비(전염병 예방 · 대책비 포함)
9. 반환금
10. 선거관련경비
1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급여, 장애인연금급여

② 방위사업청 소관 지휘정찰사업 · 기동화력사업 · 함정사업 · 항공기사업 · 유도무기사업은 긴급 소요, 정산결과 증액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상호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 관련사항은 이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1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회 계	수 입	지 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금융영업수입	지급이자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부가보험료수입	보험보상금

■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 중 1,800,000,000,000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및 전염병 예방 · 대책비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지역전략산업 재정지원 (단,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법이 제정된 경우에 한함),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에 정부출연을 위한 경비(10,000,000,000원)와 관련된 비용, 부산대 BTO 소송 패소시 배상금, 구로 분배농지 손해배상사건 관련 국가배상금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 제13조 각종 선거경비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제12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 용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제14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 및 제21조 단서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출금은 다음과 같다.

①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2017년도 결산이익잉여금 예상액 중 일반회계 전출금	50,000,000,000원
②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편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95,769,000,000원
③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금	62,000,000,000원
④ 조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122,570,000,000원
⑤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107,243,000,000원

■ 제15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입금은 다음과 같다

①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296,277,000,000원
②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전 입금	266,472,000,000원
③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9,477,000,000원
④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285,025,000,000원
⑤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전입금	495,769,000,000원
⑥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77,526,000,000원

■ 제16조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2018년도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금액의 합계액은 2,823,688,000,000원 이내로 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한도는 원자력사업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한 지급 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 이내로 한다.

■ 제17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회계별로 제10조 제1항 제8호의 재해대책비 비목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 제18조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토지보상비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일반회계
(General Account)

02

2-1 세입예산 (Revenue Budget)

가. 총괄표

구 분 Classification	2017년도 본예산 FY 2017 Main Budget		2017년도 추경예산 FY 2017 Supplementary Budget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1. 내국세(Internal Taxes)	204,286,600	74.3	213,101,400	74.8
2. 관세(Customs Duties)	8,990,600	3.3	8,990,600	3.2
3.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Transportaion · Energy · Environment Tax)	15,378,200	5.6	15,378,200	5.4
4. 교육세 (Educational Tax)	5,074,700	1.8	5,074,700	1.8
5. 종합부동산세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1,414,900	0.5	1,414,900	0.5
· 기타수입(Others)	11,153,121	4.1	12,272,940	4.3
7. 세외수입(Non-Tax Revenues)	39,865,414	14.5	40,985,233	14.4
· 국채발행(Borrowing from Bonds)	28,712,293	10.4	28,712,293	10.1
합 계(Total)	275,010,414	100.0	284,945,033	100.0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18년도 예산 FY 2018 Budget		2017년도 본예산 대비 증감 Change		2017년도 추경예산 대비 증감 Change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227,980,200	75.6	23,693,600	11.6	14,878,800	7.0
9,417,800	3.1	427,200	4.8	427,200	4.8
16,390,200	5.4	1,012,000	6.6	1,012,000	6.6
5,247,800	1.7	173,100	3.4	173,100	3.4
1,780,100	0.6	365,200	25.8	365,200	25.8
11,761,904	3.9	608,783	5.5	△511,036	△4.2
40,601,103	13.5	735,689	1.8	△384,130	△0.9
28,839,199	9.6	126,906	0.4	126,906	0.4
301,417,203	100.0	26,406,789	9.6	16,472,170	5.8

구 분 Classification	2017년도 본예산 FY 2017 Main Budget
1. 국세 (Tax Total)	235,145,000
가. 내국세 (Internal Taxes)	204,286,600
나. 관세 (Customs Duties)	8,990,600
다.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Transportaion · Energy · Environment Tax)	15,378,200
라. 교육세 (Education Tax)	5,074,700
마. 종합부동산세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1,414,900
2. 세외수입 (Non-Tax Revenues)	39,865,414
가. 재산수입 (Property Income)	3,296,709
나. 경상이전수입 (Current Transfer)	5,855,568
다. 재화및용역판매수입 (Sales of Goods & Services)	716,279
라. 수입대체경비수입 (Receipts Tied to Expenses)	329,871
마. 관유물매각대 (Sales Proceeds of Government-Owned Properties)	69,377
바.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Treasury Loan & Sub-Lease Loan)	2,259
사.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Borrowing & Excess Fund)	64,311
아. 전년도이월금 (Carry-over from prev. Year)	0
자.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Transfers Income & Others)	29,531,040
(국채발행) (Goverment Bonds Issuance)	(28,712,293)
합 계 (Total)	275,010,414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17년도 추경예산 FY 2017 Supplementary Budget	2018년도 예산 FY 2018 Budget	2017년도 본예산 대비 증감 Change		2017년도 추경예산 대비 증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243,959,800	260,816,100	25,671,100	10.9	16,856,300	6.9
213,101,400	227,980,200	23,693,600	11.6	14,878,800	7.0
8,990,600	9,417,800	427,200	4.8	427,200	4.8
15,378,200	16,390,200	1,012,000	6.6	1,012,000	6.6
5,074,700	5,247,800	173,100	3.4	173,100	3.4
1,414,900	1,780,100	365,200	25.8	365,200	25.8
40,985,233	40,601,103	735,689	1.8	△384,130	△0.9
3,296,709	3,265,763	△30,946	△0.9	△30,946	△0.9
5,855,568	6,274,480	418,912	7.2	418,912	7.2
717,467	856,431	140,152	19.6	138,964	19.4
329,871	345,557	15,686	4.8	15,686	4.8
69,377	77,525	8,148	11.7	8,148	11.7
2,259	2,498	239	10.6	239	10.6
64,311	68,635	4,324	6.7	4,324	6.7
1,118,631	0	0	0	△1,118,631	△100.0
29,531,040	29,710,214	179,174	0.6	179,174	0.6
(28,712,293)	(28,839,199)	(126,906)	(0.4)	(126,906)	(0.4)
284,945,033	301,417,203	26,406,789	9.6	16,472,170	5.8

나. 국세수입 내역 (Tax Revenues)

구 분 Classification	2017년도 예산 FY 2017 Main Budget
가. 내국세(Internal Taxes)	204,286,600
(1) 소득세(Income Tax)	65,687,300
(가) 신고분(Not Withheld Income Tax)	25,462,700
(나) 원천분(Withheld Income Tax)	40,224,600
(2) 법인세(Corporation Tax)	53,953,500
(3) 상속세(Inheritance Tax)	5,442,200
(가) 상속세(Inheritance Tax)	2,038,600
(나) 증여세(Gift Tax)	3,403,600
(4)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61,535,300
(5) 개별소비세(Special consumption Tax)	9,010,300
(6) 증권거래세(Security Transaction Tax)	4,017,400
(7) 인지세(Stamp Tax)	884,000
(8) 기타내국세(Other Internal Tax)	3,756,600
나. 관세(Customs Duties)	8,990,600
다. 교통 · 에너지 · 환경세(Transportaion · Energy · Environment Tax)	15,378,200
라. 교육세(Educational Tax)	5,074,700
마. 종합부동산세(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1,414,900
합계(Total)	235,145,000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18년도 예산 FY 2018 Budget	증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227,980,200	23,693,600	11.6
72,895,600	7,208,300	11.0
26,954,400	1,491,700	5.9
45,941,200	5,716,600	14.2
63,046,100	9,092,600	16.9
6,151,900	709,700	13.0
2,169,600	131,000	6.4
3,982,300	578,700	17.0
67,331,400	5,796,100	9.4
10,173,800	1,163,500	12.9
3,998,500	△18,900	△0.5
936,100	52,100	5.9
3,446,800	△309,800	△8.2
9,417,800	427,200	4.8
16,390,200	1,012,000	6.6
5,247,800	173,100	3.4
1,780,100	365,200	25.8
260,816,100	25,671,100	10.9

다. 소관별 세입예산 (Revenues Budget by Agencies)

소 관 Agency	2017년도 예산 FY 2017 Budget			
	일반세입 General Rev.	국채 Government Bonds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합계 Total
(0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Office of the President & Office of National Security)	76,000	0	0	76,000
(02) 대통령경호처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Republic Of Korea)	93,000	0	0	93,000
(03) 국회 (National Assembly)	2,021,000	0	0	2,021,000
(04) 대법원 (Supreme Court)	575,030,000	0	0	575,030,000
(05) 헌법재판소 (The Constitutional Court)	16,000	0	0	16,000
(0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entral Election Management Commission)	1,691,000	0	0	1,691,000
(0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6,000	0	0	6,000
(08) 감사원 (Board of Audit & Inspection)	440,000	0	0	440,000
(09) 국가정보원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1,350,620	0	0	1,350,620
(11)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238,879,201,907	28,712,293,000	0	267,591,494,907
① 내국세 (Internal Taxes)	204,286,600,000	0	0	204,286,600,000
② 관세 (Customs Duties)	8,990,600,000	0	0	8,990,600,000
③ 교통·에너지·환경세 (Transportaion · Energy · Environment Tax)	15,378,200,000	0	0	15,378,200,000
④ 교육세 (Education Tax)	5,074,700,000	0	0	5,074,700,000
⑤ 종합부동산세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1,414,900,000	0	0	1,414,900,000
⑥ 세외수입 (Non-Tax Revenues)	3,734,201,907	28,712,293,000	0	32,446,494,907
(12)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211,084,000	0	0	211,084,000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381,048,000	0	0	381,048,000
(14)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49,398,000	0	0	249,398,000
(15) 통일부 (Ministry of National Unification)	2,394,000	0	0	2,394,000
(16)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1,756,682,000	0	0	1,756,682,000
(17)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37,060,000	0	0	237,060,000
(18) 행정안전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53,048,161	0	0	53,048,161
(19)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49,080,000	0	0	49,080,000
(20)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375,000	0	0	20,375,000
(21)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187,986,000	0	0	187,986,000
(22) 보건복지부 (Ministry for Health & Welfare)	412,720,000	0	0	412,720,000

(단위 : 천원)

2018년도 예산 FY 2018 Budget				증감 Change			
일반세입 General Rev.	국 채 Government Bonds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합 계 Total	일반세입 General Rev.	국 채 Government Bonds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합 계 Total
79,000	0	0	79,000	3,000	0	0	3,000
125,000	0	0	125,000	32,000	0	0	32,000
2,349,000	0	0	2,349,000	328,000	0	0	328,000
649,702,000	0	0	649,702,000	74,672,000	0	0	74,672,000
1,247,000	0	0	1,247,000	1,231,000	0	0	1,231,000
4,093,000	0	0	4,093,000	2,402,000	0	0	2,402,000
5,000	0	0	5,000	△1,000	0	0	△1,000
448,000	0	0	448,000	8,000	0	0	8,000
1,875,000	0	0	1,875,000	524,380	0	0	524,380
264,479,628,896	28,839,199,000	0	293,318,827,896	25,600,426,989	126,906,000	0	25,727,332,989
227,980,200,000	0	0	227,980,200,000	23,693,600,000	0	0	23,693,600,000
9,417,800,000	0	0	9,417,800,000	427,200,000	0	0	427,200,000
16,390,200,000	0	0	16,390,200,000	1,012,000,000	0	0	1,012,000,000
5,247,800,000	0	0	5,247,800,000	173,100,000	0	0	173,100,000
1,780,100,000	0	0	1,780,100,000	365,200,000	0	0	365,200,000
3,663,528,896	28,839,199,000	0	32,502,727,896	△70,673,011	126,906,000	0	56,232,989
194,202,000	0	0	194,202,000	△16,882,000	0	0	△16,882,000
401,248,000	0	0	401,248,000	20,200,000	0	0	20,200,000
270,737,000	0	0	270,737,000	21,339,000	0	0	21,339,000
1,756,000	0	0	1,756,000	△638,000	0	0	△638,000
1,914,472,000	0	0	1,914,472,000	157,790,000	0	0	157,790,000
245,631,000	0	0	245,631,000	8,571,000	0	0	8,571,000
55,013,050	0	0	55,013,050	1,964,889	0	0	1,964,889
56,396,000	0	0	56,396,000	7,316,000	0	0	7,316,000
20,392,000	0	0	20,392,000	17,000	0	0	17,000
195,506,000	0	0	195,506,000	7,520,000	0	0	7,520,000
433,639,000	0	0	433,639,000	20,919,000	0	0	20,919,000

소 관 Agency	2017년도 예산 FY 2017 Budget			
	일반세입 General Rev.	국채 Government Bonds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합계 Total
(23)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225,000	0	0	225,000
(24)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81,714,000	0	0	81,714,000
(25)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8,094,000	0	0	8,094,000
(26)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161,379,000	0	0	161,379,000
(27) 해양수산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56,804,000	0	0	56,804,000
(28) 중소벤처기업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56,707,000	0	0	56,707,000
(29) 국가보훈처 (Ministry of Patriots & Veterans Affairs)	7,497,080	0	0	7,497,080
(30) 인사혁신처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6,675,000	0	0	6,675,000
(32) 식품의약품안전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3,264,000	0	0	23,264,000
(33)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1,000	0	0	21,000
(34)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31,183,000	0	0	31,183,000
(35) 공정거래위원회 (Fair Trade Commission)	485,442,000	0	0	485,442,000
(36) 금융위원회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77,829,000	0	0	77,829,000
(37)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816,000	0	0	816,000
(38) 원자력안전위원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818,000	0	0	818,000
(39) 국세청 (National Tax Adm.)	1,061,740,000	0	0	1,061,740,000
(40) 관세청 (Customs Service)	44,661,000	0	0	44,661,000
(42) 통계청 (Statistics Korea)	3,250,000	0	0	3,250,000
(43) 병무청 (Military Manpower Adm.)	206,000	0	0	206,000
(44) 방위사업청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182,422,000	0	0	182,422,000
(45) 경찰청 (National Police Adm.)	834,830,000	0	0	834,830,000
(47) 문화재청 (Cultural Heritage Adm.)	40,459,000	0	0	40,459,000
(48) 농촌진흥청 (Rural Development Adm.)	9,844,000	0	0	9,844,000
(49) 산림청 (Korea Forest Service)	89,994,000	0	0	89,994,000
(51) 기상청 (Meteorological Adm.)	6,887,000	0	0	6,887,000
(53) 새만금개발청 (Saemangeum Development & Investment Agency)	107,000	0	0	107,000
(54) 해양경찰청 (Korea Coast Guard)	4,451,839	0	0	4,451,839
합계(Total)	246,298,120,607	28,712,293,000	0	275,010,413,607

(단위 : 천원)

2018년도 예산 FY 2018 Budget				증감 Change			
일반세입 General Rev.	국 채 Government Bonds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합 계 Total	일반세입 General Rev.	국 채 Government Bonds	차관수입 Foreign Borrowing	합 계 Total
228,000	0	0	228,000	3,000	0	0	3,000
86,714,000	0	0	86,714,000	5,000,000	0	0	5,000,000
8,094,000	0	0	8,094,000	0	0	0	0
131,640,000	0	0	131,640,000	△29,739,000	0	0	△29,739,000
68,243,000	0	0	68,243,000	11,439,000	0	0	11,439,000
57,997,000	0	0	57,997,000	1,290,000	0	0	1,290,000
7,580,000	0	0	7,580,000	82,920	0	0	82,920
88,934,000	0	0	88,934,000	82,259,000	0	0	82,259,000
24,030,000	0	0	24,030,000	766,000	0	0	766,000
17,000	0	0	17,000	△4,000	0	0	△4,000
31,652,000	0	0	31,652,000	469,000	0	0	469,000
512,597,000	0	0	512,597,000	27,155,000	0	0	27,155,000
28,585,000	0	0	28,585,000	△49,244,000	0	0	△49,244,000
841,000	0	0	841,000	25,000	0	0	25,000
1,300,000	0	0	1,300,000	482,000	0	0	482,000
1,197,769,000	0	0	1,197,769,000	136,029,000	0	0	136,029,000
97,775,000	0	0	97,775,000	53,114,000	0	0	53,114,000
2,506,000	0	0	2,506,000	△744,000	0	0	△744,000
208,000	0	0	208,000	2,000	0	0	2,000
255,798,000	0	0	255,798,000	73,376,000	0	0	73,376,000
891,480,000	0	0	891,480,000	56,650,000	0	0	56,650,000
40,459,000	0	0	40,459,000	0	0	0	0
9,451,000	0	0	9,451,000	△393,000	0	0	△393,000
91,242,000	0	0	91,242,000	1,248,000	0	0	1,248,000
9,219,000	0	0	9,219,000	2,332,000	0	0	2,332,000
614,000	0	0	614,000	507,000	0	0	507,000
4,486,950	0	0	4,486,950	35,111	0	0	35,111
272,578,003,896	28839199000	0	301,417,202,896	26,279,883,289	126,906,000	0	26,406,789,289

라. 성질별 세외수입 (Non-Tax Revenues by Objects)

구 분 Classification	2017년도 예산 FY 2017 Budget
11. 재산수입 (Property Income)	3,296,709
51. 관유물대여료 (Rent From Land & Buildings)	59,524
52. 정부출자수입 (Dividends & Profits)	722,848
53. 전대차관이자수입 (Interest)	114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Others)	2,514,223
12. 경상이전수입 (Current Transfer)	5,855,568
56. 벌금, 몰수금및과태료 (Fine & Confiscation)	3283525
57. 변상금및위약금 (Indemnities & Penalties)	98,207
58. 가산금 (Penalties to Delinquency)	950,203
59. 기타경상이전수입 (Others)	1,523,633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Sales of Goods & Services)	716,279
62. 병원수입(Hospital Income)	11,040
64. 입장료수입(Admission Fee)	2,695
65. 면허료및수수료(License & Commission Fee)	633,437
66. 입학금및수업료(School Entrance & Tuition Fee)	8,868
67. 항공항만및용수수입(Revenues from airport, Harbors & Water)	2,320
68. 실습수입(Revenues from School Experiments)	4,298
69. 잡수입(Other)	53,621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18년도 예산 FY 2018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3,265,763	△30,946	△0.9
67,173	7,649	12.9
904,149	181,301	25.1
8	△106	△93.0
2,294,433	△219,790	△8.7
6,274,480	418,912	7.2
3,598,957	315,432	9.6
140,840	42,633	43.4
1,026,921	76,718	8.1
1,507,762	△15,871	△1.0
856,431	140,152	19.6
11,301	261	2.4
3,876	1,181	43.8
757,004	123,567	19.5
9,182	314	3.5
3,581	1,261	54.4
4,300	2	0.0
67,187	13,566	25.3

구 분 Classification	2017년도 예산 FY 2017 Budget
14. 수입대체경비수입 (Receipts Tied to Expenses)	329,871
51. 관유물대여료 (Sales of Gov't Properties)	925
64. 입장료수입 (Admission Fee)	16,848
65. 면허료및수수료 (License & Commission Fee)	287,435
69. 잡수입 (Other)	24,663
15. 관유물매각대 (Sales Proceeds of Government Owned Properties)	69,377
71. 고정자산매각대 (Sales of Capital Assets)	8,243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Sales of land & Intangible Assets)	61,042
73. 재고자산매각대및유동자산 (Sales of Inventory & Current Assets)	92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Treasury Loan & Sub-Lease Loan)	2,259
75. 융자원금회수 (Collection of Principals A/C' s)	0
77. 전대차관원금회수 (Collection of Counterpart Sub-Loan)	2,259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Borrowing & Excess Fund)	64,311
84. 유가증권매각대 (Sales of State-holding Stocks)	64,311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Trust from Other & Others from Other A/C)	29,531,040
91. 전입금 (Transfer from Gen. A/C)	664,347
92. 예탁원금회수 (Collection of deposit)	154,400
94. 예수금 (Collection of Trust Fund)	28,712,293
합계 (Total)	39,865,414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18년도 예산 FY 2018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345,557	15,686	4.8
0	△925	△100.0
15,468	△1,380	△8.2
304,745	17,310	6.0
25,344	681	2.8
77,525	8,148	11.7
14,907	6,664	80.8
62,456	1,414	2.3
162	70	76.1
2,498	239	10.6
196	196	순증
2,302	43	1.9
68,635	4,324	6.7
68,635	4,324	6.7
29,710,214	179,174	0.6
718,456	54,109	8.1
152,559	△1,841	△1.2
28,839,199	126,906	0.4
40,601,103	735,689	1.8

2-2 세출예산 (Expenditure Budget)

가. 총괄표

구 분 Classification	2017년도 본예산 FY 2017 Main Budget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1. 일반·지방행정 (General & Local Administration)	59,703,164	21.7
2. 공공질서및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16,888,224	6.1
3. 통일 · 외교 (National Unification & Foreign Affairs)	2,716,074	1.0
4. 국방 (National Defense)	40,554,778	14.7
5. 교육 (Education)	57,107,212	20.8
6. 문화및관광 (Culture & Tourism)	2,797,723	1.0
7. 환경 (Environmental Protection)	3,396,916	1.2
8. 사회복지 (Social Welfare)	39,721,329	14.4
9. 보건 (Health)	6,954,313	2.5
10. 농림수산 (Agriculture, Forestry, Maritime Affairs & Fisheries)	7,701,205	2.8
11. 산업 · 중소기업및에너지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Energy)	5,593,630	2.0
12. 교통및물류 (Traffic and Physical Distribution)	17,250,158	6.3
13. 통신 (Communication)	349,043	0.1
14. 국토및지역개발 (National Land & Regional Development)	5,128,634	1.9
15. 과학기술 (Science & Technology)	6,148,011	2.2
16. 예비비 (Reserve Funds)	3,000,000	1.1
합 계 (Total)	275,010,414	100.0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17년도 추경예산 FY 2017 Supplementary Budget		2018년도 예산 FY 2018 Budget		2017년도 본예산 대비 증감 Change		2017년도 추경예산 대비 증감 Change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63,948,073	22.4	64,300,247	21.3	4,597,083	7.7	352,174	0.6
16,979,594	6.0	17,837,940	5.9	949,716	5.6	858,346	5.1
2,716,074	1.0	2,608,207	0.9	△107,867	△4.0	△107,867	△4.0
40,555,095	14.2	43,379,767	14.4	2,824,989	7.0	2,824,672	7.0
59,055,712	20.7	63,968,280	21.2	6,861,068	12.0	4,912,568	8.3
2,847,146	1.0	2,896,961	1.0	99,238	3.5	49,815	1.7
3,535,101	1.2	3,561,067	1.2	164,151	4.8	25,966	0.7
40,779,820	14.3	47,864,692	15.9	8,143,363	20.5	7,084,872	17.4
6,955,157	2.4	7,462,080	2.5	507,767	7.3	506,923	7.3
8,444,803	3.0	8,920,821	3.0	1,219,616	15.8	476,018	5.6
6,949,868	2.4	5,911,192	2.0	317,562	5.7	△1,038,676	△14.9
17,332,302	6.1	18,734,746	6.2	1,484,588	8.6	1,402,444	8.1
349,043	0.1	346,243	0.1	△2,800	△0.8	△2,800	△0.8
5,336,552	1.9	4,391,889	1.5	△736,745	△14.4	△944,663	△17.7
6,160,693	2.2	6,233,071	2.1	85,060	1.4	72,378	1.2
3,000,000	1.1	3,000,000	1.0	0	0	0	0
284,945,033	100.0	301,417,203	100.0	26,406,789	9.6	16,472,170	5.8

나. 소관별 세출예산 (Expenditure Budget by Agencies)

구 분 Classification	2017년도 예산 FY 2017 Budget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Office of the President & Office of National Security)	88,063
2. 대통령경호처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Republic Of Korea)	91,333
3. 국회 (National Assembly)	574,269
4. 대법원 (Supreme Court)	1,481,729
5. 헌법재판소 (The Constitutional Court)	42,736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entral Election Management Commission)	561,499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27,326
8. 감사원 (Board of Audit & Inspection)	125,187
9. 국가정보원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493,084
10.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Prime Minister's Office)	516,662
11.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15,942,295
• 예비비(Contingency)	3,000,000
• 일반경비(General Adm.)	12,942,295
12.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57,003,831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6,262,130
14.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223,985
15. 통일부 (Ministry of National Unification)	464,762
16.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3,235,561
17.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8,137,698
18. 행정안전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42,865,473
19.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2,087,636
20.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4,981,454
21. 산업통상자원부(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2,732,630
22. 보건복지부 (Ministry for Health & Welfare)	33,756,155
23.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3,229,171
24.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135,164
25.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308,755
26.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19,099,814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18년도 예산 FY 2018 Budget	증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89,868	1,805	2.0
89,485	△1,848	△2.0
605,161	30,892	5.4
1,552,424	70,695	4.8
45,445	2,709	6.3
406,723	△154,776	△27.6
29,978	2,652	9.7
129,690	4,503	3.6
463,054	△30,030	△6.1
546,050	29,388	5.7
14,702,584	△1,239,711	△7.8
3,000,000	0	0
11,702,584	△1,239,711	△9.6
63,872,934	6,869,103	12.1
6,325,995	63,865	1.0
2,270,731	46,746	2.1
307,498	△157,264	△33.8
3,554,610	319,049	9.9
29,637,827	1,500,129	5.3
48,110,634	5,245,161	12.2
2,172,951	85,315	4.1
6,100,224	1,118,770	22.5
2,747,334	14,704	0.5
37,477,611	3,721,456	11.0
3,388,644	159,473	4.9
5,938,798	3,803,634	178.1
327,254	18,499	6.0
20,597,961	1,498,147	7.8

구 분 Classification	2017년도 예산 FY 2017 Budget
27. 해양수산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721,817
28. 중소벤처기업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2,754,541
29. 국가보훈처 (Ministry of Patriots & Veterans Affairs)	4,777,760
30. 인사혁신처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3,526,637
31. 법제처 (Ministry of Legislation)	32,215
32. 식품의약품안전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444,265
33.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9,289
34.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54,528
35. 공정거래위원회 (Fair Trade Commission)	112,058
36. 금융위원회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1,953,414
37.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73,685
38. 원자력안전위원회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94,314
39. 국세청 (National Tax Adm.)	1,610,207
40. 관세청 (Customs Service)	512,859
42. 통계청 (Statistics Korea)	285,595
43. 병무청 (Military Manpower Adm.)	220,129
44. 방위사업청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12,196,951
45. 경찰청 (National Police Adm.)	10,065,079
46.소방청 (National Fire Agency)	176,736
47. 문화재청 (Cultural Heritage Adm.)	644,776
48. 농촌진흥청 (Rural Development Adm.)	774,906
49. 산림청 (Korea Forest Service)	1,540,878
51. 기상청 (Meteorological Adm.)	385,276
5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Multi 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agency)	203,973
53. 새만금개발청 (Saemangeum Development & Investment Agency)	117,031
54. 해양경찰청 (Korea Coast Guard)	1,233,092
합 계 (Total)	275,010,414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18년도 예산 FY 2018 Budget	증 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2,527,813	△194,004	△7.1
3,049,214	294,673	10.7
5,318,615	540,855	11.3
3,634,376	107,739	3.1
33,258	1,043	3.2
467,219	22,954	5.2
31,412	2,123	7.2
55,450	922	1.7
121,445	9,387	8.4
2,376,906	423,492	21.7
76,821	3,136	4.3
99,114	4,800	5.1
1,678,045	67,838	4.2
539,007	26,148	5.1
299,569	13,974	4.9
221,648	1,519	0.7
13,520,292	1,323,341	10.8
10,500,638	435,559	4.3
168,809	△7,927	△4.5
659,382	14,606	2.3
797,150	22,244	2.9
1,589,920	49,042	3.2
397,899	12,623	3.3
272,945	68,972	33.8
220,047	103,016	88.0
1,268,744	35,652	2.9
301,417,203	26,406,789	9.6

다. 기능별 세출예산(Expenditure Budget by Function)

기 능 Function	2017년도 예산 FY 2017 Budget	
	금 액 Amount	구 성 비(%) Composition
1. 일반 · 지방행정 (General & Local Administration)	59,703,164	21.7
1) 입법및선거관리 (Legislation & Election Administration)	1,135,768	0.4
2) 국정운영 (National Administration)	518,762	0.2
3) 지방행정 · 재정지원 (Support for Local Administration & Finance)	41,003,480	14.9
4) 재정 · 금융 (Budget & Finance)	14,281,287	5.2
5) 정부자원관리 (Management of Government Resources)	854,506	0.3
6) 일반행정 (General Administration)	1,909,361	0.7
2. 공공질서 및 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16,888,224	6.1
1) 법원 및 헌재 (Law Court & Constitutional Court)	1,524,465	0.6
2) 법무 및 검찰 (Justice & Prosecution)	3,235,561	1.2
3) 경찰 (Police)	10,105,196	3.7
4) 해경 (Maritime Police)	1,181,944	0.4
5) 재난관리 (Disaster Management)	841,058	0.3
3. 통일 · 외교 (National Unification & Foreign Affairs)	2,716,074	1.0
1) 통일 (National Unification)	492,089	0.2
2) 외교 · 통상 (Foreign Affairs & Trade)	2,223,985	0.8
4. 국방 (National Defense)	40,554,778	14.7
1) 병력운영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17,146,448	6.2
2) 전력유지 (Maintenance of Military Force)	10,991,250	4.0
3) 방위력개선 (National Defense Improvement)	12,196,951	4.4
4) 병무행정 (Military Affairs Administration)	220,129	0.1
5. 교육 (Education)	57,107,212	20.8
1) 유아 및 초 · 중등교육 (Pre/Primary/Secondary School Education)	47,149,426	17.1
2) 고등교육 (College & University Education)	9,541,538	3.5
3) 평생 · 직업교육 (Lifelong & Vocational Education)	305,286	0.1
4) 교육일반 (General Education)	110,962	0.0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18년도 예산 FY 2018 Budget		증감 Change	
금 액 Amount	구 성 비(%) Composition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64,300,247	21.3	4,597,084	7.7
1,011,883	0.3	△123,885	△10.9
548,141	0.2	29,379	5.7
46,194,129	15.3	5,190,649	12.7
13,826,350	4.6	△454,937	△3.2
748,201	0.2	△106,305	△12.4
1,971,543	0.7	62,181	3.3
17,837,940	5.9	949,716	5.6
1,597,869	0.5	73,404	4.8
3,554,610	1.2	319,049	9.9
10,511,707	3.5	406,512	4.0
1,245,356	0.4	63,412	5.4
928,398	0.3	87,340	10.4
2,608,207	0.9	△107,867	△4.0
337,476	0.1	△154,613	△31.4
2,270,731	0.8	46,746	2.1
43,379,767	14.4	2,824,989	7.0
18,400,849	6.1	1,254,402	7.3
11,236,978	3.7	245,728	2.2
13,520,292	4.5	1,323,341	10.8
221,648	0.1	1,519	0.7
63,968,280	21.2	6,861,069	12.0
53,716,467	17.8	6,567,041	13.9
9,822,056	3.3	280,518	2.9
303,258	0.1	△2,028	△0.7
126,499	0.0	15,537	14.0

기 능 Function	2017년도 예산 FY 2017 Budget	
	금 액 Amount	구 성 비(%) Composition
6. 문화 및 관광 (Culture & Tourism)	2,797,723	1.0
1) 문화예술 (Culture & Arts)	1,866,831	0.7
2) 관광 (Tourism)	4,683	0.0
3) 체육 (Sports)	2,979	0.0
4) 문화재 (Cultural Properties)	644,776	0.2
5) 문화 및 관광일반 (General Culture & Tourism)	278,453	0.1
7. 환경 (Environmental Protection)	3,396,916	1.2
1) 해양환경 (Marine Environment)	167,745	0.1
2) 환경일반 (General Environment)	3,229,171	1.2
8. 사회복지 (Social Welfare)	39,721,329	14.4
1) 기초생활보장 (Basic Livelihood Guarantee)	10,490,412	3.8
2) 취약계층지원 (Support for the Underprivileged)	2,298,829	0.8
3) 공적연금 (Public Pension)	3,348,571	1.2
4) 보육 · 가족및여성 (Childcare, Family & Women)	5,629,505	2.0
5) 노인 · 청소년 (The Aged & Youth)	9,628,030	3.5
6) 노동 (Labor)	2,135,164	0.8
7) 보훈 (Patriots & Veterans Affairs)	4,777,760	1.7
8) 주택 (Housing)	836,644	0.3
9) 사회복지일반 (General Social Welfare)	576,414	0.2
9. 보건 (Health)	6,954,313	2.5
1) 보건의료 (Healthcare)	936,828	0.3
2)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5,587,527	2.0
3) 식품의약안전 (Food & Drug Safety)	429,958	0.2
10. 농림수산 (Agriculture, Forestry, Maritime Affairs & Fisheries)	7,701,205	2.8
1) 농업 · 농촌 (Agriculture & Farming Villages)	5,770,668	2.1
2) 임업 · 산촌 (Forestry & Mountain Villages)	1,540,878	0.6
3) 수산 · 어촌 (Fisheries & Fishing Villages)	389,660	0.1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18년도 예산 FY 2018 Budget		증감 Change	
금 액 Amount	구 성 비(%) Composition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2,896,961	1.0	99,239	3.5
1,936,882	0.6	70,051	3.8
4,986	0.0	303	6.5
3,040	0.0	61	2.0
659,382	0.2	14,606	2.3
292,671	0.1	14,218	5.1
3,561,067	1.2	164,151	4.8
172,423	0.1	4,678	2.8
3,388,644	1.1	159,473	4.9
47864692	15.9	8,143,362	20.5
11,314,693	3.8	824,281	7.9
2,488,252	0.8	189,423	8.2
3,451,675	1.1	103,104	3.1
6,497,886	2.2	868,381	15.4
10,938,754	3.6	1,310,724	13.6
5,938,798	2.0	3,803,634	178.1
5,318,615	1.8	540,854	11.3
1,057,262	0.4	220,618	26.4
858,757	0.3	282,342	49.0
7,462,080	2.5	507,767	7.3
1,024,566	0.3	87,738	9.4
5,970,295	2.0	382,768	6.9
467,219	0.2	37,261	8.7
8,920,821	3.0	1,219,616	15.8
6,897,374	2.3	1,126,706	19.5
1,589,920	0.5	49,042	3.2
433,528	0.1	43,868	11.3

기 능 Function	2017년도 예산 FY 2017 Budget	
	금 액 Amount	구 성 비(%) Composition
11. 산업 · 중소기업 및 에너지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Energy)	5,593,630	2.0
1) 산업금융지원 (Support for Industry Finance)	30,000	0.0
2) 산업기술지원 (Support for Industrial Technology)	730,208	0.3
3) 무역및투자유치 (Trade & Investment Inducement)	566,142	0.2
4) 산업진흥 · 고도화 (Promotion & Development of Industry)	2,974,252	1.1
5) 산업 · 중소기업일반 (General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1,293,029	0.5
12. 교통및물류 (Traffic and Physical Distribution)	17,250,158	6.3
1) 도로 (National Road)	7,427,053	2.7
2) 철도 (Railroad)	6,716,359	2.4
3) 도시철도 (City Railroad)	188,830	0.1
4) 해운 · 항만 (Marine Transportation & Ports)	1,371,351	0.5
5) 항공 · 공항 (Aviation & Airport)	14,447	0.0
6) 물류등기타 (Distribution & Others)	1,532,118	0.6
13. 통신 (Communication)	349,043	0.1
1) 방송통신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349,043	0.1
14. 국토및지역개발 (National Land & Regional Development)	5,128,634	1.9
1) 수자원 (Water Resources)	1,810,776	0.7
2) 지역및도시 (Region & City)	3,290,263	1.2
3) 산업단지 (Industrial Complex)	27,595	0.0
15. 과학기술 (Science & Technology)	6,148,011	2.2
1) 기술개발 (Technology Development)	2,470,108	0.9
2) 과학기술연구지원 (Support for Science & Technology Research)	3,118,716	1.1
3) 과학기술일반 (General Science & Technology)	559,187	0.2
16. 예비비 (Reserve Funds)	3,000,000	1.1
1) 예비비 (Reserve Funds)	3,000,000	1.1
합 계 (Total)	275,010,414	100.0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18년도 예산 FY 2018 Budget		증감 Change	
금 액 Amount	구성비(%) Composition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5,911,192	2.0	317,562	5.7
40,000	0.0	10,000	33.3
757,920	0.3	27,712	3.8
615,787	0.2	49,645	8.8
2,977,234	1.0	2,982	0.1
1,520,251	0.5	227,222	17.6
18,734,746	6.2	1,484,588	8.6
11,262,845	3.7	3,835,792	51.6
4,433,373	1.5	△2,282,986	△34.0
303,009	0.1	114,179	60.5
1,111,324	0.4	△260,027	△19.0
14,582	0.0	135	0.9
1,609,613	0.5	77,495	5.1
346,243	0.1	△2,801	△0.8
346,243	0.1	△2,801	△0.8
4,391,889	1.5	△736,745	△14.4
1,108,779	0.4	△701,997	△38.8
3,261,260	1.1	△29,003	△0.9
21,850	0.0	△5,745	△20.8
6,233,071	2.1	85,060	1.4
2,515,466	0.8	45,358	1.8
3,139,346	1.0	20,630	0.7
578,259	0.2	19,071	3.4
3,000,000	1.0	0	0
3,000,000	1.0	0	0
301,417,203	100.0	26,406,789	9.6

라. 성질별 세출내역 (Expenditure by Functions)

구 분 Classification	2017년도 예산 FY 2017 Budget
100 인건비 (Personnel Expenses)	32,113,605
110 인건비 (Personnel Expenses)	32,113,605
200 물건비 (Goods Services)	19,247,788
210 운영비 (Office Operation)	15,239,323
220 여비 (Travel Expenses)	612,581
230 특수활동비 (Special Operation Expenses)	893,171
240 업무추진비 (Management Expenses)	183,772
250 직무수행경비 (Work Operation Expenses)	882,062
260 연구용역비 (Research and Service Expenses)	1,436,879
270 안보비(National Security Expenses)	0
300 이전지출 (Current Transfers)	157,132,725
310 보전금 (Compensation)	11,533,162
320 민간이전 (Transfers to Privates)	5,864,399
330 자치단체이전 (Transfers to Local Gov'ts)	117,066,993
340 해외이전 (Transfers to Abroad)	1,245,075
350 일반출연금 (General Funding)	8,348,528
360 연구개발출연금 (Research and Development Funding)	13,074,568
400 자산취득 (Asset Acquisition)	16,848,167
410 건설보상비 (Compensation Cost for Construction & Facilities)	276,095
420 건설비 (Construction & Facilities Assets)	5,185,500
430 유형자산 (Tangible Assets)	10,668,435
440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s)	43,036
450 융자금(Lending)	0
460 출자금 (Investment)	606,400
470 예치금및유가증권매입 (Purchase of Marketable Securities & Deposits)	60,000
490 지분취득비 (Share of Assets)	8,700
500 상환지출 (Repayment of Loans)	8,110,297
510 상환지출 (Repayment of Loans)	8,110,297
600 전출금등 (Transfers)	38,547,976
610 전출금등 (Intra-Gov't Transactions)	38,547,976
700 예비비 및 기타 (Contingency & Others)	3,009,856
710 예비비 및 기타 (Contingency & Others)	3,009,856
합계 (Total)	275,010,414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18년도 예산 FY 2018 Budget	증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34,549,431	2,435,826	7.6
34,549,431	2,435,826	7.6
19,257,052	9,264	0.0
15,300,987	61,664	0.4
592,552	△20,030	△3.3
316,293	△576,877	△64.6
165,168	△18,603	△10.1
935,087	53,025	6.0
1,483,911	47,033	3.3
463,054	463,054	순증
177,619,139	20,486,414	13.0
12,997,175	1,464,014	12.7
9,369,296	3,504,896	59.8
131,636,903	14,569,911	12.4
1,307,161	62,086	5.0
8,814,866	466,337	5.6
13,493,738	419,170	3.2
18,202,562	1,354,395	8.0
190,794	△85,301	△30.9
5,074,607	△110,893	△2.1
11,977,557	1,309,121	12.3
26,399	△16,637	△38.7
0	0	0
905,223	298,823	49.3
0	△60,000	△100.0
27,982	19,282	221.6
8,132,763	22,466	0.3
8,132,763	22,466	0.3
40,653,758	2,105,782	5.5
40,653,758	2,105,782	5.5
3,002,498	△7,359	△0.2
3,002,498	△7,359	△0.2
301,417,203	26,406,789	9.6

마. 2018년도 세출예산 일반회계의 기능별 성질별 분류

구 분 Classification	인건비(100) Personnel Expense					
	계 Total	보수(110-01) Wages	기타직보수(110-02) Wages for Non-Public Officials	상용임금(110-03) Wages for Fixed-Term Contract Employees	일용임금(110-04) Wage for Daily Employees	연가보상비(110-05) Stipends for Non-Used Vacations
1. 일반 · 지방행정 (General & Local Administration)	3,132,651	2,881,631	45,090	133,816	29,774	42,339
2. 공공질서및안전 (Public Order & Safety)	12,426,719	11,824,420	276,198	158,654	6,842	160,604
3. 통일 · 외교 (National Unification & Foreign Affairs)	520,545	359,337	1,770	154,166	3,359	1,913
4. 국방 (National Defense)	13,474,941	13,134,147	18,364	154,530	5,804	162,096
5. 교육 (Education)	1,892,936	1,756,652	7,468	117,992	2,411	8,412
6. 문화및관광 (Culture & Tourism)	462,485	285,600	18,021	150,618	4,280	3,968
7. 환경 (Environmental Protection)	132	0	0	0	132	0
8. 사회복지 (Social Welfare)	741,314	585,724	102,858	36,289	7,882	8,561
9. 보건 (Health)	163,888	124,562	2,364	34,806	207	1,949
10. 농림수산 (Agriculture, Forestry, Maritime Affairs & Fisheries)	762,151	569,514	56,558	86,029	41,866	8,184
11. 산업 · 중소기업 및 에너지 (Industry & Small and Medium Enterprise & Energy)	213,204	193,613	10,336	6,571	203	2,481
12. 교통 및 물류 (Traffic and Physical Distribution)	482,068	418,879	45,812	11,009	315	6,053
13. 통신 (Communication)	92,506	82,336	7,258	1,534	82	1,296
14. 국토 및 지역개발 (National Land & Regional Development)	22,744	17,567	42	4,868	4	263
15. 과학기술 (Science & Technology)	161,147	137,973	5,340	15,424	451	1,960
16. 예비비 (Reserve Funds)	0	0	0	0	0	0
합 계 (Total)	34,549,431	32,371,954	597,480	1,066,305	103,612	410,080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물건비(200) Goods Service	이전지출(300) Current Transfer	자산취득(400) Asset Acquisition	상환지출(500) Repayment of Loans	전출금등(600) Transfers	예비비및기타(700) Contingency & Others	합 계 Total
2,295,665	47,458,400	474,328	8,100,022	2,837,422	1,760	64,300,247
3,118,727	1,290,099	880,207	0	121,563	625	17,837,940
514,783	1,432,763	47,405	12,712	80,000	0	2,608,207
10,196,151	3,331,223	13,551,823	0	2,825,629	0	43,379,767
377,961	60,198,315	682,819	1,180	815,057	12	63,968,280
438,309	1,478,472	365,560	0	152,122	13	2,896,961
19,067	69,206	82,500	1,518	3,388,644	0	3,561,067
535,735	41,917,837	82,352	0	4,587,372	81	47,864,692
270,330	6,693,786	57,091	0	276,985	0	7,462,080
576,031	1,002,724	528,187	0	6,051,722	6	8,920,821
109,888	4,309,457	27,946	0	1,250,697	1	5,911,192
324,712	2,194,789	272,808	17,331	15,443,038	0	18,734,746
79,867	157,022	7,370	0	9,477	0	346,243
193,439	322,373	1,102,342	0	2,750,991	0	4,391,889
206,387	5,762,675	39,823	0	63,039	0	6,233,071
0	0	0	0	0	3,000,000	3,000,000
19,257,052	177,619,139	18,202,562	8,132,763	40,653,758	3,002,498	301,417,203

바. 2018년도 세출예산 일반회계의 성질별 기능별 분류

구 분 Classification	일반 · 지방행정 General & Local Administration	공공질서및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외교 · 통일 Foreign Affairs & National Unification	국 방 National Defense	교 육 Education	문화및관광 Culture & Tourism
100 인건비 (Personnel Expenses)	3,132,651	12,426,719	520,545	13,474,941	1,892,936	462,485
110 보수 (Wages)	2,881,631	11,824,420	359,337	13,134,147	1,756,652	285,600
110 기타직보수 (Wages for non-public Officials)	45,090	276,198	1,770	18,364	7,468	18,021
110 상용임금 (Wages for Fixed-term employees)	133,816	158,654	154,166	154,530	117,992	150,618
110 일용임금 (Daily Wages)	29,774	6,842	3,359	5,804	2,411	4,280
110 연가보상비 (Stipends for non-used vacations)	42,339	160,604	1,913	162,096	8,412	3,968
200 물건비 (Goods Services)	2,295,665	3,118,727	514,783	10,196,151	377,961	438,309
210 운영비 (Office Operation)	1,367,935	2,080,926	427,695	8,996,424	330,618	388,700
220 여비 (Travel Expenses)	175,488	107,727	51,139	153,044	6,753	14,116
230 특수활동비 (Special Operation Expenses)	33,840	126,893	2,922	148,022	0	0
240 업무추진비 (Management Expenses)	40,044	32,789	19,561	51,084	1,297	2,983
250 직무수행경비 (Work Operation Expenses)	120,883	719,941	2,045	44,068	21,639	2,515
260 연구용역비 (Research and Service Expenses)	94,421	50,451	11,421	803,509	17,654	29,995
270 안보비 (National Security Expenses)	463,054	0	0	0	0	0
300 이전지출 (Current Transfers)	47,458,400	1,290,099	1,432,763	3,331,223	60,198,315	1,478,472
310 보전금 (Compensation)	61,561	256,546	65,818	408,918	66,971	13,896
320 민간이전 (Transfers to Privates)	221,878	308,287	100,811	429,914	145,108	877,188
330 자치단체이전 (Transfers to Local Gov't)	46,151,425	551,747	12,004	11,209	53,434,540	490,850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환경 Environmental Protection	사회복지 Social Welfare	보 건 Health	농림수산 Agriculture, Forestry, Maritime Affairs & Fisheries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Industry & Smal and Medium Enterprise & Energy	교통및물류 Traffic and Physical Distribution	통 신 Communication	국토및지역개발 National Land & Regional Development	과학기술 Science & Technology	예 비 비 Reserve Funds	합 계 Total
132	741,314	163,888	762,151	213,204	482,068	92,506	22,744	161,147	0	34,549,431
0	585,724	124,562	569,514	193,613	418,879	82,336	17,567	137,973	0	32,371,954
0	102,858	2,364	56,558	10,336	45,812	7,258	42	5,340	0	597,480
0	36,289	34,806	86,029	6,571	11,009	1,534	4,868	15,424	0	1,066,305
132	7,882	207	41,866	203	315	82	4	451	0	103,612
0	8,561	1,949	8,184	2,481	6,053	1,296	263	1,960	0	410,080
19,067	535,735	270,330	576,031	109,888	324,712	79,867	193,439	206,387	0	19,257,052
6,538	449,335	160,528	491,942	74,380	201,711	64,760	91,104	168,392	0	15,300,987
277	17,065	10,124	22,682	13,006	11,531	2,910	1,234	5,456	0	592,552
0	0	0	0	0	0	3,056	0	1,561	0	316,293
27	5,722	745	2,348	3,184	2,390	769	358	1,869	0	165,168
421	10,785	1,195	3,562	2,185	2,874	898	241	1,833	0	935,087
11,803	52,829	97,739	55,497	17,133	106,207	7,474	100,502	27,276	0	1,483,911
0	0	0	0	0	0	0	0	0	0	463,054
69,206	41,917,837	6,693,786	1,002,724	4,309,457	2,194,789	157,022	322,373	5,762,675	0	177,619,139
10	6,907,584	5,205,158	9,545	821	148	30	5	165	0	12,997,175
34,423	4,264,879	955,230	334,076	952,791	487,277	22,889	186,037	48,506	0	9,369,296
10,269	30,121,338	228,946	366,306	33,166	71,129	0	119,946	34,029	0	131,636,903

구 분 Classification	일반 · 지방행정 General & Local Administration	공공질서및안전 Public Order and Safety	외교 · 통일 Foreign Affairs & National Unification	국 방 National Defense	교 육 Education	문화및관광 Culture & Tourism
340 해외이전 (Transfers to Abroad)	160,067	3,478	469,747	427,489	76,667	4,230
350 일반출연금 (General Funding)	392,841	102,206	784,382	16,118	5,044,539	10,000
360 연구개발출연금 (Research and Development Funding)	470,627	67,835	0	2,037,574	1,430,490	82,308
400 자산취득 (Asset Acquisition)	474,328	880,207	47,405	13,551,823	682,819	365,560
410 건설보상비 (Compensation Cost for Construction & Facilities)	2,782	0	0	36,483	0	19,762
420 건설비 (Construction & Facilities Assets)	87,174	288,120	24,193	2,685,836	570,747	195,717
430 유형자산 (Tangible Assets)	173,059	579,245	23,151	10,828,800	87,339	94,709
440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s)	2,440	12,843	60	704	625	1,372
460 출자금 (Investment)	190,000	0	0	0	15,000	54,000
490 지분취득비 (Share of Assets)	18,874	0	0	0	9,108	0
500 상환지출 (Repayment of Loans)	8,100,022	0	12,712	0	1,180	0
510 상환지출 (Repayment of Loans)	8,100,022	0	12,712	0	1,180	0
600 전출금등 (Transfers)	2,837,422	121,563	80,000	2,825,629	815,057	152,122
610 전출금등 (Intra-Gov't Transactions)	2,837,422	121,563	80,000	2,825,629	815,057	152,122
700 예비비및기타 (Contingency & Others)	1,760	625	0	0	12	13
710 예비비및기타 (Contingency & Others)	1,760	625	0	0	12	13
합계 (Total)	64,300,247	17,837,940	2,608,207	43,379,767	63,968,280	2,896,961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환경 Environmental Protection	사회복지 Social Welfare	보 건 Health	농림수산 Agriculture, Forestry, Maritime Affairs & Fisheries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Industry & Smal and Medium Enterprise & Energy	교통및물류 Traffic and Physical Distribution	통 신 Communication	국토및지역개발 National Land & Regional Development	과학기술 Science & Technology	예 비 비 Reserve Funds	합 계 Total
1,400	31,989	5,528	103,911	3,022	6,279	4,180	730	8,443	0	1,307,161
23,104	588,553	49,122	28,320	438,892	1,055,809	123,231	12,710	145,039	0	8,814,866
0	3,495	249,802	160,566	2,880,765	574,147	6,692	2,945	5,526,492	0	13,493,738
82,500	82,352	57,091	528,187	27,946	272,808	7,370	1,102,342	39,823	0	18,202,562
0	1,082	0	59,189	0	0	0	71,416	80	0	190,794
65,626	31,763	26,653	366,338	21,871	83,734	2,888	600,425	23,521	0	5,074,607
16,874	17,506	30,158	80,662	5,319	17,538	4,332	3,137	15,729	0	11,977,557
0	3,142	280	1,998	756	1,536	150	0	493	0	26,399
0	28,859	0	20,000	0	170,000	0	427,364	0	0	905,223
0	0	0	0	0	0	0	0	0	0	27,982
1,518	0	0	0	0	17,331	0	0	0	0	8,132,763
1,518	0	0	0	0	17,331	0	0	0	0	8,132,763
3,388,644	4,587,372	276,985	6,051,722	1,250,697	15,443,038	9,477	2,750,991	63,039	0	40,653,758
3,388,644	4,587,372	276,985	6,051,722	1,250,697	15,443,038	9,477	2,750,991	63,039	0	40,653,758
0	81	0	6	1	0	0	0	0	3,000,000	3,002,498
0	81	0	6	1	0	0	0	0	3,000,000	3,002,498
3,561,067	47,864,692	7,462,080	8,920,821	5,911,192	18,734,746	346,243	4,391,889	6,233,071	3,000,000	301,417,203

특별회계규모 및 개요
(Special Accounts)

03

회계별 Account	2017년도 본예산 FY 2017 Main Budget
(15) 농어촌구조개선 (Agri. & Fisheries Structure Adjustment S/A)	11,021,800
(17) 교통시설 (Transportation Facilities S/A)	16,091,344
(18) 등기 (Registration S/A)	321,972
(20) 교도작업 (Prison Operation S/A)	102,213
(24) 에너지및자원사업 (Energy & Resources Management S/A)	5,760,417
(25) 환경개선 (Environment Reconstruction S/A)	4,893,015
(29) 우체국보험 (Postal Insurance Service S/A)	1,023,486
(34) 주한미군기지이전 (United States Forces Korea Institution Relocation S/A)	737,755
(3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S/A)	312,537
(36) 국방 · 군사시설이전 (Defense Military Installations Relocation S/A)	305,643
(37) 혁신도시건설 (Construction of Innovation City S/A)	98,715
(38)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Construction of Cultural Hub City of Asia S/A)	71,491
(39) 지역발전 (Regional Development S/A)	9,821,917
(40) 유아교육지원(Early Childhood Education Program S/A)	3,940,881
(51) 양곡관리 (Grain Management S/A)	1,437,799
(52) 책임운영기관 (Agency)	1,024,190
(56) 조달 (Government Supply S/A)	338,879
(57) 우편사업 (Postal Programs S/A)	4,308,123
(58) 우체국예금 (Postal Savings S/A)	3,038,978
총계 (Gross Total of Special Accounts)	64,651,154
순계 (회계간, 계정간거래 제외) (Net Total of Special Accounts)	57,675,926
순계 (계정간거래 제외) (Net Total of Special Accounts)	61,878,334
순계 (일반지출) (Net Total of Special Accounts)	50,230,493

(단위 : 백만원, In Million KRW)

2017년도 추경예산 FY 2017 Supplementary Budget	2018년도 예산 FY 2018 Budget	2017년도 본예산 대비 증감 Change		2017년도 추경예산 대비 증감 Chang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금 액 Amount	증감률(%) Rate
11,021,800	10,580,541	△441,259	△4.0	△441,259	△4.0
16,091,344	18,247,036	2,155,692	13.4	2,155,692	13.4
321,972	364,274	42,302	13.1	42,302	13.1
102,213	129,925	27,712	27.1	27,712	27.1
5,760,417	5,437,207	△323,211	△5.6	△323,211	△5.6
4,893,015	4,786,267	△106,748	△2.2	△106,748	△2.2
1,023,486	992,150	△31,336	△3.1	△31,336	△3.1
737,755	564,081	△173,674	△23.5	△173,674	△23.5
312,537	290,944	△21,593	△6.9	△21,593	△6.9
305,643	567,384	261,741	85.6	261,741	85.6
98,715	255,311	156,596	158.6	156,596	158.6
71,491	71,810	319	0.4	319	0.4
9,821,917	9,889,905	67,988	0.7	67,988	0.7
3,940,881	3,892,717	△48,164	△1.2	△48,164	△1.2
1,437,799	1,758,255	320,456	22.3	320,456	22.3
1,024,190	1,104,088	79,898	7.8	79,898	7.8
338,879	342,035	3,157	0.9	3,157	0.9
4,308,123	4,676,894	368,771	8.6	368,771	8.6
3,038,978	3,278,252	239,274	7.9	239,274	7.9
64,651,154	67,229,074	2,577,920	4.0	2,577,920	4.0
57,675,926	61,044,511	3,368,585	5.8	3,368,585	5.8
61,878,334	64,815,451	2,937,117	4.7	2,937,117	4.7
50,230,493	47,469,334	△2,761,159	△5.5	△2,761,159	△5.5

계속비
(Multiyear Expenses)

04

회계 및 소관	사 업 별	계속비총액	계 속 비 연 부 액			
			2009	2010	2011	2012
	2017 예 산	18,401,694,000	1,171,324,000	1,302,067,000	1,204,496,000	1,636,472,000
	2018 예 산	17,922,986,000	1,171,324,000	1,302,067,000	1,204,496,000	1,636,472,000
교통시설 특별회계 (국토교통부)	1. 지역간선국도5차건설					
	2017 예 산	4,684,337,000	555,520,000	521,890,000	462,839,000	573,097,000
	2018 예 산	4,616,966,000	555,520,000	521,890,000	462,839,000	573,097,000
	2. 물류간선1차건설					
	2017 예 산	3,184,492,000	515,804,000	511,987,000	431,439,000	412,150,000
	2018 예 산	2,980,816,000	515,804,000	511,987,000	431,439,000	412,150,000
	3. 지역간선국도6차건설					
	2017 예 산	2,295,433,000	–	158,190,000	165,218,000	206,538,000
	2018 예 산	2,203,192,000	–	158,190,000	165,218,000	206,538,000
	4. 지역간선국도7차건설					
	2017 예 산	1,821,204,000	–	–	–	304,687,000
	2018 예 산	1,783,455,000	–	–	–	304,687,000
	5. 지역간선국도8차건설					
	2017 예 산	1,520,240,000	–	–	–	–
	2018 예 산	1,545,228,000	–	–	–	–
	6. 익산–대야복선전철					
	2017 예 산	334,792,000	–	–	–	–
	2018 예 산	379,922,000	–	–	–	–

(단위 : 천원)

계속비연부액								
2013	2014	2015	2016	20117	2018	2019	2020	2021
1,862,957,000	1,908,221,000	3,395,868,000	3,018,225,000	1,688,206,000	1,213,858,000	–	–	–
1,862,957,000	1,908,221,000	3,395,868,000	2,821,521,000	1,638,206,000	571,870,000	288,210,000	121,774,000	–
640,925,000	611,395,000	606,144,000	443,687,000	156,997,000	111,843,000	–	–	–
640,925,000	611,395,000	606,144,000	453,442,000	156,997,000	34,717,000	–	–	–
445,208,000	298,512,000	164,808,000	131,447,000	76,247,000	196,890,000	–	–	–
445,208,000	298,512,000	164,808,000	113,464,000	76,247,000	11,197,000	–	–	–
271,545,000	340,915,000	368,051,000	416,190,000	184,077,000	184,709,000	–	–	–
271,545,000	340,915,000	368,051,000	351,326,000	184,077,000	119,220,000	38,112,000	–	–
392,910,000	322,443,000	252,102,000	337,191,000	163,448,000	48,423,000	–	–	–
392,910,000	322,443,000	252,102,000	269,578,000	163,448,000	67,208,000	11,079,000	–	–
37,369,000	229,956,000	302,543,000	344,010,000	321,584,000	284,778,000	–	–	–
37,369,000	229,956,000	302,543,000	323,011,000	321,584,000	213,521,000	117,244,000	–	–
–	–	93,000,000	93,000,000	100,000,000	48,792,000	–	–	–
–	–	93,000,000	79,000,000	80,000,000	14,500,000	56,711,000	56,711,000	–

회계 및 소관	사 업 별	계속비총액	계 속 비 연 부 액			
			2009	2010	2011	2012
교통시설 특별회계 (국토교통부)	7. 군장산단인입철도건설					
	2017 예 산	467,094,000	–	–	–	–
	2018 예 산	494,727,000	–	–	–	–
	8. 울산신항인입철도					
	2017 예 산	188,514,000	–	–	–	–
	2018 예 산	188,500,000	–	–	–	–
	9. 포항영일만신항인입철도					
	2017 예 산	148,253,000	–	–	–	–
	2018 예 산	150,853,000	–	–	–	–
	10. 원주–강릉복선전철					
	2017 예 산	2,618,829,000	–	–	–	–
	2018 예 산	2,416,700,000	–	–	–	–
지역발전 특별회계 (국토교통부)	11. 수원–인천복선전철					
	2017 예 산	1,138,506,000	100,000,000	110,000,000	145,000,000	140,000,000
	2018 예 산	1,162,627,000	100,000,000	110,000,000	145,000,000	140,000,000

(단위 : 천원)

계속비연부액								
2013	2014	2015	2016	20117	2018	2019	2020	2021
–	–	145,400,000	127,400,000	135,000,000	59,294,000	–	–	–
–	–	145,400,000	106,400,000	105,000,000	7,800,000	65,064,000	65,063,000	–
–	–	36,000,000	40,600,000	66,000,000	45,914,000	–	–	–
–	–	36,000,000	40,600,000	66,000,000	45,900,000	–	–	–
–	–	42,000,000	57,300,000	48,953,000	–	–	–	–
–	–	42,000,000	57,300,000	48,953,000	2,600,000	–	–	–
–	–	1,232,000,000	880,700,000	304,000,000	202,129,000	–	–	–
–	–	1,232,000,000	880,700,000	304,000,000	–	–	–	–
75,000,000	105,000,000	153,820,000	146,700,000	131,900,000	31,086,000	–	–	–
75,000,000	105,000,000	153,820,000	146,700,000	131,900,000	55,207,000	–	–	–

명시이월비
(Authorized Carryover Exprenses)

05

(단위 : 천원)

회계 및 소관	사 항	금 액		
		2017예산	2018예산	증 감
		-	-	-

국고채무 부담행위
(Act of Treasury to Bear Liabilities)

06

(단위 : 천원, $)

회계 및 소관	사 항	금 액		
		2017예산	2018예산	증 감
합 계		–	($42,000,000) 47,460,00	($42,000,000) 47,460,000
Ⅰ. 일반회계		–	($42,000,000) 47,460,000	($42,000,000) 47,460,000
1. 기획재정부	소 계	–	($42,000,000) 47,460,000	($42,000,000) 47,460,000
	· 국제금융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	–	($42,000,000) 47,460,000	($42,000,000) 47,460,000
Ⅱ. 특별회계		($–) –	($–) –	($–) –

제 2 장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01 기금요약

02 기금운용규모 및 조성규모

03 기금수입

04 기금지출



2018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18**



기금요약
(Summary of Funds)

01

구 분 Classification	기 금 명 Name of Fund
사회보험성기금 Social Security Fund (6개)	– 고용보험기금 (Employment Insurance Fund) – 공무원연금기금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Fund) – 국민연금기금 (National Pension Fund) – 군인연금기금 (Military Pension Fund)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Korea Teacher Pension Fund)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Industral Worker'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Prevention Fund)
계정성기금 Account Fund (5개)	– 공공자금관리기금 (Public Capital Management Fund) – 공적자금상환기금 (Public Fund Repayment Fund) – 복권기금 (Lottery Fund) – 양곡증권정리기금 (Food Grain Stock Consolidating Fund) – 외국환평형기금 (Foreign Exchange Equalization Fund)
금융성기금 Financial Fund (8개)	– 기술보증기금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Fund)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Credit Guarantee Fund for Farmers and Fishermen)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Saving Encouragement Fund for Property of Agricultural & Fishing Houses)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Korea Infrastructure Credit Guarantee Fund) – 무역보험기금 (Korea Trade Insurance Fund) – 신용보증기금 (Korea Credit Guarantee Fund)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Fund for Redemption of Deposit Insurance Fund Bonds)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Housing Finance Credit Guarantee Fund)
사업성기금 Project Fund (48개)	– 과학기술진흥기금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Fund) – 관광진흥개발기금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 국민건강증진기금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 국민체육진흥기금 (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 – 국유재산관리기금 (Government Properties Management Fund) – 국제교류기금 (Korea Foundation Fund) – 국제질병퇴치기금 (Global Disease Eradication Fund) – 군인복지기금 (Military Welfare Fund) – 근로복지진흥기금 (Labour Welfare Promotion Fund) – 금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Kum River)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Nakdong River) – 남북협력기금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구 분 Classification	기 금 명 Name of Fund
사업성기금 Project Fund (48개)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Fund for Agricultural Marketing & Price Stabilization)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Re–insurance Fund)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Fund for Direct Payments for Agricultural Income Preservation) – 농지관리기금 (Farmland Management Fund) –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문화예술진흥기금 (The Korean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 – 문화재보호기금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Fund)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und) – 방송통신발전기금 (Broadcasting & communications Development Fund)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 보훈기금 (Merit Reward Fund)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Judicial Service Promotion Fund) – 사학진흥기금 (Private School Promotion Fund) –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Fund for Advance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y) – 석면피해구제기금 (Asbestos Damage Relief Fund)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Micro Enterprise & Market Promotion Fund) – 수산발전기금 (Fisheries Development Fund)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Governmental Fund for Patriotic Martyrs & Independence Fighters) – 언론진흥기금 (Korea Press Fund) – 양성평등기금 (Gender Equality Fund) – 영산강 · 섬진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Yeongsan and Sumjin River) – 영화발전기금 (Film Development Fund) – 원자력기금 (Atomic Energy Fund) – 응급의료기금 (Emergency Medical Service Fund) – 임금채권보장기금 (Wage Claim Guarantee Fund) –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Auto Accident Victim Support Fund)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Agricultural Fund for Performance of Free Trade Agreement)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The Fund for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the Disabled) – 전력산업기반기금 (Electric Power Industry Basis Fund) – 정보통신진흥기금 (Information Technology Promotion Fund) – 주택도시기금 (National Housing & Urban Fund)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Small & Medium Enterprise's start–up and Promotion Fund) – 지역신문발전기금 (Local Press Development Fund) – 청소년육성기금 (Youth Supporting Fund) – 축산발전기금 (Livestock Development Fund) – 한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Hangang River)
합 계	총 67개 기금

기금운용규모 및 조성규모
(Size of Fund Management)

02

(단위 : 조원, In Trillion KRW)

구 분 Classification		운용규모 Fund Operation		
		2017년도 FY 2017	2018년도 FY 2018	증감률(%) Rate
운용규모(Total)		615.3	594.9	△3.3
수입	■ 자체수입 (Self-generated Revenues)	155.4	163.0	4.9
	■ 정부내부수입 (Inter-government Revenues)	167.6	120.8	△27.9
	■ 차입금 (Borrowings)	127.0	127.7	0.6
	■ 여유자금회수 등 (Surplus Asset Collection)	165.3	183.4	10.9
지출	■ 사업비 (Project Cost)	115.4	122.1	5.9
	– 사회보험성 (Social Security Fund)	59.1	63.5	7.5
	– 사업성 (Project Fund)	47.6	49.7	4.4
	– 금융성 · 계정성 (Financial/Account Fund)	8.7	8.9	2.4
	■ 기금운영비 (Fund Operation)	2.3	2.4	3.6
	■ 정부내부지출등 (Inter-government Expenditures)	292.3	244.7	△16.3
	■ 여유자금운용 (Surplus Asset Management)	205.2	225.6	9.9

기금수입
(Fund Revenues)

03

(단위 : 억원, In Hundred Million KRW)

기 금 명 Name of Fund	자체수입 Self-generated Revenues	정부내부 수입 Inter-government Revenues	차입금 Borrowings	여유자금 회수 등 Surplus Asset Collection	합 계 Total
고용보험기금 (Employment Insurance Fund)	130,863	902	–	40,930	172,695
공공자금관리기금 (Public Capital Management Fund)	5,865	584,460	1,063,963	2,980	1,657,268
공무원연금기금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Fund)	152,105	40,436	–	38,936	231,477
공적자금상환기금 (Public Fund Repayment Fund)	445	21,901	–	–	22,346
과학기술진흥기금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Fund)	132	1,107	–	791	2,030
관광진흥개발기금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8,860	250	–	3,003	12,113
국민건강증진기금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31,925	5,050	–	3,640	40,615
국민연금기금 (National Pension Fund)	632,127	102	–	548,429	1,180,658
국민체육진흥기금 (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	13,519	742	–	1,503	15,764
국유재산관리기금 (Government Properties Management Fund)	9,333	–	–	1,785	11,118
국제교류기금 (Korea Foundation Fund)	614	311	–	569	1,493
국제질병퇴치기금 (Global Disease Eradication Fund)	417	–	–	435	852
군인복지기금 (Military Welfare Fund)	5,779	–	–	7,945	13,724
군인연금기금 (Military Pension Fund)	6,200	26,076	–	500	32,776
근로복지진흥기금 (Labour Welfare Promotion Fund)	1,306	467	–	1,790	3,563

(단위 : 억원, In Hundred Million KRW)

기 금 명 Name of Fund	자체수입 Self-generated Revenues	정부내부 수입 Inter-government Revenues	차입금 Borrowings	여유자금 회수 등 Surplus Asset Collection	합 계 Total
금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Kum River)	1,233	–	–	23	1,256
기술보증기금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Fund)	10,897	2,114	–	12,817	25,828
낙동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Nakdong River)	2,408	–	–	99	2,507
남북협력기금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1,362	12,509	–	2,312	16,182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Credit Guarantee Fund for Farmers and Fishermen)	3,245	787	–	5,814	9,846
농산물가격안정기금 (Fund for Agricultural Marketing & Price Stabilization)	20,552	–	–	3,187	23,739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Saving Encouragement Fund for Property of Agricultural & Fishing Houses)	415	415	–	17	847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Re-insurance Fund)	1,629	–	–	1,676	3,305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Fund for Direct Payments for Agricultural Income Preservation)	–	10,996	–	23	11,020
농지관리기금 (Farmland Management Fund)	12,415	5,335	–	8,048	25,798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1,678	9,060	–	491	11,229
무역보험기금 (Korea Trade Insurance Fund)	11,556	300	–	24,312	36,168
문화예술진흥기금 (The Korean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	613	2,321	–	546	3,481
문화재보호기금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Fund)	89	924	–	256	1,270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und)	8,837	13,296	–	21,244	43,377
방송통신발전기금 (Broadcasting & communications Development Fund)	5,792	1,028	–	1,210	8,030
범죄피해자보호기금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11	801	–	200	1,011
보훈기금 (Merit Reward Fund)	2,096	1,040	–	2,874	6,009

(단위 : 억원, In Hundred Million KRW)

기 금 명 Name of Fund	자체수입 Self-generated Revenues	정부내부 수입 Inter-government Revenues	차입금 Borrowings	여유자금 회수 등 Surplus Asset Collection	합 계 Total
복권기금 (Lottery Fund)	44,798	5,533	–	3,645	53,97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Korea Teacher Pension Fund)	54,883	8,153	–	53,740	116,775
사법서비스진흥기금 (Judicial Service Promotion Fund)	524	–	–	59	583
사학진흥기금 (Private School Promotion Fund)	1,972	3,461	–	134	5,567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Korea Infrastructure Credit Guarantee Fund)	356	180	–	3,483	4,019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Fund for Advance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y)	1,073	–	–	268	1,34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Industral Worker'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Prevention Fund)	79,655	4,265	–	65,653	149,573
석면피해구제기금 (Asbestos Damage Relief Fund)	137	10	–	191	338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Micro Enterprise & Market Promotion Fund)	6,758	16,003	–	–	22,760
수산발전기금 (Fisheries Development Fund)	6,019	–	–	1,250	7,269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Governmental Fund for Patriotic Martyrs & Independence Fighters)	71	547+	–	628	1,246
신용보증기금 (Korea Credit Guarantee Fund)	23,465	4,964	–	48,732	77,161
양곡증권정리기금 (Food Grain Stock Consolidating Fund)	3	4,866	–	239	5,108
양성평등기금 (Gender Equality Fund)	74	2,141	–	162	2,378
언론진흥기금 (Korea Press Fund)	206	–	–	125	331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Yeongsan and Sumjin River)	854	–	–	18	872
영화발전기금 (Film Development Fund)	605	322	–	2,335	3,262

(단위 : 억원, In Hundred Million KRW)

기 금 명 Name of Fund	자체수입 Self-generated Revenues	정부내부 수입 Inter-government Revenues	차입금 Borrowings	여유자금 회수 등 Surplus Asset Collection	합 계 Total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Fund for Redemption of Deposit Insurance Fund Bonds)	29,510	–	21,000	23,599	74,109
외국환평형기금 (Foreign Exchange Equalization Fund)	14,176	264,000	11,300	533,957	823,433
원자력기금 (Atomic Energy Fund)	3,158	–	–	642	3,799
응급의료기금 (Emergency Medical Service Fund)	1,383	2,020	–	211	3,614
임금채권보장기금 (Wage Claim Guarantee Fund)	4,770	2,659	–	7,056	14,485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Auto Accident Victim Support Fund)	623	–	–	1,722	2,345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Agricultural Fund for Performance of Free Trade Agreement)	3,028	3,295	–	737	7,060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The Fund for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the Disabled)	5,353	29	–	8,523	13,905
전력산업기반기금 (Electric Power Industry Basis Fund)	23,131	6,821	–	7,858	37,810
정보통신진흥기금 (Information Technology Promotion Fund)	5,517	1,014	–	741	7,272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Housing Finance Credit Guarantee Fund)	12,594	80	–	31,882	44,556
주택도시기금 (National Housing & Urban Fund)	165,839	126,441	150,000	295,003	737,283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Small & Medium Enterprise's Start-up and Promotion Fund)	41,605	7,347	30,601	43	79,596
지역신문발전기금 (Local Press Development Fund)	1	80	–	5	86
청소년육성기금 (Youth Fostering Fund)	191	976	–	253	1,419
축산발전기금 (Livestock Development Fund)	8,711	–	–	1,818	10,529
한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Han River)	4,729	–	–	720	5,450

기금지출
(Fund Expenditures)

04

(단위 : 억원, In Hundred Million KRW)

기 금 명 Name of Fund	사업비 Project Cost	기금 운영비 Inter-government Expenditures	정부내부 지출 등 Fund Operation Cost	여유자금 운용 Surplus Asset Management	합 계 Total
고용보험기금 (Employment Insurance Fund)	108,102	1,121	–	63,472	172,695
공공자금관리기금 (Public Capital Management Fund)	1,101	1	1,652,678	3,488	1,657,268
공무원연금기금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Fund)	184,600	796	1,169	44,912	231,477
공적자금상환기금 (Public Fund Repayment Fund)	619	2	21,283	441	22,346
과학기술진흥기금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Fund)	585	7	1,134	304	2,030
관광진흥개발기금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9,594	6	663	1,850	12,113
국민건강증진기금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33,926	1	2,280	4,408	40,615
국민연금기금 (National Pension Fund)	213,751	5,037	–	961,870	1,180,658
국민체육진흥기금 (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	10,564	286	4,000	914	15,764
국유재산관리기금 (Government Properties Management Fund)	9,450	24	–	1,644	11,118
국제교류기금 (Korea Foundation Fund)	451	126	600	316	1,493
국제질병퇴치기금 (Global Disease Eradication Fund)	408	2	–	442	852
군인복지기금 (Military Welfare Fund)	5,736	–	620	7,369	13,724
군인연금기금 (Military Pension Fund)	32,108	3	–	665	32,776

(단위 : 억원, In Hundred Million KRW)

기 금 명 Name of Fund	사업비 Project Cost	기금 운영비 Inter-government Expenditures	정부내부 지출 등 Fund Operation Cost	여유자금 운용 Surplus Asset Management	합 계 Total
근로복지진흥기금 (Labour Welfare Promotion Fund)	1,222	136	552	1,652	3,563
금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Kum River)	1,191	23	–	41	1,256
기술보증기금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Fund)	11,153	1,761	1,950	10,965	25,828
낙동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Nakdong River)	2,371	40	–	96	2,507
남북협력기금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9,593	31	3,752	2,806	16,182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Credit Guarantee Fund for Farmers and Fishermen)	2,161	559	2,500	4,627	9,846
농산물가격안정기금 (Fund for Agricultural Marketing & Price Stabilization)	20,988	509	–	2,242	23,739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Saving Encouragement Fund for Property of Agricultural & Fishing Houses)	814	–	–	33	847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Re-insurance Fund)	100	6	–	3,199	3,305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Fund for Direct Payments for Agricultural Income Preservation)	10,922	86	12	–	11,020
농지관리기금 (Farmland Management Fund)	10,070	762	11,000	3,966	25,798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10,736	162	131	200	11,229
무역보험기금 (Korea Trade Insurance Fund)	7,680	1,137	15	27,336	36,168
문화예술진흥기금 (The Korean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	2,279	183	25	994	3,481
문화재보호기금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Fund)	1,145	1	11	112	1,270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und)	1,519	15	15,000	26,843	43,377
방송통신발전기금 (Broadcasting & communications Development Fund)	6,683	40	1,000	307	8,030
범죄피해자보호기금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880	1	–	131	1,011

(단위 : 억원, In Hundred Million KRW)

기 금 명 Name of Fund	사업비 Project Cost	기금 운영비 Inter-government Expenditures	정부내부 지출 등 Fund Operation Cost	여유자금 운용 Surplus Asset Management	합 계 Total
보훈기금 (Merit Reward Fund)	1,281	11	702	4,016	6,009
복권기금 (Lottery Fund)	31,988	27	20,267	1,694	53,97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Korea Teacher Pension Fund)	41,092	613	399	74,670	116,775
사법서비스진흥기금 (Judicial Service Promotion Fund)	483	1	–	99	583
사학진흥기금 (Private School Promotion Fund)	2,127	88	2,283	1,070	5,567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Korea Infrastructure Credit Guarantee Fund)	187	99	–	3,732	4,019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Fund for Advance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y)	579	12	300	449	1,34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Industrial Worker'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Prevention Fund)	55,654	3,602	4,000	86,318	149,573
석면피해구제기금 (Asbestos Damage Relief Fund)	136	17	–	185	338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Micro Enterprise & Market Promotion Fund)	20,380	341	2,039	–	22,760
수산발전기금 (Fisheries Development Fund)	5,260	13	521	1,475	7,269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Governmental Fund for Patriotic Martyrs & Independence Fighters)	694	1	–	551	1,246
신용보증기금 (Korea Credit Guarantee Fund)	29,148	3,299	–	44,714	77,161
양곡증권정리기금 (Food Grain Stock Consolidating Fund)	–	–	4,862	245	5,108
양성평등기금 (Gender Equality Fund)	2,141	–	137	100	2,378
언론진흥기금 (Korea Press Fund)	229	3	–	100	331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Yeongsan and Sumjin River)	821	15	–	36	872
영화발전기금 (Film Development Fund)	553	106	750	1,853	3,262

(단위 : 억원, In Hundred Million KRW)

기 금 명 Name of Fund	사업비 Project Cost	기금 운영비 Inter-government Expenditures	정부내부 지출 등 Fund Operation Cost	여유자금 운용 Surplus Asset Management	합 계 Total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Fund for Redemption of Deposit Insurance Fund Bonds)	438	42	56,108	17,522	74,109
외국환평형기금 (Foreign Exchange Equalization Fund)	–	7	217,602	605,824	823,433
원자력기금 (Atomic Energy Fund)	2,561	15	–	1,223	3,799
응급의료기금 (Emergency Medical Service Fund)	2,292	2	1,219	101	3,614
임금채권보장기금 (Wage Claim Guarantee Fund)	4,431	128	2,000	7,927	14,485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Auto Accident Victim Support Fund)	613	–	–	1,732	2,345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Agricultural Fund for Performance of Free Trade Agreement)	6,362	44	–	654	7,060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The Fund for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the Disabled)	3,084	589	1,500	8,732	13,905
전력산업기반기금 (Electric Power Industry Basis Fund)	17,807	79	15,000	4,923	37,810
정보통신진흥기금 (Information Technology Promotion Fund)	6,187	212	–	873	7,272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Housing Finance Credit Guarantee Fund)	3,414	750	–	40,392	44,556
주택도시기금 (National Housing & Urban Fund)	213,048	10	359,320	164,905	737,283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Small & Medium Enterprise's Start-up and Promotion Fund)	40,743	1,060	37,793	–	79,596
지역신문발전기금 (Local Press Development Fund)	77	6	–	3	86
청소년육성기금 (Youth Fostering Fund)	1,077	–	32	309	1,419
축산발전기금 (Livestock Development Fund)	9,336	17	–	1,176	10,529
한강수계관리기금 (Fund for Management of Han River)	4,570	88	–	791	5,450

별첨

작성자 및 편집자 명단



2018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SUMMARY OF BUDGET FOR **FY 2018**



작성자 및 편집자 명단



성 명	소속 및 직급	작성 부분
장승대	예산관리과 과장	종합 편집
김만태	예산관리과 사무관	〃
이재훈	예산관리과 사무관	〃
김미래	예산관리과 주무관	〃
나한솔	예산관리과 에디터	〃
조용범	예산총괄과 과장	제3부 중 2018년도 예산, 예산통계
정희철	예산총괄과 서기관	〃
송성일	예산총괄과 사무관	〃
권민상	예산총괄과 주무관	제3부 중 예산통계
천혜린	예산총괄과 주무관	〃
최한경	예산정책과 과장	제2부 중 제1장 2018년도 나라살림 종합, 2018년도 재원배분 방향,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진민규	예산정책과 서기관	〃
김현영	예산정책과 사무관	〃
구정대	예산정책과 사무관	〃
이상희	예산정책과 사무관	〃
이기석	예산정책과 주무관	〃
김성규	예산정책과 주무관	〃
장윤정	예산기준과 과장	제2부 중 중점추진과제(공공 일자리)
이정혁	예산기준과 사무관	〃
김한필	예산기준과 사무관	〃
허승철	기금운용계획과 과장	제3부 중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기금통계
서동진	기금운용계획과 사무관	〃
김진수	기금운용계획과 주무관	〃
신상훈	고용환경예산과 과장	제2부 중 일자리, 환경 분야
김영임	고용환경예산과 사무관	〃

성 명	소속 및 직급	작성 부분
안기용	고용환경예산과 사무관	〃
김영진	고용환경예산과 사무관	〃
최관수	고용환경예산과 사무관	〃
박종환	고용환경예산과 주무관	〃
김도형	고용환경예산과 사무관	〃
박창환	교육예산과 과장	제2부 중 교육 분야
이명진	교육예산과 사무관	〃
김종성	교육예산과 사무관	〃
조현호	교육예산과 사무관	〃
백창현	교육예산과 주무관	〃
오두현	교육예산과 사무관	제2부 중 중점추진과제
조인철	문화예산과 과장	제2부 중 문화 · 체육 · 관광분야
박해정	문화예산과 사무관	〃
김진영	문화예산과 사무관	〃
권기환	문화예산과 사무관	〃
김기문	문화예산과 사무관	〃
최현희	문화예산과 사무관	〃
이정훈	문화예산과 주무관	〃
오상우	국토교통예산과 과장	제2부 중 SOC분야
서영환	국토교통예산과 서기관	〃
이승현	국토교통예산과 사무관	〃
김기정	국토교통예산과 사무관	〃
이주호	국토교통예산과 사무관	〃
박주선	국토교통예산과 주무관	〃
김재영	국토교통예산과 주무관	〃
안상열	산업정보예산과 과장	제2부 중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분야
한주희	산업정보예산과 사무관	〃
정록환	산업정보예산과 사무관	〃
이성한	산업정보예산과 사무관	〃
이재홍	산업정보예산과 사무관	〃
공현철	산업정보예산과 주무관	〃
안승현	산업정보예산과 주무관	〃

성 명	소속 및 직급	작성 부분
육현수	정보화예산팀 팀장	제2부 중 중점추진과제
김성진	정보화예산팀 사무관	〃
강동근	정보화예산팀 사무관	〃
천재호	농림해양예산과 과장	제2부 중 농림 · 수산 · 식품분야
문상호	농림해양예산과 사무관	〃
이기웅	농림해양예산과 사무관	〃
이상윤	연구개발예산과 과장	제2부 중 R&D분야
임대한	연구개발예산과 사무관	〃
조문경	연구개발예산과 사무관	〃
김재원	연구개발예산과 사무관	〃
허성용	연구개발예산과 사무관	〃
오재민	연구개발예산과 사무관	〃
이재석	연구개발예산과 사무관	〃
박준호	복지예산과 과장	제2부 보건 · 복지분야
신명석	복지예산과 사무관	〃
원선재	복지예산과 사무관	〃
김동욱	복지예산과 사무관	〃
김금비	복지예산과 사무관	〃
하정현	복지예산과 사무관	〃
이병연	연금보건예산과 과장	제2부 중 중점추진과제
박상우	연금보건예산과 사무관	〃
최연규	연금보건예산과 사무관	〃
전성헌	연금보건예산과 사무관	〃
전형용	연금보건예산과 사무관	〃
장유석	연금보건예산과 주무관	〃
김위정	지역예산과 과장	제2부 중 중점추진과제
정길태	지역예산과 사무관	〃
김명중	법사예산과 과장	제2부 중 공공질서 · 안전 분야
이원경	법사예산과 사무관	〃
한송이	법사예산과 사무관	〃
손정준	법사예산과 사무관	〃
김명규	행정예산과 과장	제2부 중 외교 · 통일분야, 일반 · 지방행정 분야

성 명	소속 및 직급	작성 부분
이영호	행정예산과 사무관	〃
김지민	행정예산과 사무관	〃
황준우	행정예산과 사무관	〃
이정윤	행정예산과 사무관	〃
장보영	안전예산과 과장	제2부 중 중점추진과제
이승도	안전예산과 사무관	〃
김동진	안전예산과 사무관	〃
변지영	안전예산과 사무관	〃
이상영	국방예산과 과장	제2부 중 국방분야
마용재	국방예산과 사무관	〃
김경국	국방예산과 사무관	〃
김영민	국방예산과 사무관	〃
조윤철	국방예산과 사무관	〃
기도형	국방예산과 주무관	〃
정철교	국방예산과 주무관	〃
박정민	지방재정팀 팀장	제2부 중 중점추진과제
가순봉	지방재정팀 사무관	〃
박재영	지방재정팀 주무관	〃

- 예산개요의 내용 중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관리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개요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또는 재정혁신타운(www.budget.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8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 발간등록번호 11-1051000-000020-10
- 발 행 처 기획재정부
- 발 행 인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관리과
- 발 행 일 2018년 2월
- 연 락 처 Tel. 044-215-7191
  Fax. 044-215-8041

기획재정부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